국민권익위원회가 함께하는
청렴韓세상

정부혁신
보다 나은 권익위

공공재정환수법 및 청렴포털 권역별 설명회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하는 경우

• 부정이익의 환수

• 제재부가금 최대 5배 부과

• 명단공표

국민권익위원회

CONTENTS

Ⅰ. 공공재정환수법 ····· 1

Ⅱ.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 29

Ⅲ. 청렴포털 설명자료 ····· 85

I

공공재정환수법

보다 나은 권익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환수법 교육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CONTENTS
목차

1. 공공재정환수법 제정배경

2. 공공재정환수법 핵심요약

3. 공공재정환수법 주요내용

- 공공재정 · 공공재정지급금
- 부정청구 · 환수 · 제재부가금 · 명단공표
- 부정청구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 · 보상

국민권익위원회

1

보다 나은 권익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CHAPTER 01

공공재정환수법 제정배경

국민권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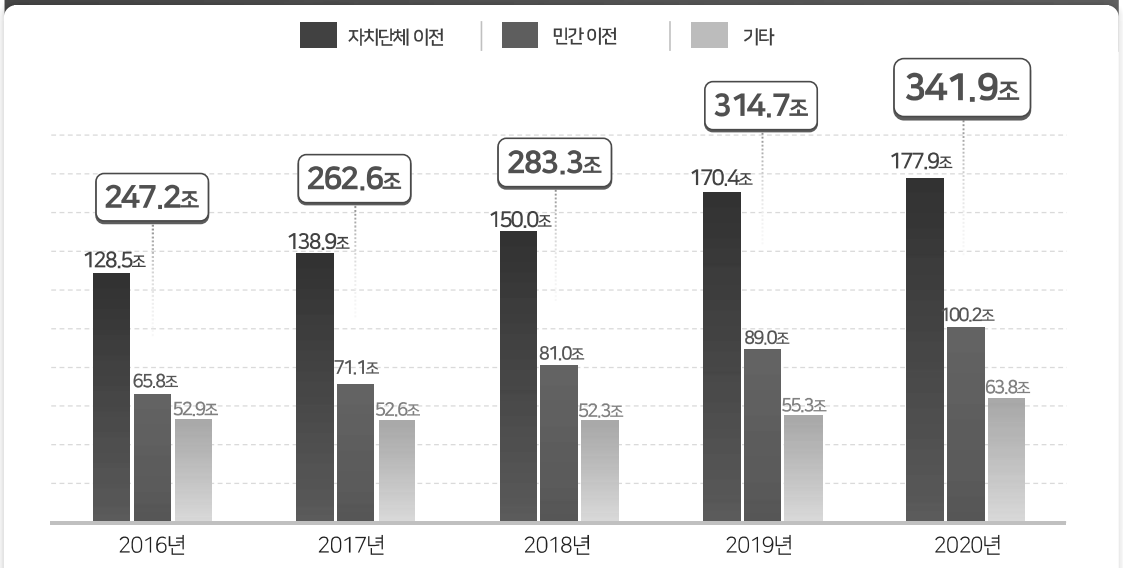
2

Chapter 1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환수법 제정배경

'이전 지출' 추이

* 2020 주요재정통계



* 이전지출? 특정 대상에 대한 무상 현금원조 또는 공공서비스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출

국민권익위원회

3

Chapter 1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환수법 제정배경

MBC NEWS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여전"… 2차 점검서도 71건 적발

일명 '카드깡' 등의 수법으로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빼돌린 화물차와 주유소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8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지자체, 한국석유관리원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 주유소 137곳을 합동 점검한 결과 화물차 59대, 주유소 12곳에서 총 7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사례로는 실제보다 많이 부풀려서 결제하는 '카드깡'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와 보조금 지급대상이 아닌 다른 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은 사례 등으로, 적발된 주유소들은 추가조사를 거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주간동아

애 돌보라고 돈 줬더니, 원장 주머니로 갔다. 유치원 지원금 왜?

유치원들의 정부 지원금 횡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2013~2017년 전국 17곳 시도교육청 유치원 감사'에 따르면 유치원 1878곳에서 총 5951건의 부정수급 및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지원금을 전용해 가족 여행 비용으로 쓰거나, 명품 가방을 산 경우가 적잖았고, 가족 회사와 수의계약을 맺어 지원금을

연합뉴스

'농업 보조금은 눈먼 돈'… 축사 공사비 편취 · 사업비 과다계상

경남도, 농업분야 보조금 불법 감사…91건 적발 · 15억 회수

경남도는 농업 분야 보조금 특정감사를 시행해 모두 91건에 걸쳐 15억3천여만원의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지난 3월 4일부터 5월 24일까지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려고 창원 · 의령 · 창녕 · 하동 · 합천 등 5개 시 · 군을 대상으로 농업 분야 보조금 특정감사를 했다.

이번 감사는 최근 정부에서 생활 적폐 9대 과제 중 사익편취 유형의 생활적폐인 '보조금 부정수급'을 해결과제로 선정한 데 따른 것이다.

또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여전해 전국에서 지속해서 발생하는 농업 분야 보조금 부정수급

그러나, **공공재정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부정청구도 지속적으로 발생…

국민권익위원회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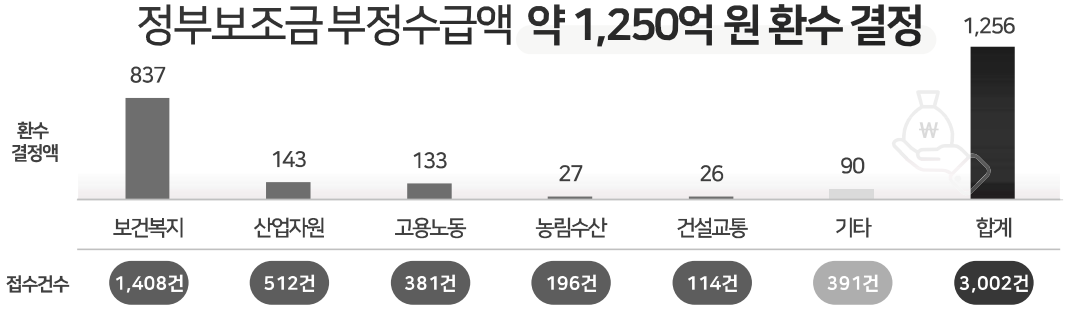
Chapter 1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환수법 제정배경

국민권익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 신고사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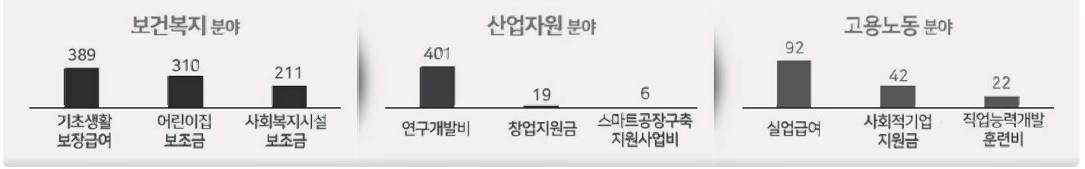
(단위 : 건, 억 원)

'13.10~'20.3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액 약 1,250억 원 환수 결정



유형별 신고사건 현황

(단위 :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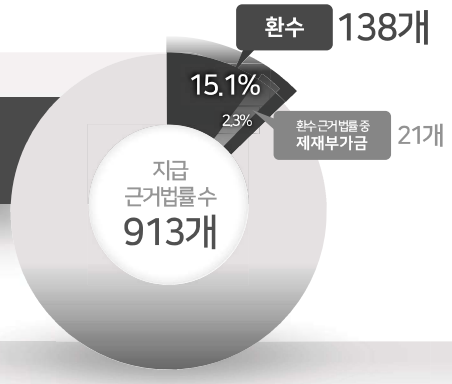
국민권익위원회 5

Chapter 1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환수법 제정배경

현행법률(1,446개, '18.4월 기준) **전수조사 시 환수 근거가 있는 법률은 138개**(15.1%)**에 불과**

- 공공재정 지급 근거 법률 913개
- 환수 근거 법률 138개
- 제재부가금 유사규정 있는 법률 21개



부정청구에 대해 금전적 제재없이 **환수**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환수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 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부정이익**을 **반환** 받아야 함

국민권익위원회 6

Chapter 1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환수법 제정배경

[재정누수 증가에도
행정청의 적극적 대응에 한계]

공공재정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일반법 제정으로
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국민권익위원회 7

보다 나은 권익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CHAPTER 02

공공재정환수법 핵심요약

국민권익위원회 8

Chapter 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환수법 핵심요약

공공재정환수법 =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일반법

공공재정에서 지급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 하면?

제재부가금 부과 — 환수 — 명단공표

국민권익위원회 9

Chapter 2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환수법 핵심요약

공공재정환수법 = 부정이익 환수에 관한 일반법

누구든지 부정청구 행위를 신고하면?

안전하게
신고자 보호

+

세상을 바꾸는 용기
신고자 보상·포상

국민권익위원회 10

보다 나은 권익위

CHAPTER 03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환수법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

Chapter 3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2020. 1. 1. 이후
최초로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부터 적용**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배제

- 01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및 「관세법」 등에 따른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 02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
- 03 벌금·과료, 몰수·추징 및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 04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적용을 받는 사항과 그에 준하는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사항

국민권익위원회 12

Chapter 3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환수법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 우선 적용

1.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중단**
2. 부정이익의 **환수**
3. **제재부가금 부과**
4. 가산금 및 체납처분
5. 부정청구등에 대한 조사
6. 지급 중단, 환수, 제재부가금, 가산금 및 체납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불복절차
7. **명단 공표**
8. 부정청구 신고에 대한 포상금

예시

지역○○협회장 A가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보조금을 부정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

지급근거 법률이 우선 적용
지급근거 법률에 관련 조항이 없으면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국민권익위원회 13

Chapter 3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환수법 주요내용
공공재정환수법
1
공공재정
공공재정지급금
2
부정청구
환수
제재부가금
명단공표
3
부정청구등 신고,
신고자 보호 · 보상
국민권익위원회
14

Chapter 3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 환수 | 제재부가금 | 명단공표
부정청구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 · 보상
공공재정환수법 적용범위
공공재정
공공기관이 조성·취득하거나
관리·처분·사용하는 금품 등
국 · 공립학교
국회 · 법원 · 헌법재판소 등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지방자치단체
국민권익위원회
15

공공재정지급금

법령 ·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 보상금 ·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

법 제2조 제5호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시행령 제2조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고용촉진지원금, 공익직접지불금, 국가장학금, 기초생활급여, 장애수당,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보훈금여금 +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고시하는 금품 등

공공재정지급금 범위에 관한 규정 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중앙행정기관 소관

01. 310-01 손실보상금
02. 310-03 포상금
03. 310-04 기타보전금
04. 320-01 민간경상보조
05. 320-05 이차보전금
06. 320-06 구호 및 교정비
07. 320-07 민간자본보조
08. 330-01 자치단체경상보조
09. 330-03 자치단체자본보조
10. 340-01 해외경상이전
11. 340-03 해외자본이전
12. 350-01 기관운영출연금
13. 350-02 사업출연금
14. 350-03 금융성기금출연금
15. 350-04 민간기금출연금
16. 360-01 연구개발인건비
17. 360-02 연구개발경상경비
18. 360-03 연구개발건축비
19. 360-04 연구개발장비 · 시스템구축비
20. 360-05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

지방자치단체 소관

01. 301 일반보전금
02. 302 이주 및 재해보상금
03. 303-01 포상금
04. 306 출연금
05. 307-01 의료 및 구료비
06.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07. 307-03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08. 307-04 민간행사사업보조
09. 307-08 이차보전금
10. 307-09 운수업계보조금
11.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2.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13.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4. 308-08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5. 308-09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16. 310-01 국외경상이전
17.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18.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19.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0. 403-03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

교육자치단체 소관

01. 310-01 보상금
02. 310-03 포상금등
03. 320-01 민간보조
04. 320-07 이차보전금
05. 320-11 학생 및 학생단체이전경비
06. 340-01 해외경상이전
07. 350 출연금
08. 470-01 투자교육지원사업비
09. 620-01 인건비지원
10. 620-03 목적사업비
11. 620-04 학교환경개선사업비
12. 620-06 학교특별교육지원비
13. 620-08 인건비재정결함보조
14. 620-09 운영비재정결함보조
15. 620-10 사립학교목적사업비
16. 620-11 사립학교시설지원
17. 620-13 사립학교 특별교육지원비
18. 620-15 사립유치원학비지원
19. 620-16 사립학교 근로자인건비지원
20. 620-17 학교운영비(지원금)
21. 620-18 목적사업비(지원금)
22. 620-19 운영비재정결함보조(지원금)
23. 620-20 사립학교목적사업비(지원금)

Q&A 1

Q

시장형 공기업이 자체수익으로 **편성된 예산을 자회사(출자회사) 운영에 투자하는 경우, 그 비용**이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A

아니요.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상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그 지급근거가 있을 것, ② 보조금 · 보상금 ·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것 등의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회사 투자비용의 경우 별도 법령의 근거가 없고, '반대급부'를 전제로 제공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A 2

Q

공기업이 **사내 규정**에 따라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이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A

아니요.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상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그 지급근거가 있을 것, ② 보조금 · 보상금 ·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것 등의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고포상금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가 아닌 자율적으로 제정한 사내규정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이라는 점에서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A 3

Q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기관운영출연금**을 교부 받아 공공기관의 인건비, 여비 등 **기관운영경비로 편성하여 집행하는 경우**도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하나요?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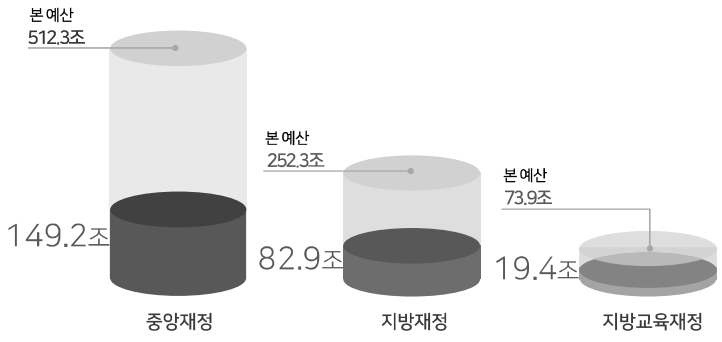
네. 공공재정지급금에 해당합니다.

「공공재정환수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 보상금 · 출연금'으로 정의 됩니다.
따라서 기관운영출연금을 포함한 출연금 전체가 공공재정지급금에 포함됩니다.

Chapter 3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 환수 | 제재부가금 | 명단공표
부정청구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 · 보상

공공재정지급금 추산 규모

법 적용대상 공공재정지급금 규모 추산



국가재정 2020년 본예산 기준 약 251.5조 추산

중앙재정 149.2조 | 지방재정 82.9조 | 지방교육재정 19.4조

2020년 본예산 기준 국가재정 838.5조 중 30.0%에 해당, 보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국고보조금(86.7조)포함

부정청구의 유형

법제2조제6호 부정청구

가목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나목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다목	목적외사용	법령 · 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라목	오지급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부정청구

제재부가금 부과, 명단공표 대상

- 허위 청구
- 과다 청구
- 목적외 사용

오지급

환수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공공재정지급금 집행 권한을 위탁 받은 공직유관단체도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고 제재처분 가능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행정권한을 보유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등

법의 실효성확보 장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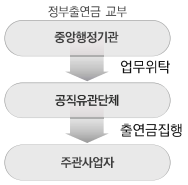
- 부정이익 환수 + 이자포함
- 제재부가금 부과 × 최대 5배
- 고액부정청구등 행위자 명단공표

Q&A 1

Q

공직유관단체도 행정청의 지위를 가질 수 있나요?

*사업 위탁 근거법에 환수 등 제재처분에 대한 위탁근거는 별도로 없는 상황



A

네. 행정청의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2호의 '행정청'이란 공공재정지급금의 집행권한을 가진 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별 법률에 제재처분 등에 관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공공재정지급금 집행 권한을 가지는 공직유관단체도 공공재정환수법 상 행정청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를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에 부합합니다.

Q&A 2

Q

국공립학교도 「공공재정환수법」 상 '부정수익자'가 될 수 있나요?

A

네. 부정수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부정수익자'의 정의에 따르면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외 공공기관은 부정수익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공립학교에서 교육청에서 받은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등 하였다면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 26

Chapter 3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 환수 | 제재부가금 | 명단공표 부정청구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 · 보상

환수

환수 + (지급중단)

확실	불확실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을 때**
공공재정지급금 지급결정 취소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중단
환수하는 경우 부정이익 + 이자 환수	

국민권익위원회 27

환수금액 산정

환수금액 = **부정이익 가액** + **이자**

부정이익 가액

- **허위청구** 제공받은 금액
- **과다청구** (과다하게 청구받은 금액) − (원래받아야하는 금액)
- **목적외사용** 목적과 달리 사용한 금액
- **오지급** 잘못 지급된 금액

금전이 아닌 금품등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이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
"1.8%"

이자 계산기간
부정청구 발생한 달 ~ 환수처분 통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 개월 수

Q&A

Q 카드포인트로 지급되는 구직활동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도 이자를 포함하여 환수하나요?

A **네. 이자를 포함하여 환수합니다.**

카드포인트로 지급하는 공공재정지급금의 경우 포인트 배정 자체가 아닌 포인트를 실제로 사용 · 집행하는 등 청구인에게 현실적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이자 등을 환수합니다.
하지만, 포인트를 배정받고 사용하지 않은 상태인 경우, 포인트를 회수하거나 사용을 중지하는 조치 외에 이자환수는 하지 않습니다.

제재부가금 부과

제재부가금 : 부정이익 환수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부정이익(+이자)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
법 제9조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허위청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x5
과다청구	부정이익 가액의 3배	x3
목적외사용	부정이익 가액의 2배	x2

다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이 인정될 경우 감면할 수 있음

부정수익자의 사소한 과실 50%	행정청의 과실 100%

제재부가금의 감면사유 법 제10조

행정청 사전통지 전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는 경우**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제재부가금 면제	**제재부가금 감경 · 면제**

제재부가금의 적용배제 사유 법 제11조

환수금액(이자 제외)이 100만원 초과하지 않는 경우	환수처분 통지 직전 달부터 과거 3년간 누적 금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최초 지급일부터 과거 3년간 부정청구 적발사실 無
제재부가금 부과 · 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 · 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 등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 부정청구 금액이 10만원 이하

제재부가금 Q&A

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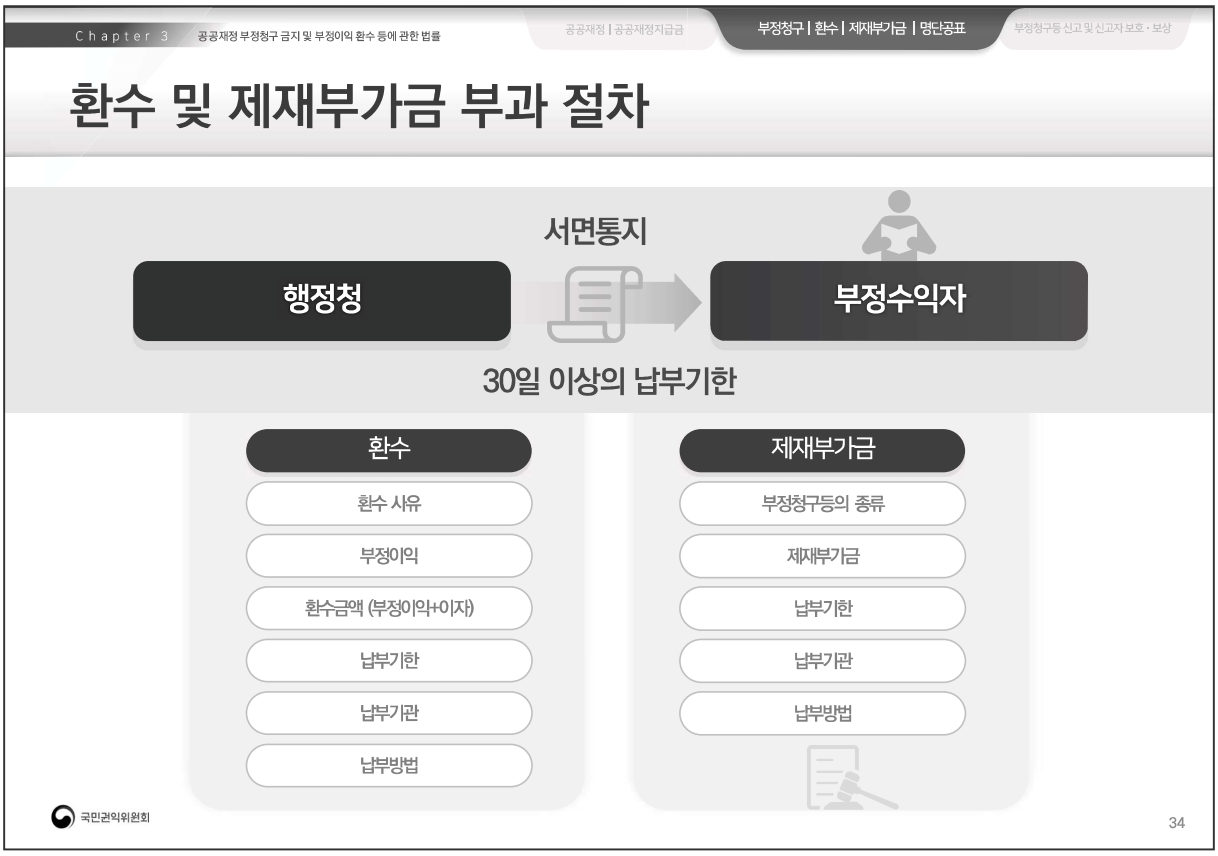
「부마항쟁보상법」, 「민주화보상법」, 「강제동원조사법」상 보상금, 생활지원금 등도 법 제11조 제1항 제2호 하단 '그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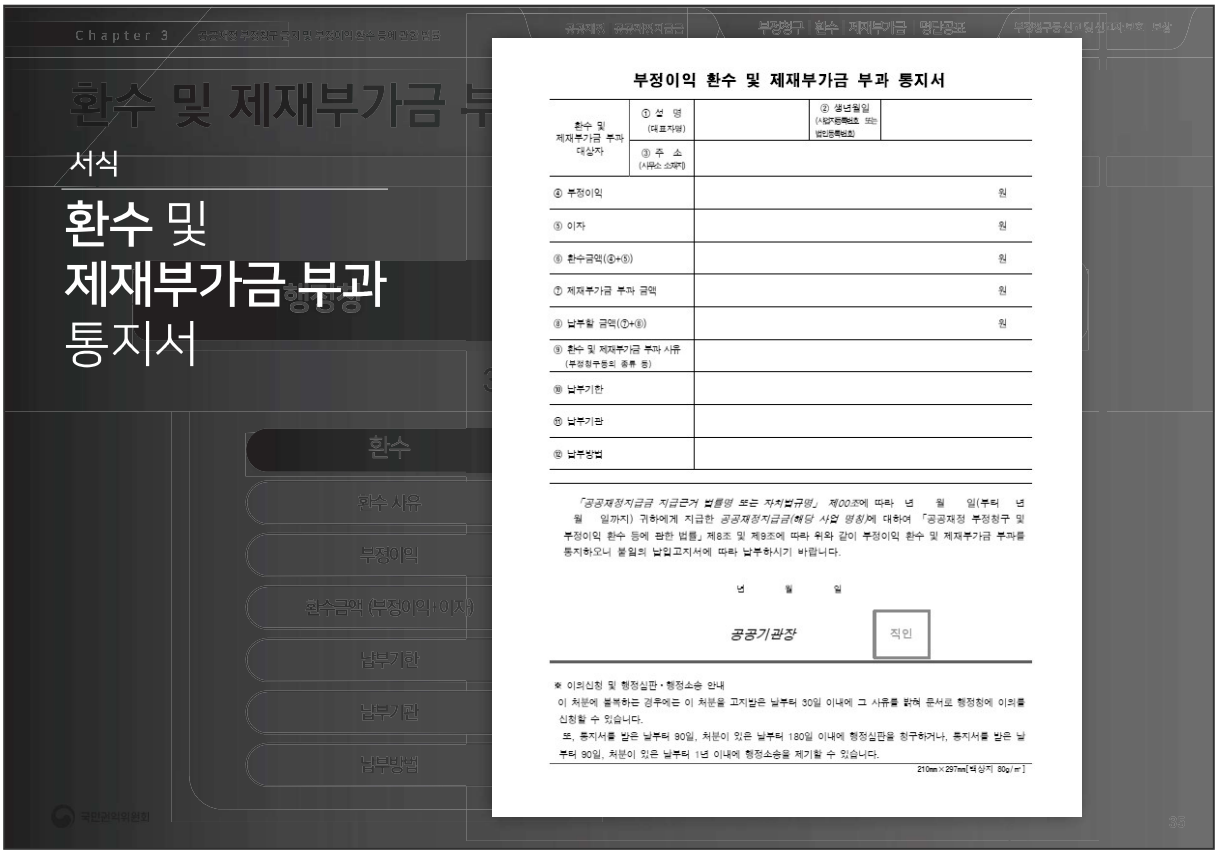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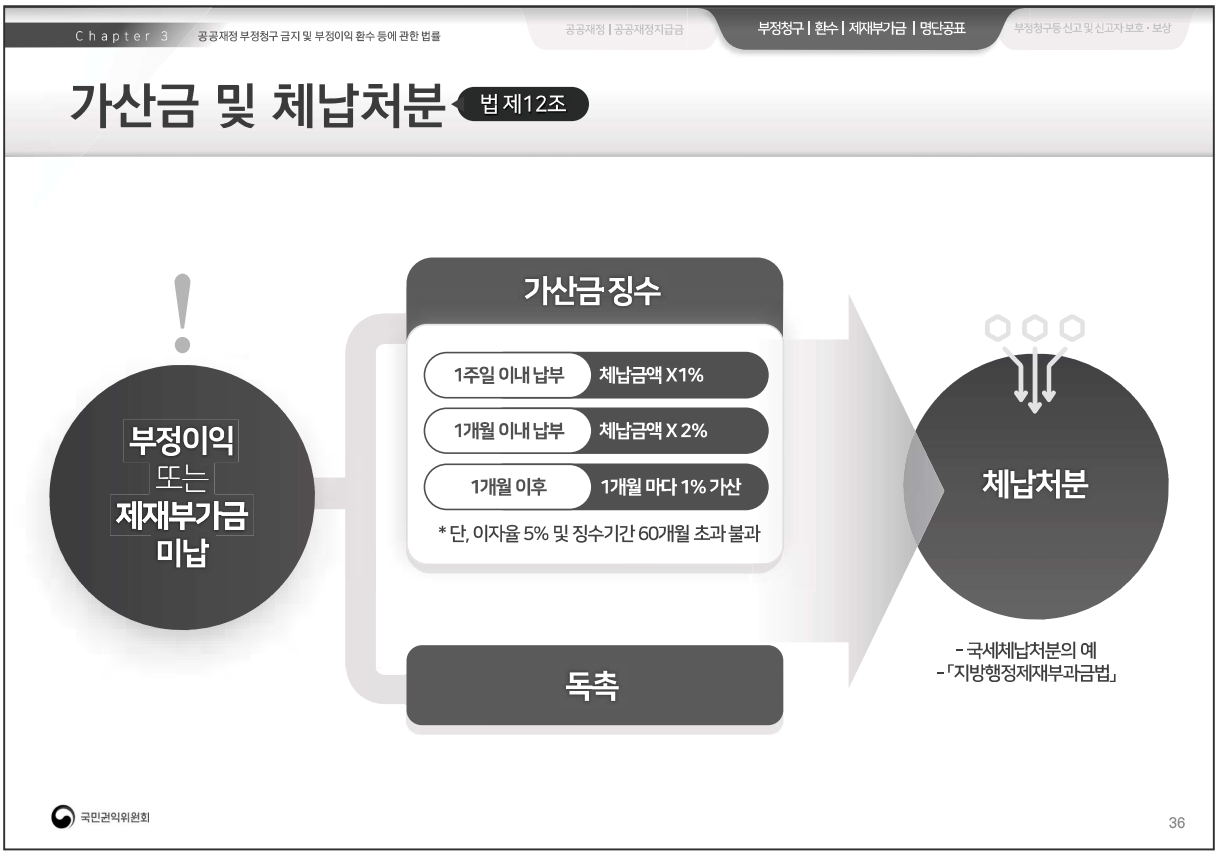
아니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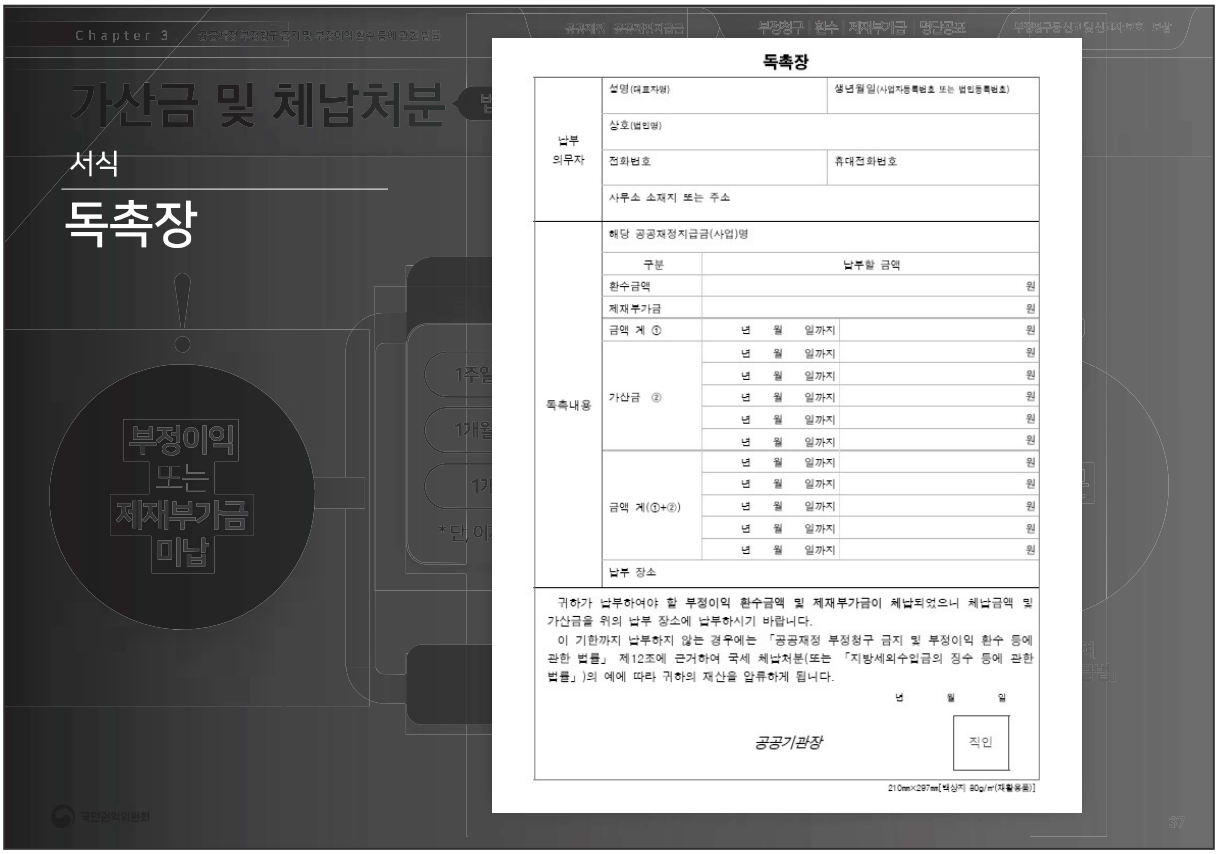
원칙적으로 모든 부정이익에 대해 제재부가금을 부과해야하며, 그 예외도 법률에서 규정한 사유만 제한적으로 인정, 문언적으로도 「독립유공자법」등 열거된 법률에 따른 공공재정지급금 중 명칭상 보훈급여금이 아닌 이와 유사한 성격의 금품*만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참전유공자법」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고엽제법」에 따른 수당 등


Chapter 3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 환수 | 제재부가금 | 명단공표
부정청구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 · 보상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절차
서면통지
행정청
부정수익자
30일 이상의 납부기한
환수
환수 사유
부정이익
환수금액 (부정이익+이자)
납부기한
납부기관
납부방법
제재부가금
부정청구등의 종류
제재부가금
납부기한
납부기관
납부방법
국민권익위원회
34


서식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서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서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
① 성 명 (대표자명)
②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③ 주 소 (사무소 소재지)
④ 부정이익
⑤ 이자
⑥ 환수금액(④+⑤)
⑦ 제재부가금 부과 금액
⑧ 납부할 금액(⑥+⑦)
⑨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사유 (부정청구등의 종류 등)
⑩ 납부기한
⑪ 납부기관
⑫ 납부방법
「공공재정지급금 지급근거 법률명 또는 자치법규명」 제00조에 따라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귀하에게 지급한 공공재정지급금(해당 사업 명칭)에 대하여 「공공재정 부정청구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를 통지하오니 불일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공공기관장
직인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 행정소송 안내
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밝혀 문서로 행정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독촉장

독촉장

납부 의무자	성명(대표자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또는 주소		
독촉내용	해당 공공재정지급금(사업)명		
	구분	납부할 금액	
	환수금액		원
	제재부가금		원
	금액 계 ③	년 월 일까지	원
	가산금 ②	년 월 일까지	원
		년 월 일까지	원
		년 월 일까지	원
		년 월 일까지	원
		년 월 일까지	원
	금액 계(①+②)	년 월 일까지	원
		년 월 일까지	원
		년 월 일까지	원
		년 월 일까지	원
		년 월 일까지	원
	납부 장소		

귀하가 납부하여야 할 부정이익 환수금액 및 제재부가금이 체납되었으니 체납금액 및 가산금을 위의 납부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국세 체납처분(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공공기관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조사 실시 법 제13조

행정청이 부정이익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 징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대상

- 부정수익자
- 부정청구 관련자
  - 부정수익자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등의 실질적인 운영자 또는 대표자
  - 부정청구와 실질적인 관련이 있는 자

조사범위

출석, 진술 및 자료 제출 요구 → 사무소 · 사업장 출입 조사

재산 관계 공부 등의 열람 · 복사나 등본 또는 초본 발급 청구 가능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방법 · 절차 준용

국민권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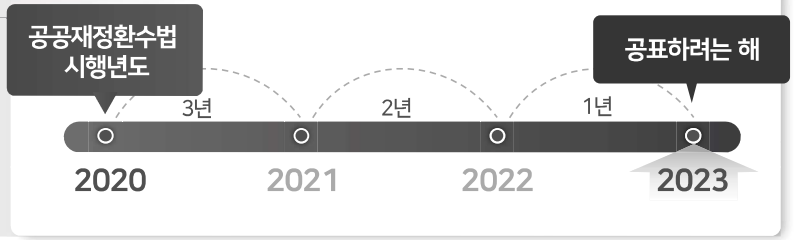
38

명단 공표

01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여 법의 실효성 확보

02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①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2회 이상
② 부정이익 가액의 합계 3천만원 이상

예시
2023년에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을 공표하려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39

명단 공표 절차 등

심의위원회 심의

구성

위원장 포함 9명 이내

위원장은 행정청의 부기관장
위원은 고위공직자 3명 이내, 민간전문가 5명 이내

임기

3년

1차례 연임 가능

소명절차

사전 통지 및 이의신청

* 5일 이상의 기간

명단공표

기간

1년간

미납시 계속 공표

방법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

매년 3월 31일까지

공표내용

성명, 상호, 나이 및 주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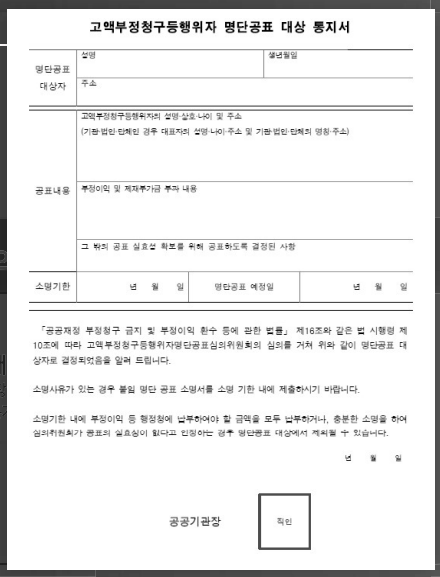
기관·법인·단체는 대표자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 부과 내용

명단 공표 절차 등

서식

명단공표 관련 예시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공표 대상 통지서

명단공표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공표내용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성명·상호·나이 및 주소 (기관·법인·단체인 경우 대표자의 성명·나이·주소 및 기관·법인·단체의 명칭·주소)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 부과 내용 그 밖의 공표 실효성 확보를 위해 공표하도록 결정된 사항		
소명기한	년 월 일	명단공표 예정일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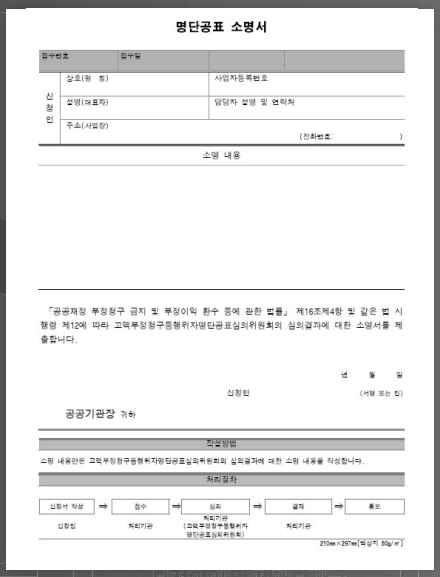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이 명단공표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소명사유가 있는 경우 붙임 명단 공표 소명서를 소명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소명기한 내에 부정이익 등 행정청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모두 납부하거나, 충분한 소명을 하여 심의위원회가 공표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공공기관장 직인



명단공표 소명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상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소명 내용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에 따라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공기관장 귀하

작성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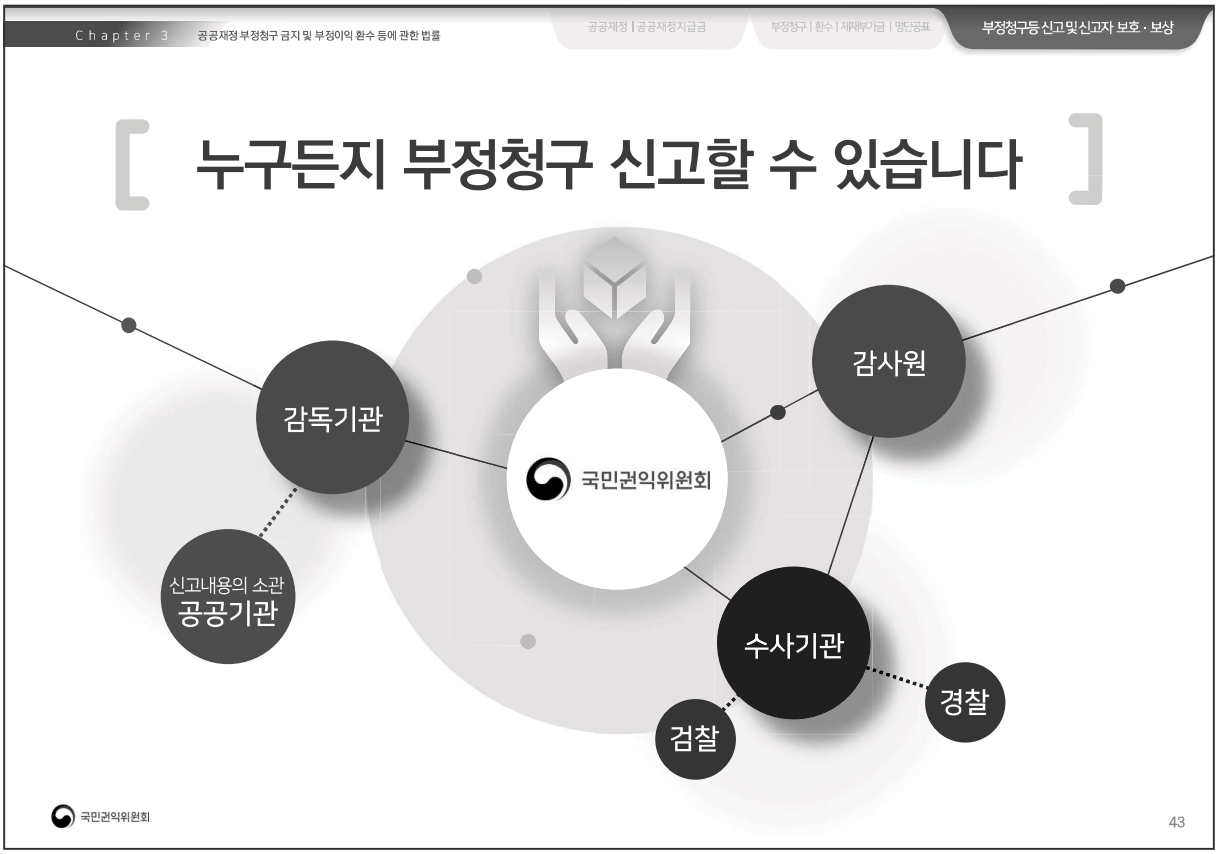
소명 내용란은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소명 내용을 작성합니다.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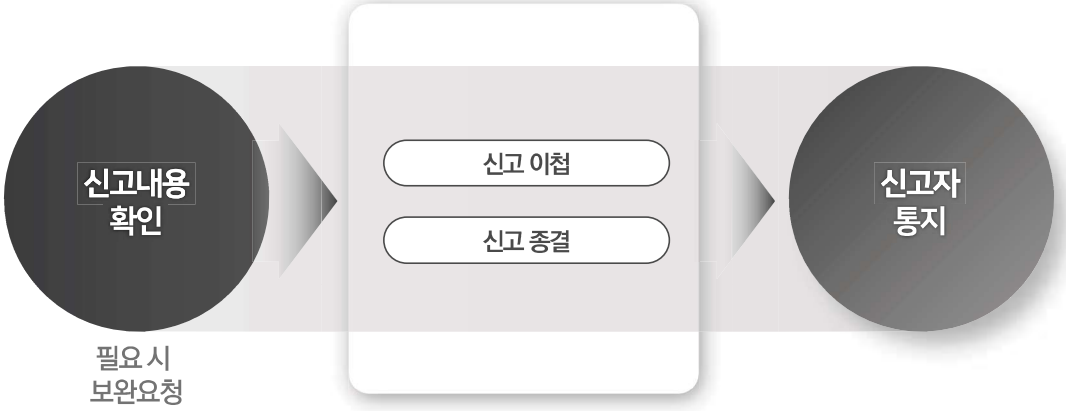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의	⇒	결재	⇒	통보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Chapter 3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 환수 | 제재부가금 | 명단공표
부정청구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 · 보상
기록관리 법 제25조
행정청은 지급 중단,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처분 내역을 기록 · 관리
공공재정지급금 명칭
처분일
처분대상자
처분 사유
처분 금액 및 납부기한
명단공표 방법 등
기타
서식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 · 관리 대장
공공재정환수법 적용 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관리 대장
2020 - 호
공공재정지급금의 명칭
지급근거 법률 및 자치법규
부정수익자
부정청구 유형
□ 허위청구
□ 과다청구
□ 목적외사용
□ 오지급
부정이익 가액
원
제재부가금 부과금액
원
부정청구 요지
1. 지급중단
처분일
처분 사유
기타
2. 환수처분
처분일
환수금액
이자
납부기한
3. 제재부가금
처분일
납부기한
제재부가금 적용배제 및 감면 사유
4. 가산금
처분일
가산금
납부기한
5. 체납처분
처분일
기타
6. 명단공표
심의위원회 의결일
공표방법
공표일
국민권익위원회
42


Chapter 3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 환수 | 제재부가금 | 명단공표
부정청구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 · 보상
누구든지 부정청구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
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내용의 소관 공공기관
수사기관
경찰
검찰
국민권익위원회
43

신고처리 등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부패신고 처리 방법 · 절차 등 준용

신고자보호(신분보장)

누구든지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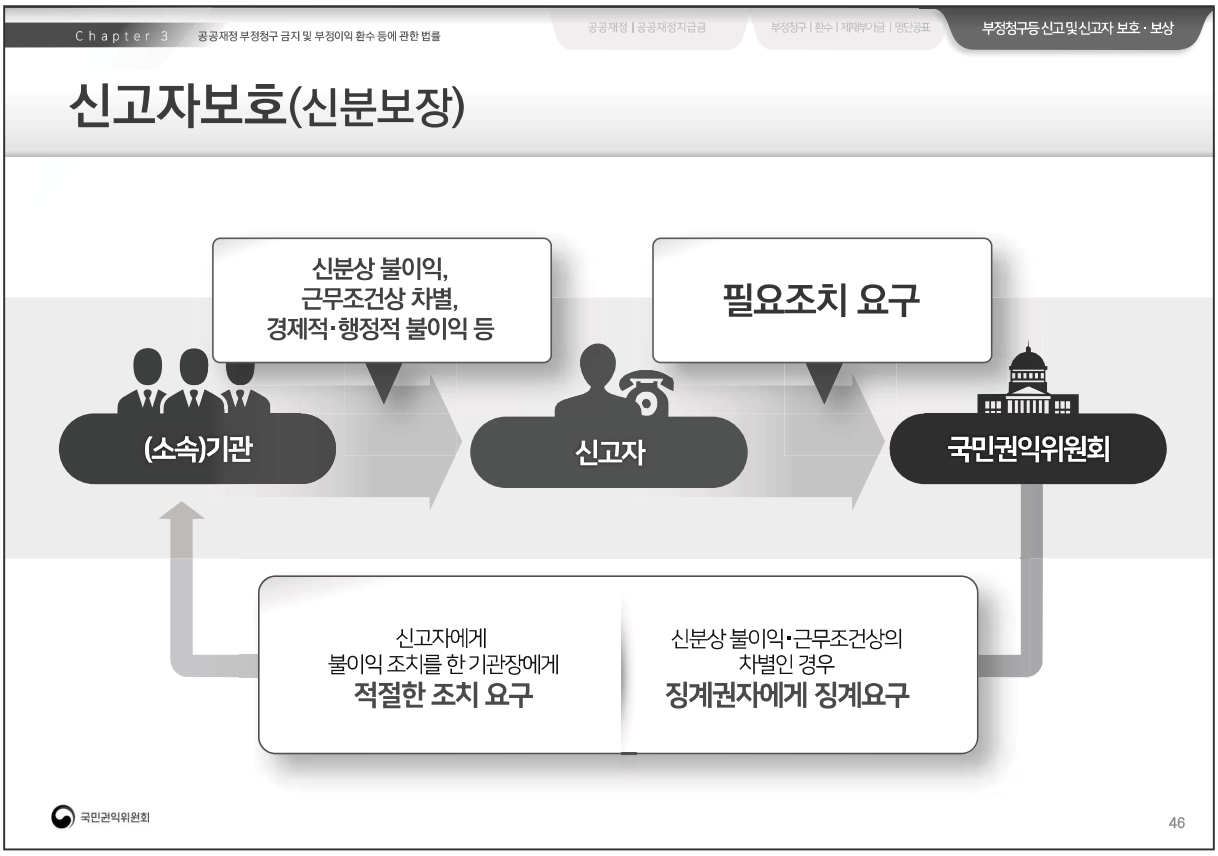
법 제19조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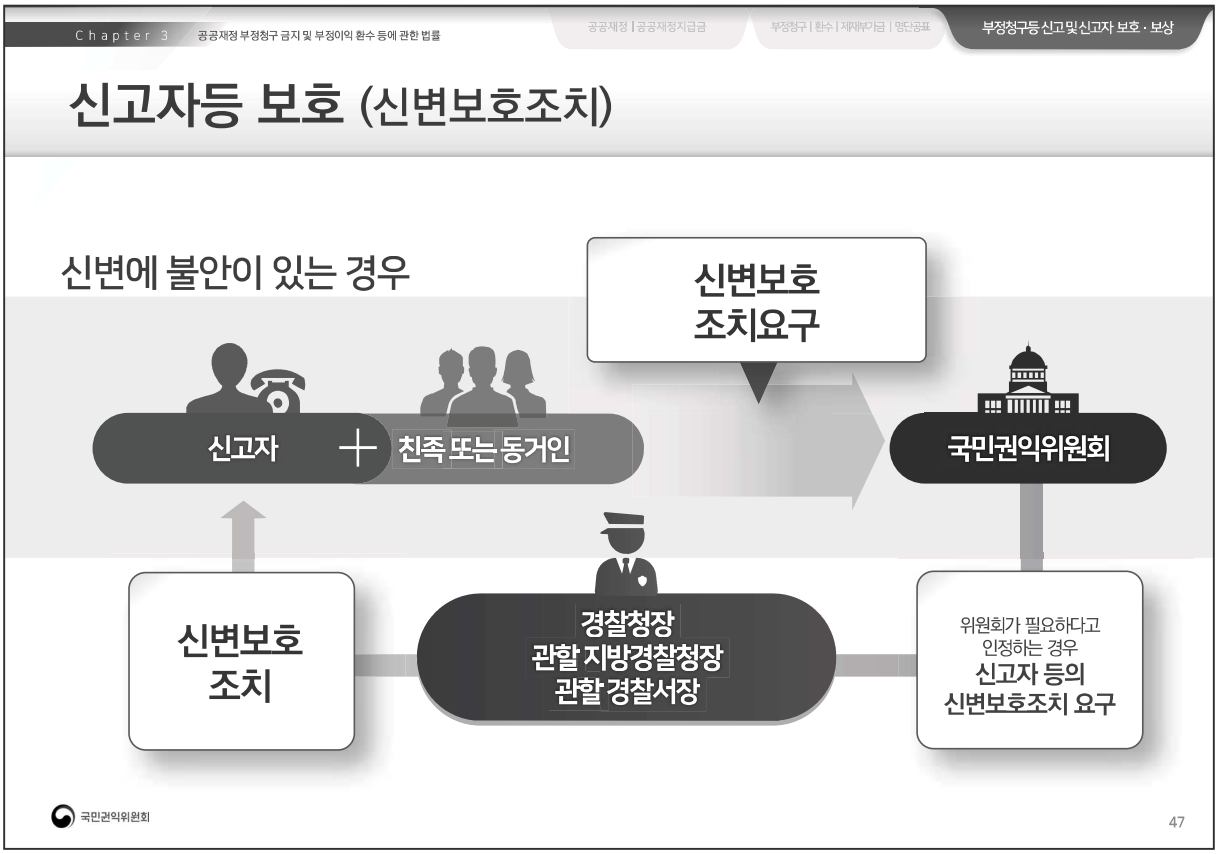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 전직, 징계보류 등
신분보장조치 요구 가능

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당하였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불이익
시정을 위한 **인·허가의 잠정적효력**
유지 등 필요조치 요구 가능


Chapter 3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 환수 | 제재부가금 | 명단공표
부정청구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 · 보상
신고자보호(신분보장)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상 차별,
경제적·행정적 불이익 등
필요조치 요구
(소속)기관
신고자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기관장에게
적절한 조치 요구
신분상 불이익·근무조건상의
차별인 경우
징계권자에게 징계요구
국민권익위원회
46


Chapter 3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청구 | 환수 | 제재부가금 | 명단공표
부정청구등 신고 및 신고자 보호 · 보상
신고자등 보호 (신변보호조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신변보호
조치요구
신고자
친족 또는 동거인
국민권익위원회
신변보호
조치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고자 등의
신변보호조치 요구
국민권익위원회
47

신고자 보상

신고자의 부정청구등 **신고**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보상금 지급

부정이익등 환수와 제재부가금 부과하여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한 경우**

포상금 지급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

벌칙 규정

- 부정청구 신고자 등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정청구 신고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 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정청구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등을 당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는 관계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데 이에 따른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 등과 관련된 자에게 출석, 진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부정청구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주거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을 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경제적·행정적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 참고인 또는 관계기관에 대해 조사를 하는 때에 이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요구 또는 조회에 따르지 아니한 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부정청구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한 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가 소속 기관의 장 등에게 적절한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법 제30조의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II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권익위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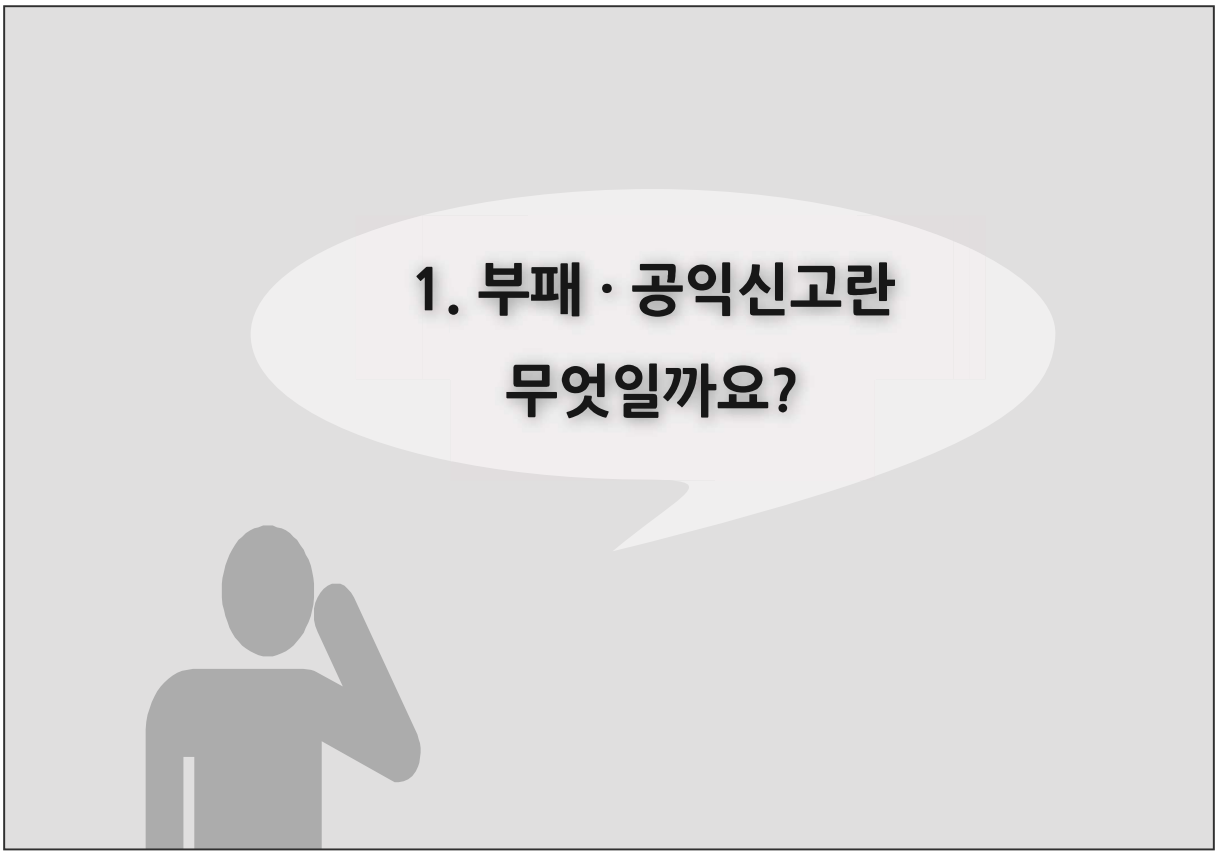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권익위

목 차

1. 부패·공익신고의 정의
2. 신고방법과 처리 절차
3. 신고사례와 처리 시 유의사항
4. 신고자 보호제도
5. 신고자 보상제도



부패·공익 신고의 정의

Step 1

부패신고란 무엇일까요?

정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각급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포함)**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을 통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 포함)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과정 등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나와 같은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4

부패·공익 신고의 정의
Step 1

공익신고란 무엇일까요?

공익신고 기관에 신고하는 행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

5

부패·공익 신고의 정의
Step 1

공익침해행위의 개념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익을 해하는 동시에,
공익신고대상 284개 법률을 위반하여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2020. 11. 20.부터는 467개 법률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 경쟁	이에준하는공익
무자격 의료행위	부실시공	오염물질 배출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	기업간 가격, 입찰 담합	채용 청탁·강요
불량식품 제조·판매	책임감리 불성실	폐기물 불법매립	각종 허위·과장 광고	하도급 대금 미지급	거짓 채용광고

6

부패·공익 신고의 정의

Step 1

잠시만요! '신고성 민원'은 무엇인가요?

- **신고성 민원 : 각종 민원 창구로 접수된 민원 중 부패·공익침해행위 를 신고한 민원**

민원의 내용과 요건에 따라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신고, 공익신고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

주의

- 일반민원으로 접수되었다고 하더라도 신고자 인적사항, 피신고자, 공익침해행위 내용 및 증거 등을 신고기관에 제출하면 신고창구에 관계없이 공익신고에 해당
- 공익신고 전용창구가 아닌 다른 접수창구를 통해 들어온 신고 중 피신고자를 특정하고 증거를 첨부하여 공익신고 대상 법률 위반 행위를 신고한 것도 모두 공익신고에 해당(일반민원과 공익신고의 차이는 형식과 창구가 아닌 신고내용)

7

2. 신고방법과 처리 절차

신고방법과 처리절차
Step 2

부패신고주체, 신고기관

신고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5조

누구든지
(내·외국인 불문, 피해자, 목격자 혹은 우연히 알게 된 제3자)

✓ **공직자의 부패신고 의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6조)

누구든지

신고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수사기관
- 피신고자 소속 공공기관 및 지도·감독기관
- 감사원

✓ **국회·법원 증언**의 경우도 부패행위 신고로 보아 신고자 보호 가능

9

신고방법과 처리절차
Step 2

공익신고주체, 신고기관

신고자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6조

누구든지
(내부자로 한정하지 않음)

✓ **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7조)

누구든지

신고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수사기관
- 조사기관(행정기관, 감독기관)
- 공사 등 공공단체
- 기업의 대표자·사용자
- 국회의원

❖ 각 신고기관별 '공익신고책임관' 지정·운영 필요

10

신고방법과 처리절차
Step 2

부패·공익신고 방법

기명의 문서

-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신고
- 신고대상과 부패행위·공익침해행위의 **증거 첨부**

- 청렴포털(www.clean.go.kr), 방문·우편 및 FAX(044-200-7972) 로 신고
- 전화(1398)는 상담만 가능

신고서 기재사항

✓ 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 부패행위 또는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 부패행위 또는 공익침해행위 내용
✓ 신고의 취지와 내용

❖ 신분공개 동의여부 체크

11

신고방법과 처리절차
Step 2

비실명 대리신고는 공익신고만 가능

비실명 대리신고

- **공익신고의 경우**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 대리가능(신고기관 : 권익위)**
- 변호사가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및 위임장을 **봉인하여 권익위에 제출**
- 권익위 직원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봉인된 자료 열람불가**

12

신고방법과 처리절차
Step 2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 구성·운영

비용 NO!

변호사 선임 비용을 고민하는 내부 공익신고자를 위해
권익위에서 "비실명 대리신고 자문변호사단(49명)" 운영 중
☞ 내부 공익신고자를 위한 상담·대리신고 자문변호사에게 수당 지원

내부 공익신고자
(법 제2조제7호, 시행령 제3조의2)

① 피신고자(공공기관, 기업, 법인 등)에 **소속**되어 **근무**
② 피신고자 (공공기관, 기업, 법인 등)와 **계약**에 따라 **업무 수행**
③ 피신고자 (공공기관, 기업, 법인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기 전 **교육·훈련**
④ 피신고자 (공공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에 소속되어 **근무**
⑤ 피신고자(기업, 법인) **계열회사,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 법인**에 소속되어 **근무**
⑥ 그 밖에 피신고자의 지도·관리·감독 받는 자로서, 불이익조치 받을 수 있는 자

13

신고방법과 처리절차
Step 2

부패신고 접수 및 처리

신고서 제출
부패신고자
- 부패신고자의 인적사항
- 신고대상과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

접수·확인
권익위
- 부패신고 접수
- 신고내용의 사실 확인
- 필요한 경우 보완 요구
- 부패행위 증거 유무 확인 및 특정
- 부패행위 사실 확인·조사
(신고사항의 진위 확인을 위한 진술청취, 자료제출 요구 등)

처리
권익위
- **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송부 등**
- 법 제59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 처리
(신고내용이 명백한 거짓인 경우, 신고자 인적사항을 수 없는 경우 등)
- 신고자에게 종결 사실 등 통보

처리
수사·조사기관
- 수사· 조사실시
-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결과 통보
권익위
- 조사결과 미흡 시 재조사 요구
(권익위→수사·조사기관)
-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14

신고방법과 처리절차
Step 2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

신고서 제출
공익신고자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 공익침해행위 내용
-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

접수
수사·조사기관 / 권익위

- 신고서 기재사항 및 신고내용 등 확인
- 공익신고 접수
- 신분공개동의 여부 확인
- 필요한 경우 보완 요구

확인
수사· 조사기관 / 권익위

- 284개 법률 위반 여부 확인
- 위반에 대한 벌칙 또는 행정처분 해당 여부 확인

처리
수사·조사기관

- 법령 등에 따라 권한이 있는 경우 직접 조사
-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 관할이 아닌 공익신고는 해당 조사기관에 이송
- 신고자에게 이송 사실 등 통보

- **법 제1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결** 처리 (신고내용이 명백한 거짓인 경우, 신고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등)
- 신고자에게 종결 사실 등 통보

15

신고방법과 처리절차
Step 2

수사·조사기관 자체 접수 공익신고 사건 접수 ·처리 절차

접 수 (수사·조사기관)

① 신고서 기재사항, 증거 및 신고내용 등 확인
② 공익신고 접수
③ 신분 공개 동의 여부 확인
④ 필요한 경우 보완 요구

확 인 (수사·조사기관)

① 284개 법률 위반 여부 확인
② 위반에 대한 벌칙 또는 행정처분 해당여부 확인

처 리 (수사·조사기관)

법령 등에 따라 권한이 있는 경우	관할이 아닌 경우	법 제10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① 직접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②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① 해당수사·조사기관에이송 ② 신고자에게 이송사실 등 통지	① 조사 불개시 또는 중단 ② 신고자에게 조사 불개시 사실 등 통보

16

신고방법과 처리절차
Step 2

권익위 이첩 · 송부 공익신고 사건 접수 ·처리 절차

처 리 (조사기관)

① 법령 등에 따라 권한이 있는 경우 직접 조사
②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③ 조사종료 후 10일 이내에 권익위에 결과 통보

다른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권익위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 등에 이첩

후속조치요구 (권익위)

① 공익침해 확산방지를 위한 의견제시(제품회수 등)
② 재조사 요구(공익신고자의 이의신청 또는 위원회 직권)

조 치 (조사기관)

① 의견제시, 재조사 요구에 따른 조치
② 권익위에 결과 통보

17

3. 신고사례와 처리 시 유의사항

신고사례와 유의사항
Step 3

부패신고 사례/예시 - 공직자 사익도모

제약회사 공공기관 로비 및 리베이트 제공
A제약회사 대표가 자사 판매 의약품에 대한 심사·평가 등에 대비하여 관련기관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전국 일반 병·의료원에도 약품 구매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

대학교수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B대학교 교수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공공기관 등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 하면서 연구원으로 등록된 대학원생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인건비를 사무원을 통해 관리하고, 연구원들에게는 매달 월급 명목으로 몇 십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인건비는 사적 용도로 사용하여 수억 원을 횡령한 의혹이 있음을 신고함

민·군 기술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피신고자는 민·군기술적용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소속 직원을 연구원으로 등록한 후 연구원 통장을 관리하면서 인건비를 횡령하고, 피신고자가 실소유주인 페이퍼 컴퍼니와 공모하여 허위매출을 일으키거나 사업수행과 무관한 물품 구입을 연구비로 집행하는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의혹이 있음을 신고함

19

신고사례와 유의사항
Step 3

부패신고 사례/예시 -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

지자체의 수문 권양기 설치비 편취
C주식회사 운영자는 수문 권양기 과부하 안전장치 교체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설치된 장치를 떼어내 세척한 다음 도색만 하고 다시 설치하였음에도 마치 새 제품으로 교체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공사비를 청구하여 편취함

사립유치원 원장의 보조금 등 부정수급
사립유치원 원장 D는 재직기간 중 유치원에 근무 하지 않은 배우자를 행정직원으로 허위 등록하고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며, 배우자를 사학연금에 가입시켰다가 퇴사처리하고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퇴직 일시금과 퇴직수당 명목으로 사학연금 516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함

지자체의 휴대폰요금 부당지급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경비 등 직무수행에 따른 활동비 명목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개인 휴대폰 사용요금을 동일 목적으로 이중 지급받아 편취함

20

신고사례와 유의사항
Step 3

공익신고 사례/예시 - 건강 분야

건강 | 안전 | 환경 | 소비자이익 | 공정경쟁 | 이에 준하는 공익

마약류 관리 부실
A요양원에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접수대장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사용한다는 신고

프랜차이즈 식당의 식육가공품 불법 소분 판매
식육가공 전문업체인 B회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음식점에서 매장 내 조립된 식품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포장 판매를 원하는 고객에게 조리되지 않은 식육가공품을 불법 소분하여 판매하고 있다고 신고

제약회사 리베이트 제공
C제약회사가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병원 관계자에게 83회에 걸쳐 대략 4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고 신고

21

신고사례와 유의사항
Step 3

공익신고 사례/예시 - 안전 분야

건강 | 안전 | 환경 | 소비자이익 | 공정경쟁 | 이에 준하는 공익

액화염소가스 충전 및 저장방법 위반
액화염소가스는 허가 받은 지하저장탱크에 저장한 후, 지상에 있는 충전용기에 충전하여 판매해야 함에도 액화염소가스 저장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저장·보관 및 충전 판매하고 있다고 신고

오피스텔 부실시공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속이고, 부실시공을 하고 있다고 신고

신항 도로공사 부실시공
신항 도로공사 중 D지역 계곡 배수로 공사를 실시하면서 일부 구간에 대하여 배수로를 미설치하고, 맨홀 주변 되메우기 공사를 하지 않는 등 부실시공을 하였다고 신고

건축공사 도급계약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법정기준 미달
건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별도로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법정기준에 못 미치게 책정하고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고 신고

22

신고사례와 유의사항
Step 3

공익신고 사례/예시 - 환경 분야

건강 | 안전 | **환경** | 소비자이익 | 공정경쟁 | 이에 준하는 공익

대기오염물질 배출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에서 도장공정의 대기오염방지시설 내 필터를 규정과 다르게 사용하여 대기오염물질이 충분한 여과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배출하고 있다고 신고

폐수 무단 방류

피신고자가 도시철도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있다고 신고

폐기물 불법 매립

건물 인테리어 및 싱크대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폐타일, 나무, 고철 등 각종 사업장 폐기물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타일 및 기타 폐기물 등을 사업부지내 무단 매립하고 있다고 신고

23

신고사례와 유의사항
Step 3

공익신고 사례/예시 - 소비자이익 분야

건강 | 안전 | 환경 | **소비자이익** | 공정경쟁 | 공공의 이익

수입산 유채유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

E업체에서 수입(독일 또는 몽골) 유채씨를 이용해 카놀라유를 제조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여 학교 급식용으로 유통하고 있다고 신고

대형마트의 경품 지급관련 개인정보 과다수집

홈페이지에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2만원 상품권 당첨자 200명에게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를 과다 수집하였다고 신고

통신판매업자의 표시광고 위반

통신판매업자가 재화 등의 교환·반품과 대금 환불 및 거래에 관한 약관 등을 제공하지 않고 판매했다고 신고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한 가상통화 판매

가상화폐(가상통화)를 발행하고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다단계 방식으로 다수의 투자자를 끌어들여 불법 자금을 모집하는 등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신고

24

신고사례와 유의사항
Step 3

공익신고 사례/예시 - 공정경쟁 분야

건강 | 안전 | 환경 | 소비자이익 | **공정경쟁** | 이에 준하는 공익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가격결정행위

건축공사 감리업무 운영위원회가 감리용역 계약의 감리비 수준을 결정한 후 구성사업자에게 통보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였다고 신고

제조업체들의 입찰담합 의혹

각각 어느 정도 낙찰 받을지 물량을 미리 정한 후, 국내 기계업체들의 구매입찰마다 메신저 등을 통해 낙찰자, 투찰가격, 낙찰가격을 사전에 결정하였다고 신고

하도급 대금 선급금 미지급 의혹

F회사가 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 하도급 업체인 G회사에게 하도급 대금 선급금 4억 4천 8백만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신고

25

신고사례와 유의사항
Step 3

공익신고 사례/예시 - 이에 준하는 공익 분야

건강 | 안전 | 환경 | 소비자이익 | 공정경쟁 | **이에 준하는 공익**

전문학원 일자리 알선·소개비 황당한 요구

전문학원으로부터 전공과 관련된 웹디자이너 일자리를 소개받은 후 학원으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요구당한 H군은 학원에서 소개해준 금융브로커를 통해 연리 200%이상의 사채를 쓰고 있음을 신고

공공기관 임원의 민간 용역업체에 대한 채용 요구

공공기관 임원이 관리하는 용역업체에서 몇몇 직위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자 인사담당자에게 자신의 친척이 채용되도록 부탁하였고, 용역업체 인사담당자는 내부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공공기관 임원의 친척을 채용한 사실을 신고

기타 사례 예시

-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는 행위
-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부정하게 방위산업 기술을 취득,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
- 중소기업 창업투자 회사의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행위
-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한 원자재를 비축하지 아니하는 행위

26

신고사례와 유의사항
Step 3

부패·공익신고 처리시 유의사항

비밀보장 준수

✓ 신고자나 협조자 등의 **인적사항 임의 노출·공개·보도 금지**

* 공익신고의 경우,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신고내용 (피신고자 인적사항 포함) 공개 금지**

- **(수사·조사기관에 이첩·송부 /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경우)** 신고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고자의 **성명이나 신고자 유추가능 사항은 반드시 삭제 !!**
- 신고자로 가장해 **유선으로 신고내용 등을 묻는 경우 주의** 요망 !!

보호·보상 제도 안내

✓ 부패·공익신고자에게 **보호·보상 제도 안내**

- **(신고자에 대한 신변위협, 불이익조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하도록 적극 안내
- 신고 처리결과 통지 시 신고자에게 **'보호·보상 제도 안내문' 제공**

27

신고사례와 유의사항
Step 3

신고자 신분노출 사례/예시

(유형 1) 신고성 민원 숙지 미흡	✓A기관은 OO업체가 폐수를 방류하고 있다는 주민의 민원 접수 후 해당업체에 전화하여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며 합의를 권고하였고, 민원인은 해당업체로부터 협박을 받는 등 피해를 받음
	✓철도공사로 훼손된 토지의 원상복구 민원에 대해 B공단이 민원인의 동의없이 시공사인 건설업체에 민원인 정보를 제공하여 민원인은 인권위에 개인정보 관련 진정을 제기하였음 ☞ 신고성 민원 접수 후 담당자가 공익신고라고 인지하지 못한 채 민원 처리
피신고기관에 신고자 정보 고의 누출	✓C공무원은 어린이집 관련 내부 공익신고 내용을 해당 어린이집 원장에게 누설하였고, 해당 어린이집은 제보한 교사를 색출해서 해고하였음
	✓D공무원은 사학비리 제보 내용과 제보자 정보를 해당대학 관계자에게 알려주었으며, 조치계획 등이 포함된 내부자료를 휴대전화로 전송함

28

신고사례와 유의사항
Step 3

신고자 신분노출 사례/예시

(유형 2) 접수·처리 과정에서 부주의	✓ 소청위는 O교사의 승진탈락 배경을 확인하기 위해 E교육청에 자료를 요청했고, E교육청은 이와 관련 O교사에 대한 국민신문고 민원을 소청위에 제공, 소청위측도 민원인 개인정보를 지우지 않고 소청 신청인에게 전달함
	✓ F공무원은 OO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공익신고 접수 후 해당 어린이집을 조사하던 중 업무수첩에 기재되어 있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어린이집 원장에게 노출
	✓ G공무원은 모래섞인 시멘트 사용 사실을 신고한 하청업체를 조사하던 중 업체의 전화기로 내부 신고자에게 연락하여 신고자 전화번호를 노출함
	✓ H교육청은 예산부적정 사용 관련 소청심사청구 답변서 작성을 위해 조사보고서를 보내달라는 학교의 요청에 신고자의 실명이 기재된 조사보고서를 보냈으며 이는 그대로 징계 대상자들에게 송달됨

29

신고사례와 유의사항
Step 3

신고자 신분노출 사례/예시

(유형 3) 수사의뢰	✓ I공무원은 신고자 신분을 익명 처리하여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으나, 경찰이 신고자의 연락처를 알려달라는 요청에 신고자의 동의도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함
(유형 4) 소송관련 문서제공	✓ J기관은 공익신고를 처리하여 피신고자에게 행정처분을 내렸고, 이후 피신고자의 변호사가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를 위해 신고자의 정보를 요청하자 신고자의 동의도 없이 신고자 인적사항 제공
	✓ K기관은 공익신고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자 공익신고와 해당 소송이 관련이 없음에도 신고자가 해당소송의 원고적격이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 공익신고 사실을 기재한 내부 문건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

30

신고사례와 유의사항
Step 3

신고자 신분노출 사례/예시

(유형 5) 보도자료 및 언론유출	✓L기관에서 사무장 병원 부당 진료비 청구 관련 신고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OO 원무부장의 신고' 라는 신고자가 유추 될 수 있는 사항을 포함시켜 신고자의 신분이 드러남
	✓주민지원사업비 관련 민원에 대해 M환경청이 OO시의 요청에 따라 내부결재 문서(민원 내용과 민원인 정보 포함)를 OO시에 제공하고 시는 이를 언론기관에 유출함

위반 시 처벌조항

❖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31

4. 신고자 보호제도

신고자 보호제도
Step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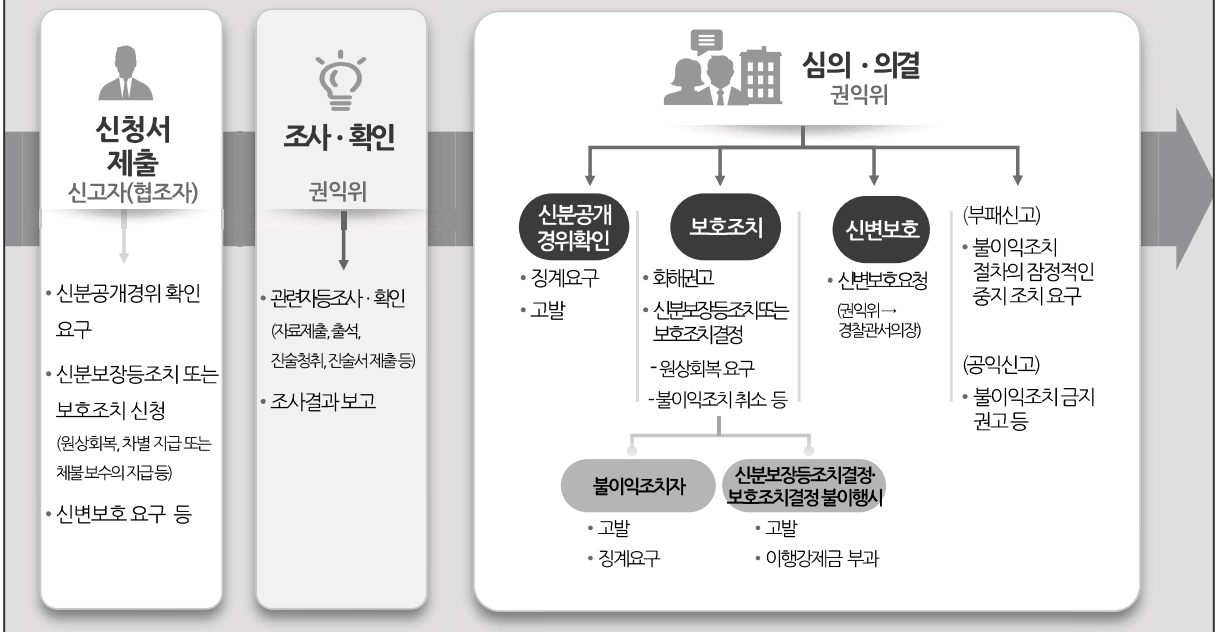
신고자 보호제도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보호 강화 !

33

신고자 보호제도
Step 4

보호신청 접수 및 처리



34

비밀보장 | 신분보장 | 신변보호 | 책임감면

부패·공익신고자(협조자) 보호의 첫걸음 비밀보장

- 부패·공익신고자(협조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신고자등이 동의한 때에는 가능)**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사실로 발견되기 전까지는) 공익신고의 경우,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철저히 금지**
  [적용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0조]

❖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부패신고의 경우 '20. 6. 11.부터 공익신고와 동일하게 제재)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35

비밀보장 | 신분보장 | 신변보호 | 책임감면

부패신고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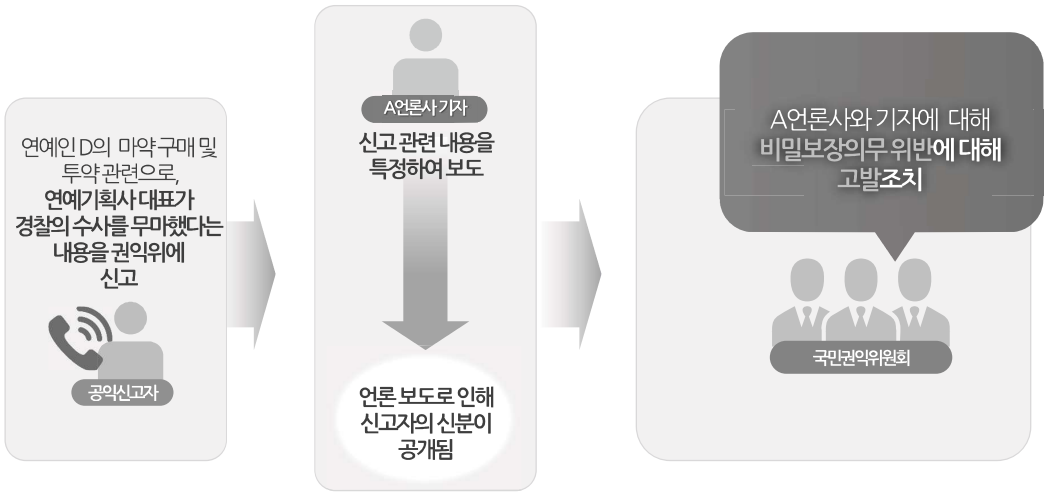
"부당한 업무지시 등" 신고 관련 신분공개여부 확인 요구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 제88조]

36

비밀보장 | 신분보장 | 신변보호 | 책임감면

공익신고 사례 **"경찰의 마약수사 은폐 의혹" 신고 관련 신분공개경위 확인**



[적용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4항, 제30조 제1항 제2호]

37

비밀보장 | **신분보장** | 신변보호 | 책임감면

부패·공익신고자(협조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 **(불이익조치 금지)** 누구든지 신고자(협조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음**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 제1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

  ❖ 위반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90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 **(신고 방해·취소강요 금지)** 누구든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취소**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 제2항,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5조제2항]

  ❖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90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

38

비밀보장 | **신분보장** | 신변보호 | 책임감면

불이익 조치 유형	불이익 조치 시 형사처벌
가.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다.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라.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마.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사.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2년 이하 징역 / 2천만원 이하 벌금
아.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자.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권고사항 (벌칙조항 없음)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7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

39

비밀보장 | **신분보장** | 신변보호 | 책임감면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을 통해 부패신고자(협조자)를 지켜 드립니다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신분보장등조치 신청

불이익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2, 제62조의3]

국민권익위원회

-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요구 등 보호조치결정

❖ 확정된 신분보장등조치결정 불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행할 때까지** 매년 2회 범위에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6]

40

비밀보장 | **신분보장** | 신변보호 | 책임감면

불이익 처분 절차의 일시정지 제도(부패신고자·협조자에 한함)

'위원회 결정시까지 신고자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 우려**' 또는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예정**되어 있거나 **진행 중**'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신청 (또는 위원회 직권)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5]

국민권익위원회

- 4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불이익조치 절차의 잠정적인 중지 조치 요구

❖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 명령 불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20.6.11.부터)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90조 제3항]

41

비밀보장 | **신분보장** | 신변보호 | 책임감면

보호조치결정을 통해 공익신고자(협조자)를 지켜 드립니다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적용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2조]

- 불이익조치 금지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보호조치 신청**

불이익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적용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제2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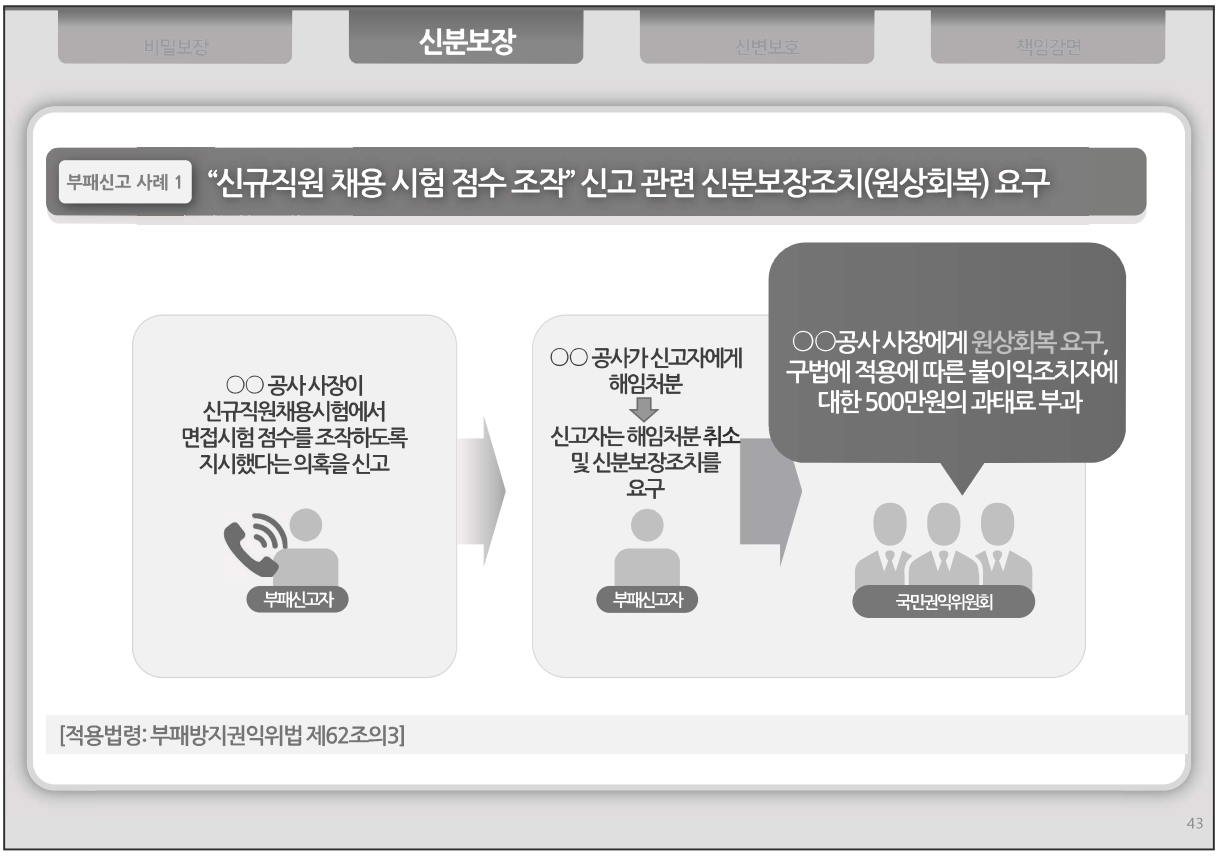
-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 요구 등 보호조치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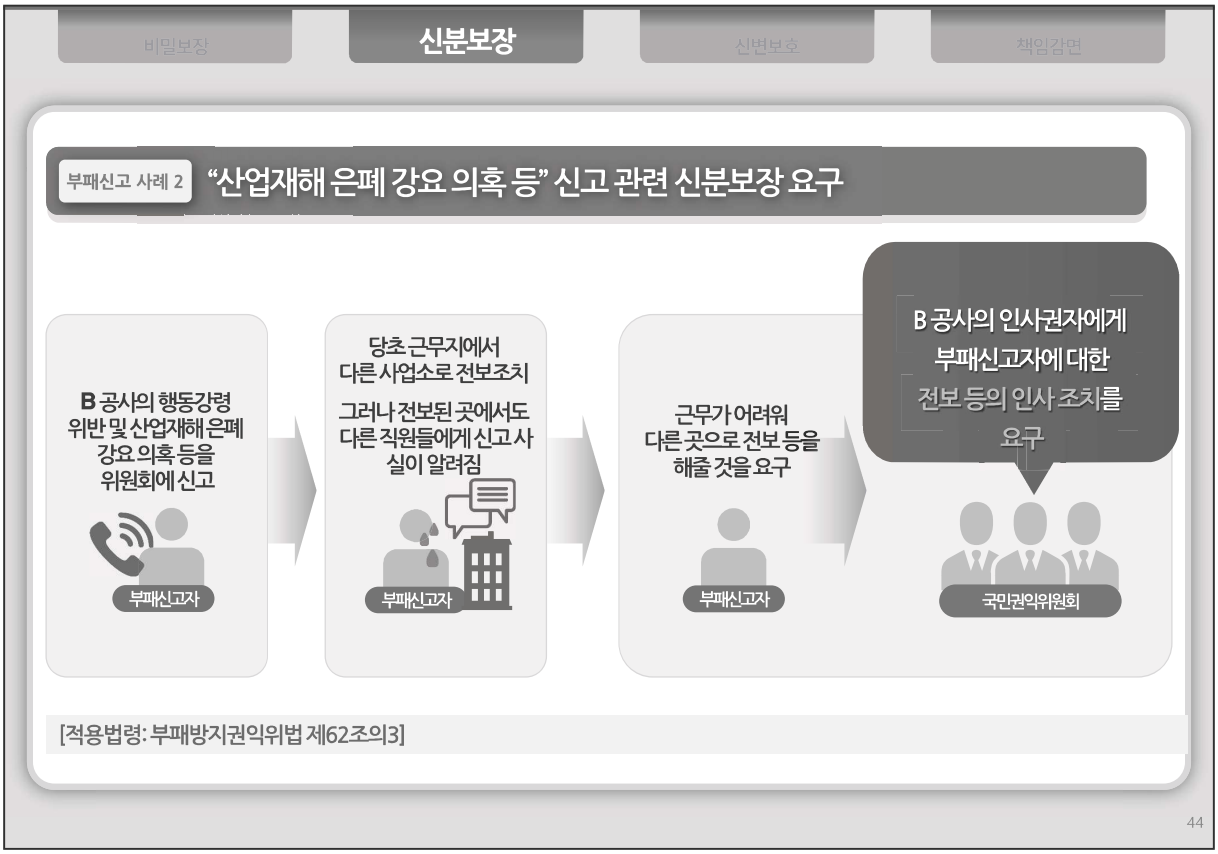
❖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 불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행할 때까지 매년 2회 범위에서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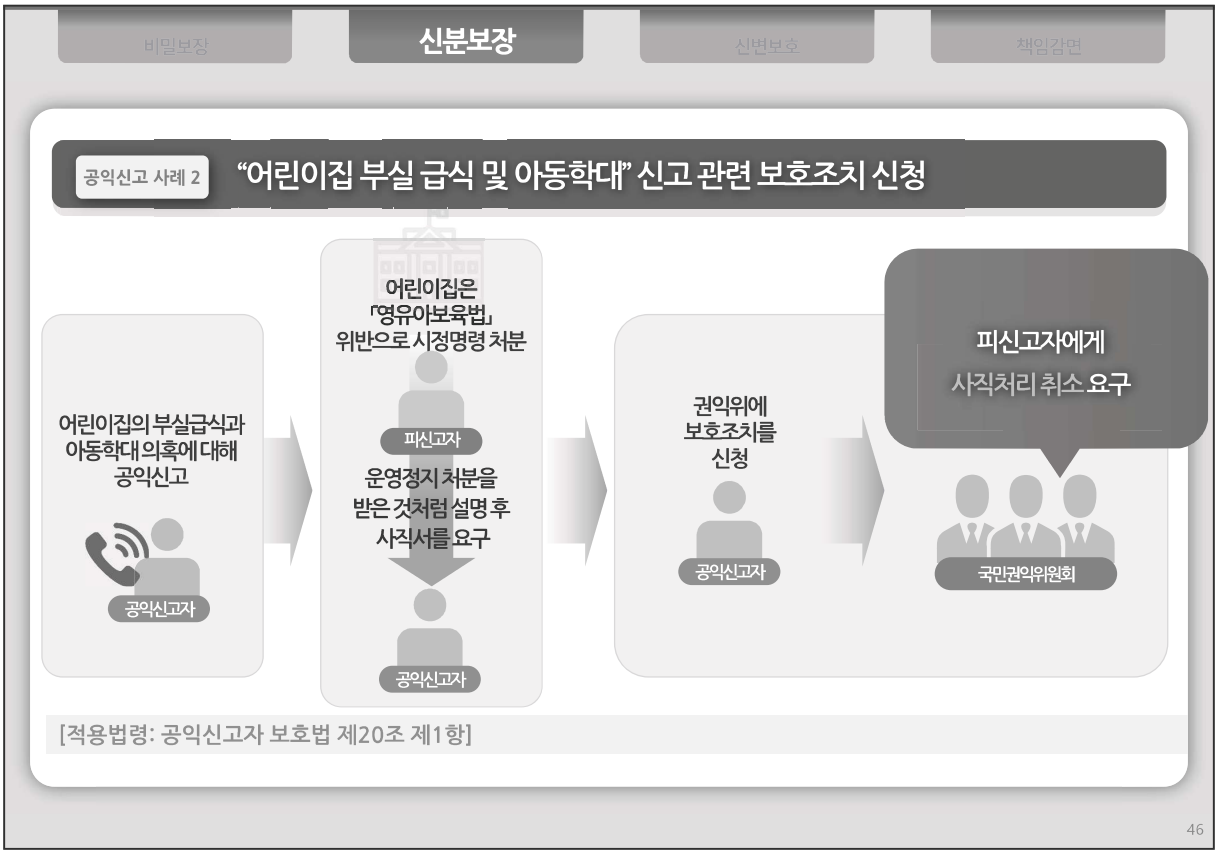
[적용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1조의2, 제30조]

42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부패신고 사례 1
"신규직원 채용 시험 점수 조작" 신고 관련 신분보장조치(원상회복) 요구
○○ 공사 사장이 신규직원채용시험에서 면접시험 점수를 조작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신고
부패신고자
○○ 공사가 신고자에게 해임처분
신고자는 해임처분 취소 및 신분보장조치를 요구
부패신고자
○○공사 사장에게 원상회복 요구, 구법에 적용에 따른 불이익조치자에 대한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국민권익위원회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
43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부패신고 사례 2
"산업재해 은폐 강요 의혹 등" 신고 관련 신분보장 요구
B 공사의 행동강령 위반 및 산업재해 은폐 강요 의혹 등을 위원회에 신고
부패신고자
당초 근무지에서 다른 사업소로 전보조치
그러나 전보된 곳에서도 다른 직원들에게 신고 사실이 알려짐
부패신고자
근무가 어려워 다른 곳으로 전보 등을 해줄 것을 요구
부패신고자
B 공사의 인사권자에게 부패신고자에 대한 전보 등의 인사 조치를 요구
국민권익위원회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2조의3]
44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공익신고 사례 1
"폐기물관리법 위반" 신고 관련 보호조치 신청
피신청인 회사의 「폐기물관리법」위반을 C기관에 신고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 소속 파견업체와의 업무위탁계약을 해지
피신고자
공익신고자
권익위에 보호조치 신청
공익신고자
계약해지 취소 및 원상회복 조치 할 것을 권고
국민권익위원회
[적용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제2항]
45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공익신고 사례 2
"어린이집 부실 급식 및 아동학대" 신고 관련 보호조치 신청
어린이집의 부실급식과 아동학대 의혹에 대해 공익신고
공익신고자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처분
피신고자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것처럼 설명 후 사직서를 요구
공익신고자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
공익신고자
피신고자에게 사직처리 취소 요구
국민권익위원회
[적용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제1항]
46

비밀보장 | **신분보장** | 신변보호 | 책임감면

공익신고 사례 3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신고 관련 보호조치 신청

A업체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과소 계상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공익신고

공익신고자

신고사실 인지

피신고자

공익신고자는 현장소장에 의해 권고사직을 당하였고, 정직 3개월의 불이익조치

공익신고자

권익위에 보호조치를 신청

공익신고자

양당사자간의 화해를 권고 (급여 보전 및 양당사자 간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화해조서 작성)

국민권익위원회

[적용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0조 제1항]

47

비밀보장 | 신분보장 | **신변보호** | 책임감면

부패·공익신고자(협조자),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을 보호합니다

➢ 신 변 보호요청

부패·공익신고자 등 → 신변보호 요구 → 국민권익위원회 → 신변보호 조치 요청 → 경찰관서의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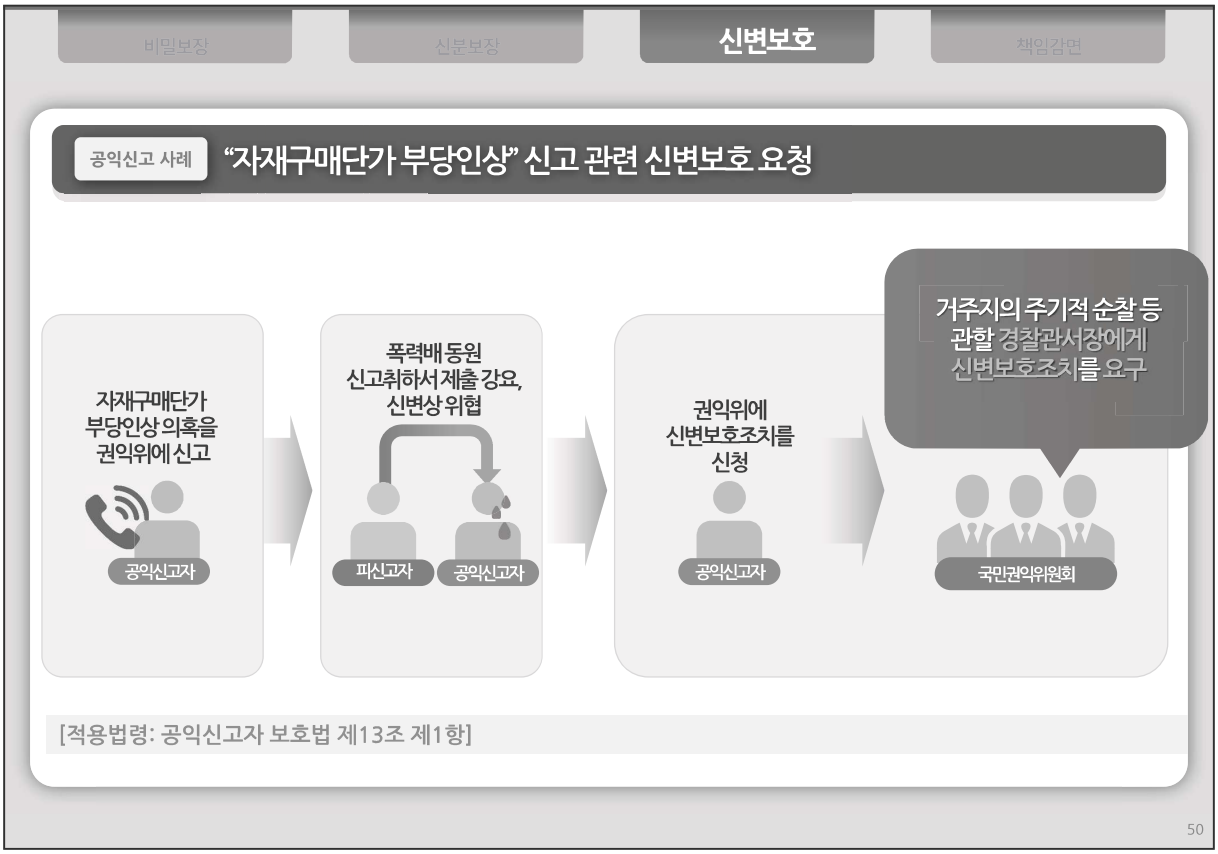
➢ 신 변 보호방법

- 일정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 · 귀가시 동행
- 일정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의2,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48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부패신고 사례
"하수관거공사의 시설물 미시공" 신고 관련 신변보호 요구
C 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시공업체가 설계내역과 달리 시설물의 일부 수량을 미시공한 의혹을 신고
부패신고자
신고한 이후 피신고자 측으로부터 미행을 당하는 등 신변에 불안
부패신고자
신변보호조치 요구
부패신고자
부패신고자의 관할 경찰서에 요구인의 주거지 순찰 강화, 위치추적장치 제공 등의 신변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국민권익위원회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4조의2]
49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공익신고 사례
"자재구매단가 부당인상" 신고 관련 신변보호 요청
자재구매단가 부당인상 의혹을 권익위에 신고
공익신고자
폭력배 동원 신고취하서 제출 강요, 신변상 위협
피신고자
공익신고자
권익위에 신변보호조치를 신청
공익신고자
거주지의 주기적 순찰 등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
국민권익위원회
[적용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3조 제1항]
50

비밀보장 | 신분보장 | 신변보호 | **책임감면**

형벌, 징계·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면제 가능

형의 감경·면제	• 부패·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협조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의 감경·면제 가능**
징계 및 행정처분의 감경·면제	• 부패·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협조자)에 **징계처분의 감경·면제 가능** ✓(공익신고자(협조자)의 위법 행위가 발견되어 **행정처분 하는 경우 처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권익위의 징계감면 요구에 따라야 함**)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배제	• 부패·공익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어도 다른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손해배상의 청구금지	• 피신고자가 공익신고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신고자(협조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51

비밀보장 | 신분보장 | 신변보호 | **책임감면**

부패신고 사례 "지도·감독기관에 부패행위" 신고 관련 책임감면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

52

비밀보장 | 신분보장 | 신변보호 | **책임감면**

공익신고 사례 1 "노인학대" 신고 관련 책임감면 신청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원의 요양보호사의 노인학대 행위를 노인전문보호기관에 공익신고

공익신고자

D 행정처분기관으로부터 개선명령 사전통지

D행정처분기관

공익신고자

처분의 면제를 요구하며 책임감면을 신청

공익신고자

D 행정처분기관의 장에게 공익신고자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면제를 요구하되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행정지도 실시를 촉구

국민권익위원회

[적용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53

비밀보장 | 신분보장 | 신변보호 | **책임감면**

공익신고 사례 2 "입찰 담합행위" 신고 관련 책임감면 신청

입찰 담합행위를 A기관에 자진신고

공익신고자

B 행정처분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B행정처분기관

공익신고자

처분의 면제를 요구하며 책임감면을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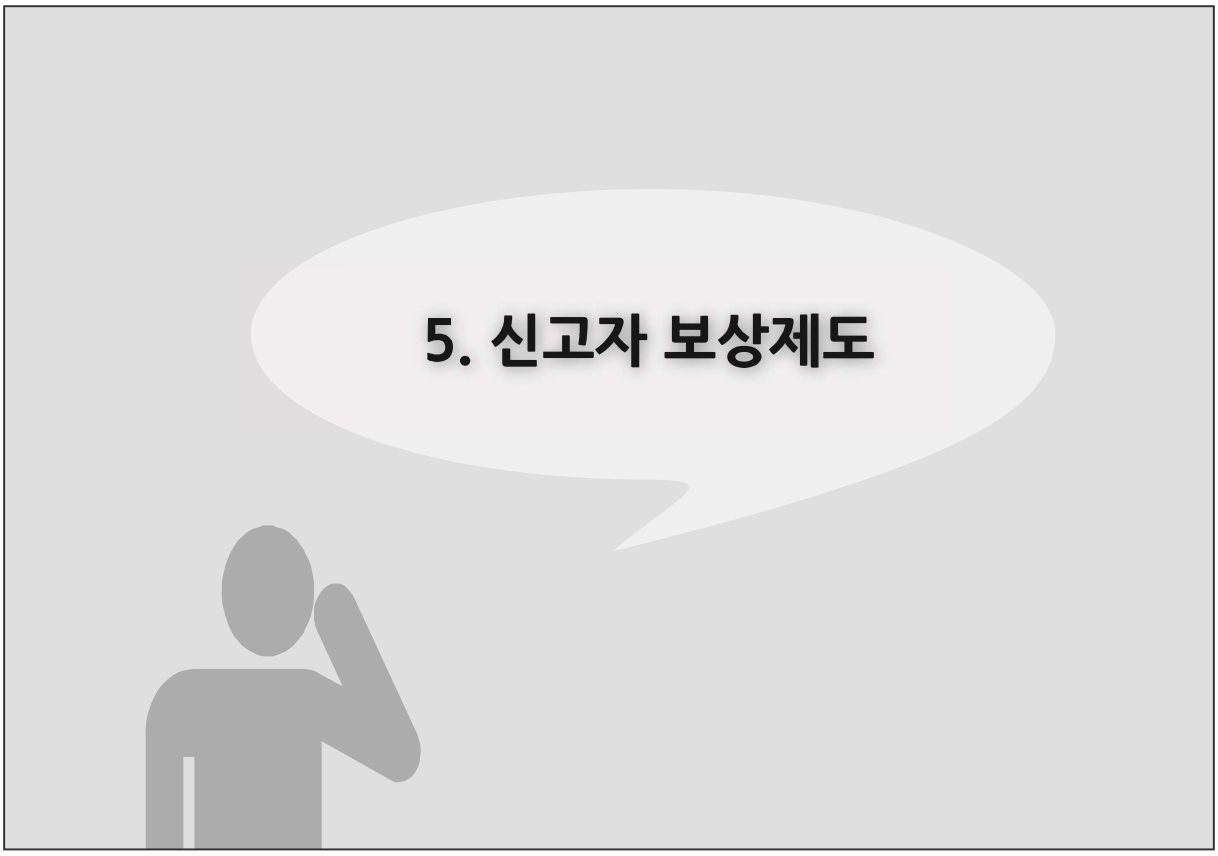
공익신고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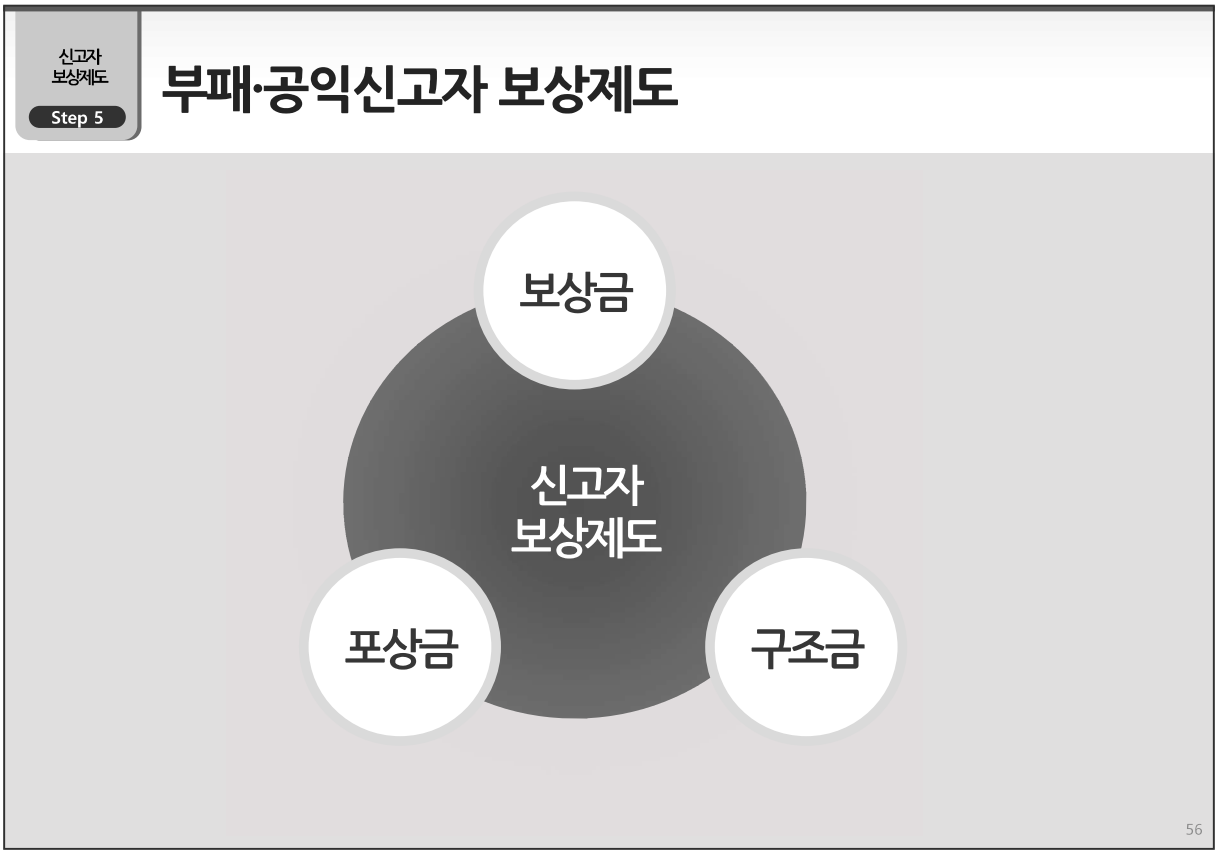
B 행정처분기관의 장에게 공익신고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면제를 요구

국민권익위원회

[적용법령: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

54


5. 신고자 보상제도


신고자
보상제도
Step 5
부패·공익신고자 보상제도
보상금
신고자
보상제도
포상금
구조금
56

신고자 보상제도
Step 5

신고자 보상금

개념

보상금

공공기관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
또는 비용절감을
가져온 경우

최고 30억원

보상금 대상

- **(부패신고) 권익위 신고자**
  - ✓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음
- **(공익신고) 전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한 내부 공익신고자**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57

신고자 보상제도
Step 5

보상금 신청요건이 되는 수입 회복·증대 사유

부패신고자 보상금 지급사유

- 몰수·추징금 부과
- 국세·지방세 부과
-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통고처분
-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
-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
-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사유

- 벌칙, 통고 처분,
- 몰수·추징금 부과
- 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 과징금(인·허가 취소·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포함)부과
- 국세·지방세 부과
- 부담금·가산금 부과
-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및 영 제72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 및 영 제21조]

58

신고자 보상제도
Step 5

보상금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

보상금 지급신청
신고자

[제출서류]
- 보상금 신청서
- 부패신고자 또는 내부공익신고자 입증자료
- 신고처리결과(공문)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신청방법]
- 인터넷
- 방문
- 우편 또는 팩스

조사·확인
권익위

- 부패·공익신고 처리 행정기관 등에 자료 요청 및 제출
- 내부 공익신고자 여부, 보상금 지급 제한 사유 등 조사·확인

심의·의결
권익위

- 보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심의·의결

보상금 지급
신고자

✓ 지급대상자에게 결정서 정본과 결정통지서 송부
✓ 보상금 계좌입금

상환 요청
공공기관 / 지자체

✓ 해당 공공기관 또는 지자체에 보상금 상환요청

59

보상금 | 포상금 | 구조금

부패신고자 보상금 지급사례/예시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A병원 대표 등이 사무장병원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허위로 치료를 한 것처럼 신청하여 요양급여 비용을 부정수급하는 등의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신고로 인하여 80억 4천여만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어 **2억 306만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관련 보조금 편취 등

지열난방공사 참여 시공업체 대표들이 무자격 시공업체 대표들에게 지열난방공사 시공권을 불법 양도 하고 허위로 작성한 공사 계약서 등을 B공단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부당 편취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신고로 인하여 5억 123만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어 **4,828만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공공기관 건설현장 불량건축자재 납품

C납품업체 대표가 KS규격에 미달되는 철선으로 바닥구조체를 제조하여 ○○청 D공사에 납품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2억 2,405여만원의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등을 가져온 사실이 인정되어 **3,736만원의 보상금 지급 결정**

60

보상금 | 포상금 | 구조금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사례/예시

축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건 보상금지급

신고내용

피신고업체 돼지고기 및 소고기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 판매 관할 기관에 신고

신고자 → 보상금 지급 신청

1,165만원 보상금 지급 결정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위반 건 보상금지급

신고내용

폐기물 매립 관할 환경청에 신고

신고자 → 보상금 지급 신청

80만원 보상금 지급 결정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 건 보상금지급

신고내용

제약사 거래처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 관할 검찰청에 신고

신고자 → 보상금 지급 신청

9,600만원 보상금 지급 결정

61

신고자 보상제도 Step 5

신고자 포상금

개념

포상금

공공기관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최고 2억원

포상금 지급대상

- (부패신고)
  : 위원회 또는 공공기관 신고자
- (공익신고)
  : 위원회 또는 전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한 신고자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

62

신고자 보상제도
Step 5

신고자 포상금 지급사유

부패신고자 포상금 지급사유

- 부패행위를 한 자에 대해 공소제기·기소유예·기소중지,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이 있는 경우
- 법령의 제정·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겨우
- 신고에 의해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의 개선·중단 또는 종료 등으로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경우
- 그 밖에 보상심의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사유

-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
-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
-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법령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
- 과태료·과징금의 부과 처분이 있는 경우
-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및 영 제71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 및 영 제25조의2]

63

신고자 보상제도
Step 5

포상금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

포상금 지급 대상자 발굴
기관/권익위

1. 기관 추천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상시/정기)

[제출서류]
✓ 추천기관의 공문,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신고 및 조사 등에 관한 자료 사본 및 그 밖에 참고자료

[추천방법]
✓ 반드시 추천기관의 공문으로 추천

2. 위원회 직권 선정

조사·확인
권익위

- 추천자료 검토 및 필요시 자료 보완 요청
- 포상금 지급 제한 사유 등 조사 · 확인

심의·의결
권익위

- 포상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심의·의결

포상금 지급
신고자

- 지급 대상자에게 '결정서 정본'과 '결정통지서' 송부
- 포상금 계좌 입금

64

구조금 | **포상금** | 구조금

부패신고자 포상금 지급사례/예시

주방기자재 설치공사 입찰비리

○○도 소속 공무원이 E재단의 공사입찰 발주과정에서 낙찰자 선정에 당초 입찰 제안서 평가자료에 명시되지 않았던 평가기준을 임의로 제시하는 등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신고로 인하여 유사사례 예방 등이 인정되어 250**만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장병물품 납품비리

국군복지단 마트운영 위탁물품 신규품목 선정에 참여하였던 F회사 등 65개 군납업체들이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여 국군복지단 납품업체로 선정되어 수백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의혹 등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것으로 판단되어 2,200**만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고등학교 맞춤형 수업운영수당 편취

G고등학교 교감과 교장이 인재 육성 지원사업으로 지원해 준 보조금에서 교사 멘토링 수업 운영 계획에 따라 기초 영문법 수업을 한 것으로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고 청구하여 편취하고, △△교육청 담당자는 이를 묵인해준 의혹이 있음을 위원회에 신고함.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것으로 판단되어 500**만원의 포상금 지급 결정**

65

구조금 | **포상금** | 구조금

공익신고자 포상금 지급사례/예시

의료법 위반 신고 건 포상금 지급

신고내용

잘못된 의료행위

식염수 대신 증류수 사용

A병원

결과

특별감사 결과 증류수 오용 및 사건 은폐사실이 확인,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

500만원 포상금 지급 결정

아동 학대행위 건 포상금 지급

신고내용

보육아동 신체적·정서적 학대

아동복지시설인 B보육원

결과

피신고자들에게 징역 6월 ~ 징역 2년, 벌금 600만 원이 부과

1,000만원 포상금 지급 결정

폐수 무단 방류 건 포상금 지급

신고내용

폐수 하천 오염

C업체

결과

피신고업체에 조업정지

370만원 포상금 지급 결정

66

신고자 보상제도
Step 5

신고자 구조금

개념

구조금

신고자(협조자)와 그 친족·동거인이
부패·공익신고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부패신고자 구조금 지급제도는 '19.10.17. 이후 부패신고를 하는 경우 부터 적용

피해·비용 지출 사유

-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 전직·파견 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 원상회복 관련 쟁송 절차에 소요된 비용
-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
-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긴급구조금

- 피해의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권익위 심의·의결 이전에 우선 지급 가능(공익신고만 해당)

[적용법령: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7조]

67

신고자 보상제도
Step 5

구조금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

구조금 지급신청
신고자

[제출서류]
- 구조금 지급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신청인의 금융기관 예금통장 사본
- 수급자 증명서 (긴급구조금에 한함)
- 그 밖에 참고 자료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전자문서 등

조사·확인
권익위

- 신청인등에 대한 조사
  (부패·공익신고등과 신청인이 받은 피해 또는 지출한 비용의 상당인과관계, 지출한 비용의 종류 및 규모 등)
- 구조대상가액 산정
- 다른법령에 따른 구조금, 보상금등 지급대상여부등 확인
  (행정기관 등에 구조금 중복지급 방지를 위한 정보 제공 요청)

심의·의결
권익위

- 구조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 등 심의·의결

구조금 지급
신고자

- 지급 대상자에게 '결정서 정본'과 '결정통지서' 송부
- 구조금 계좌 입금

68

구조금 | 포상금 | **구조금**

공익신고자 구조금 지급사례/예시

불량 전분 제조·유통 신고 건 구조금 지급

신고내용

피신고자가 곰팡이가 생기거나 부패한 재료를 사용해 소맥전분을 제조, 유통하고 있다는 내용을 권익위에 신고

구조금 신청

공익신고 후 신분노출되어 권유에 의해 퇴사, 권익위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

결과

공익신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실직상태부터 재취업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임금상당액을 구조금으로 지급 결정

1,393만원 구조금 지급 결정

작업장 안전조치 소홀 신고 건 구조금 지급

신고내용

피신고자가 근로자 작업 시 추락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A 기관에 신고

구조금 신청

공익신고 후 해고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무사를 선임, 그에 소요된 비용을 권익위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

결과

공익신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노무사 선임 비용에 대해 구조금으로 지급 결정

88만원 구조금 지급

입찰비리 신고 건 구조금 지급

신고내용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이 전시·행사 등의 용역 입찰계약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적 노무를 강요하였음을 피신고자 소속기관에 신고

구조금 신청

신고 후 강제 전보, 직장내 괴롭힘 등으로 인해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며, 권익위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

결과

공익신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해당 진료비에 대해 구조금으로 지급 결정

50만원 구조금 지급

69

'20년도 권익위 신고자 보호정책 추진 사항

신고자 보호범위 확대 및 비밀보장 강화

- ✓ **공익신고 대상법률 추가(284개 → 467개로 확대, '20.11.20. 시행)를 통한 보호 사각지대 해소**
- ✓ **중과실로 인한 신고자 신분공개 시 제재 추진**(법 개정사항)
- ✓ **부패신고자도 공익신고자의 경우처럼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리신고 할 수 있도록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추진**(법 개정사항)

책임감면 확대

- ✓ **권익위 요구가 없더라도 공익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감면근거 마련 추진**(법 개정사항)
- ✓ 신고자가 **부패신고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책임감면**이 가능하도록 추진(법 개정사항)

긴급구조금 제도

- ✓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 권익위 심의·의결 이전에 구조금 지급**이 가능토록 제도 도입 추진(법개정사항)

보상 등 지원제도 강화

- ✓ **부패신고자 보상금 정률제(30%) 도입, 상한액(현행 30억) 폐지 추진**(시행령 개정사항)
- ✓ **공익신고자 보상금 정률제(30%) 도입, 상한액(현행 30억) 폐지 추진**(시행령 개정사항)

70

영화 '제보자'

71

부패는 지탄받을 행동

"적은 것을 얻으려다 큰 위험에 빠지는 일로
부패가 인식되도록 해야 한다
처음부터 **부패**가 발생하기 어렵도록
시스템을 고쳐나가야 한다
부패는 지탄받을 행동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

- 홍콩 '염정공서(홍콩의 반부패 수사 기구)'의 임무 중

지식인의 책무

"내 집단의 이익을 옹호하지 않음으로써
더 큰 집단에 대한 신뢰를 지키려는 노력은
인간 외에 그 어떤 동물 집단에서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배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행동은 **배신**이 아니라
어찌 보면 **지식인의 책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재승의 '과학의 눈으로 본 배신의 정체성' 중, 한겨레출판 <배신> 2008년

72

[협조 요청 사항]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확대에 따른 협조요청(현행 284개 → 개정 467개, '20. 11. 20. 시행)

- 공익신고 대상으로 새로 추가되는 법률(참고 1)을 알려드리니, 각 기관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미리 숙지하여 향후 공익신고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 공익신고기관의 경우는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전담창구 운영, 「공익신고 자체 운영규정」*(행정규칙, 조례, 사규 등)의 제정 또는 개정, 공익신고 보호·보상 안내 실시 필요

  * 「공익신고 자체 운영규정」 표준안 위원회 홈페이지 게시(「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 공익신고 대상법률 추가에 따라 새롭게 추가되는 공공기관은 특히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전담창구 운영' 필요

○ 권익위 배포 자료를 활용한 **부패·공익신고 교육 및 홍보 협조**

※ 권익위 홈페이지 청렴자료실에 교육자료 및 홍보용 리플릿·포스터 게시

○ 부패·공익침해행위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협조요청

- 부패신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공익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 기관 추천을 받고자 하오니, 적극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보상과로 문의(044-200-7740, 7742~7748)
- 또한, 신고자 보상금 지급에 따라 상환금 납부요청을 받은 기관에서는 상환금이 적기에 납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참고 1> 공익신고 대상에 새로 추가되는 법률(현행 284개 → 개정 467개)

연번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분야	소관부처	구분
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한 경쟁	공정거래위원회	현행
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건강	농림축산식품부	현행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	현행
4	가축전염병 예방법	건강	농림축산식품부	현행
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강	보건복지부	현행
6	개인정보 보호법	소비자의 이익	행정안전부	현행
7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안전	해양수산부	현행
8	건강검진기본법	건강	보건복지부	현행
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행
1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이익	고용노동부	현행
11	건설기계관리법	안전	국토교통부	현행
12	건설기술 진흥법	안전	국토교통부	현행
13	건설산업기본법	안전	국토교통부	현행
1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	현행
15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이익	국토교통부	현행
16	건축법	안전	국토교통부	현행
17	건축사법	안전	국토교통부	현행
18	검역법	건강	보건복지부	현행
19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이익	문화체육관광부	현행
20	경륜ㆍ경정법	공정한 경쟁	문화체육관광부	현행
21	경비업법	안전	경찰청	현행
22	계량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이익	산업통상자원부	현행
23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소비자의 이익	보건복지부	현행
2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현행
25	고용보험법	소비자의 이익	고용노동부	현행
26	골재채취법	환경	국토교통부	현행
2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이익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현행
28	공연법	안전	문화체육관광부	현행
2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환경	해양수산부	현행
30	공인중개사법	소비자의 이익	국토교통부	현행
31	공중위생관리법	건강	보건복지부	현행
32	관광진흥법	소비자의 이익	문화체육관광부	현행

연번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분야	소관부처	구분
33	광산안전법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현행
3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현행
35	교통안전법	안전	국토교통부	현행
3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안전	국토교통부	현행
37	국가기술자격법	소비자의 이익	고용노동부	현행
38	국민건강보험법	건강	보건복지부	현행
39	국민건강증진법	건강	보건복지부	현행
40	국민영양관리법	건강	보건복지부	현행
41	국민체육진흥법	공정한 경쟁	문화체육관광부	현행
4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	산림청	현행
43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공정한 경쟁	법무부	현행
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	국토교통부	현행
45	궤도운송법	안전	국토교통부	현행
46	근로복지기본법	소비자의 이익	고용노동부	현행
47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	현행
48	금융지주회사법	소비자의 이익	금융위원회	현행
49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안전	행정안전부	현행
5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	현행
5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안전	해양수산부	현행
52	내수면어업법	환경	해양수산부	현행
53	노인복지법	건강	보건복지부	현행
5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건강	보건복지부	현행
55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공정한 경쟁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현행
5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건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	현행
5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이익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현행
58	농약관리법	건강	농림축산식품부	현행
59	농어촌도로 정비법	안전	행정안전부	현행
60	농어촌정비법	안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현행
61	농업기계화 촉진법	안전	농림축산식품부	현행
62	농지법	환경	농림축산식품부	현행
63	실내공기질관리법	환경	환경부	현행

연번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분야	소관부처	구분
64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	소방청	현행
6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한 경쟁	공정거래위원회	현행
66	대기환경보전법	환경	환경부	현행
6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이익	금융위원회	현행
68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정한 경쟁	산업통상자원부	현행
69	대외무역법	소비자의 이익	산업통상자원부	현행
70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안전	국토교통부	현행
71	도로교통법	안전	경찰청	현행
72	도로법	안전	국토교통부	현행
73	도선법	안전	해양수산부	현행
74	도시가스사업법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현행
75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안전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현행
76	도시철도법	안전	국토교통부	현행
77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환경	환경부	현행
7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한 경쟁	공정거래위원회	현행
79	동물보호법	안전	농림축산식품부	현행
8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행
81	말산업 육성법	소비자의 이익	농림축산식품부	현행
82	먹는물관리법	건강	환경부	현행
83	모자보건법	건강	보건복지부	현행
84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	해양수산부	현행
8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소비자의 이익	문화체육관광부	현행
86	문화재보호법	환경	문화체육관광부/문화재청	현행
87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이익	기획재정부	현행
88	물류정책기본법	소비자의 이익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현행
89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	현행
9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이익	공정거래위원회	현행
9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환경	산업통상자원부	현행
9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산림청	현행
93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건강	법무부	현행
94	보험업법	소비자의 이익	금융위원회	현행
95	복권 및 복권기금법	소비자의 이익	기획재정부	현행
9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공정한 경쟁	특허청	현행
97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이익	산업통상자원부	현행
98	비료관리법	건강	농림축산식품부	현행
99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행
100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	경찰청	현행

연번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분야	소관부처	구분
101	사료관리법	건강	농림축산식품부	현행
102	사방사업법	환경	산림청	현행
10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소비자의 이익	보건복지부	현행
104	사회복지사업법	안전	보건복지부	현행
105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이익	보건복지부	현행
106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환경	산림청	현행
107	산림보호법	환경	산림청	현행
108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	산림청	현행
10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공정한 경쟁	산업통상자원부	현행
11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소비자의 이익	산업통상자원부	현행
111	산업디자인진흥법	소비자의 이익	산업통상자원부	현행
112	산업안전보건법	안전	고용노동부	현행
1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비자의 이익	고용노동부	현행
114	산업표준화법	소비자의 이익	산업통상자원부	현행
115	산지관리법	환경	산림청	현행
116	상표법	소비자의 이익	특허청	현행
117	상호저축은행법	소비자의 이익	금융위원회	현행
118	새마을금고법	소비자의 이익	행정안전부	현행
119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건강	보건복지부	현행
12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	현행
12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안전	원자력안전위원회	현행
122	석면안전관리법	안전	환경부	현행
12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소비자의 이익	산업통상자원부	현행
124	선박안전법	안전	해양수산부	현행
125	소금산업 진흥법	건강	해양수산부	현행
126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환경	산림청	현행
127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안전	소방청	현행
128	소방시설공사업법	안전	소방청	현행
129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의 이익	공정거래위원회	현행
130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소비자의 이익	산업통상자원부	현행
131	소하천정비법	환경	행정안전부	현행
132	송유관 안전관리법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현행
133	수상에서의수색·구조등에관한법률	안전	해양경찰청	현행

연번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분야	소관부처	구분
134	수도법	환경	환경부	현행
135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건강	해양수산부	현행
136	수산업법	환경	해양수산부	현행
137	수산자원관리법	환경	해양수산부	현행
138	수상레저안전법	안전	해양경찰청	현행
139	물환경보전법	환경	환경부	현행
140	습지보전법	환경	환경부/해양수산부	현행
141	승강기 안전관리법	안전	행정안전부	현행
14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	국토교통부	현행
143	식물방역법	건강	농림축산식품부	현행
144	식물신품종 보호법	건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현행
145	식품산업진흥법	건강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현행
146	식품안전기본법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행
147	식품위생법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행
14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소비자의 이익	산업통상자원부	현행
14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이익	금융위원회	현행
150	아동복지법	안전	보건복지부	현행
151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이익	여성가족부	현행
152	아이돌봄 지원법	소비자의 이익	여성가족부	현행
153	악취방지법	환경	환경부	현행
15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현행
15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	현행
156	약사법	건강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행
157	양곡관리법	건강	농림축산식품부	현행
15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안전	행정안전부	현행
15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행
160	어선법	안전	해양수산부	현행
161	어장관리법	환경	해양수산부	현행
162	어촌·어항법	환경	해양수산부	현행

연번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분야	소관부처	구분
16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현행
16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소비자의 이익	국토교통부	현행
165	여신전문금융업법	소비자의 이익	금융위원회	현행
16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안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행
167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	현행
168	영유아보육법	소비자의 이익	보건복지부	현행
16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이익	문화체육관광부	현행
170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환경	산업통상자원부	현행
17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환경	행정안전부	현행
172	외국환거래법	소비자의 이익	기획재정부	현행
173	외식산업 진흥법	소비자의 이익	농림축산식품부	현행
174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안전	원자력안전위원회	현행
175	원자력안전법	안전	원자력안전위원회	현행
176	위험물안전관리법	안전	소방청	현행
177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이익	금융위원회	현행
178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안전	행정안전부	현행
179	유아교육법	소비자의 이익	교육부	현행
180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건강	산업통상자원부	현행
181	은행법	소비자의 이익	금융위원회	현행
182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이익	문화체육관광부	현행
18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건강	보건복지부	현행
184	의료기기법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행
18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건강	보건복지부	현행
186	의료법	건강	보건복지부	현행
187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환경	환경부	현행
188	인삼산업법	건강	농림축산식품부	현행
189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건강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행
19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비자의 이익	국토교통부	현행

연번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분야	소관부처	구분
19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건강	산림청	현행
192	입양특례법	소비자의 이익	보건복지부	현행
193	자격기본법	소비자의 이익	교육부/고용노동부	현행
194	자동차관리법	안전	국토교통부	현행
195	자연공원법	환경	환경부	현행
196	자연재해대책법	안전	행정안전부	현행
197	자연환경보전법	환경	환경부	현행
19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	현행
199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환경	환경부	현행
20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건강	보건복지부	현행
20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이익	보건복지부	현행
202	장애인복지법	소비자의 이익	보건복지부	현행
2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안전	행정안전부	현행
204	재해구호법	안전	행정안전부	현행
205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안전	행정안전부	현행
206	전기공사업법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현행
207	전기사업법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현행
208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현행
209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	현행
210	전기통신사업법	소비자의 이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현행
211	전력기술관리법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현행
21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소비자의 이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현행
21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이익	공정거래위원회	현행
21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건강	농림축산식품부	현행
215	정보통신공사업법	안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행
216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소비자의 이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행
21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이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현행
21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건강	보건복지부	현행

연번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분야	소관부처	구분
219	제대혈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건강	보건복지부	현행
22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환경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현행
221	제품안전기본법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현행
222	종자산업법	건강	농림축산식품부	현행
22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이익	금융위원회	현행
224	주택법	안전	국토교통부	현행
22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공정한 경쟁	중소벤처기업부	현행
22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공정한 경쟁	보건복지부	현행
227	지역보건법	건강	보건복지부	현행
228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안전	행정안전부	현행
229	지하수법	환경	국토교통부	현행
230	직업안정법	소비자의 이익	고용노동부	현행
23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건강	고용노동부	현행
232	집단에너지사업법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현행
233	철도사업법	소비자의 이익	국토교통부	현행
234	철도안전법	안전	국토교통부	현행
235	청소년 보호법	건강	여성가족부	현행
236	청소년활동 진흥법	안전	여성가족부	현행
23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안전	문화체육관광부	현행
23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	소방청	현행
239	초지법	환경	농림축산식품부	현행
240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	경찰청	현행
241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행
242	축산법	소비자의 이익	농림축산식품부	현행
243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건강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현행
244	토양환경보전법	환경	환경부	현행
245	폐기물관리법	환경	환경부	현행

연번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분야	소관부처	구분
246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	현행
24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이익	공정거래위원회	현행
248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건강	경찰청	현행
24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한 경쟁	공정거래위원회	현행
250	하수도법	환경	환경부	현행
251	하천법	환경	국토교통부	현행
252	학교급식법	건강	교육부	현행
253	학교보건법	건강	교육부	현행
25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안전	교육부	현행
25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	현행
256	한국마사회법	공정한 경쟁	농림축산식품부	현행
257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이익	공정거래위원회	현행
258	항공안전법	안전	국토교통부	현행
259	항공보안법	안전	국토교통부	현행
260	항로표지법	안전	해양수산부	현행
261	항만법	안전	해양수산부	현행
262	항만운송사업법	소비자의 이익	해양수산부	현행
263	해사안전법	안전	해양수산부	현행
26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	해양수산부	현행
265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	해양수산부	현행
266	해양환경관리법	환경	해양수산부	현행
267	해운법	소비자의 이익	해양수산부	현행
268	혈액관리법	건강	보건복지부	현행
26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소비자의 이익	국토교통부	현행
270	화장품법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	현행
271	화학물질관리법	안전	환경부	현행
27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	현행
273	환경보건법	환경	환경부	현행
274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	현행
275	환경영향평가법	환경	환경부	현행
27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건강	보건복지부	현행

연번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분야	소관부처	구분
277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고용노동부	현행
278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국방부	현행
27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공정한 경쟁	금융위원회	현행
28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중소벤처기업부	현행
281	방위사업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국방부	현행
28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안전	여성가족부	추가
28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안전	법무부	추가
284	의료급여법	건강	보건복지부	추가
28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안전	여성가족부	추가
286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공정거래위원회	추가
28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소비자이익	산림청	추가
28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안전	여성가족부	추가
28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안전	법무부	추가
290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	추가
291	식품ㆍ의약품분야시험ㆍ검사등에관한법률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	추가
29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추가
293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추가
29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금융위원회	추가
295	방송법	소비자이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추가
296	예금자보호법	소비자이익	금융위원회	추가
297	전자금융거래법	소비자이익	금융위원회	추가
298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환경	국토교통부	추가
299	결핵예방법	건강	보건복지부	추가
300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경찰청	추가
30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기획재정부	추가
302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 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금융위원회	추가
30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행정안전부	추가

연번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분야	소관부처	구분
30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금융위원회	추가
305	담배사업법	건강	기획재정부	추가
30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국토교통부	추가
307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국토교통부	추가
308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안전	행정안전부	추가
309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소비자이익	금융위원회	추가
31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국토교통부	추가
311	소음·진동관리법	환경	환경부	추가
31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이익	방송통신위원회	추가
313	유통산업발전법	공정한 경쟁	산업통상자원부	추가
314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안전	행정안전부	추가
315	저작권법	공정한 경쟁	문화체육관광부	추가
31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소비자이익	문화체육관광부	추가
317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건강	소방청	추가
318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안전	국토교통부	추가
319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환경	해양수산부	추가
320	건축물관리법	안전	국토교통부	추가
32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고용노동부	추가
32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건강	보건복지부	추가
323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안전	국토교통부	추가
32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행정안전부	추가
325	국가보안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법무부	추가
326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안전	국토교통부	추가
32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국방부	추가
32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보건복지부	추가
329	국민연금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보건복지부	추가
330	국유재산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기획재정부	추가
331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안전	해양수산부	추가

연번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분야	소관부처	구분
33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안전	해양수산부	추가
333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법무부	추가
334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건강	국방부	추가
335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국방부	추가
336	군사기밀보호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국방부	추가
337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국방부	추가
338	군형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국방부	추가
339	귀속재산처리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기획재정부	추가
340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고용노동부	추가
34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고용노동부	추가
34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금융위원회	추가
343	기계설비법	안전	국토교통부	추가
344	기초연금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보건복지부	추가
34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보건복지부	추가
346	노후준비 지원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보건복지부	추가
347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이익	농림축산식품부	추가
348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	환경부	추가
349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이익	국토교통부	추가
350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환경	국토교통부	추가
35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환경	국토교통부	추가
35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소비자의 이익	국토교통부	추가
35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국가보훈처	추가
354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안전	경찰청/대검찰청/법무부	추가
355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환경	환경부	추가
356	민방위기본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행정안전부	추가
357	민·군기술협력사업촉진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	추가
358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보건복지부	추가
359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이익	방송통신위원회	추가

연번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분야	소관부처	구분
360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법무부	추가
361	병역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국방부/병무청	추가
362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건강	보건복지부	추가
363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건강	보건복지부	추가
364	보안관찰법	안전	법무부	추가
36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안전	법무부	추가
36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국가보훈처	추가
367	부정수표 단속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법무부	추가
36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통일부	추가
369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행정안전부	추가
370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해양수산부	추가
371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소비자의 이익	경찰청	추가
37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보건복지부	추가
37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건강	환경부	추가
37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금융위원회	추가
375	석탄산업법	소비자의 이익	산업통상자원부	추가
376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안전	법무부	추가
377	선박직원법	안전	해양수산부	추가
378	선박평형수 관리법	환경	해양수산부	추가
379	선원법	안전	해양수산부	추가
380	소방기본법	안전	소방청	추가
381	소방장비관리법	안전	소방청	추가
382	수목원·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환경	산림청	추가
383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이익	해양수산부	추가
384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소비자의 이익	해양수산부	추가
385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	환경부	추가
386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안전	해양수산부	추가
387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	추가

연번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분야	소관부처	구분
388	신용협동조합법	소비자의 이익	금융위원회	추가
389	아동수당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보건복지부	추가
390	에너지법	소비자의 이익	산업통상자원부	추가
391	연안관리법	환경	해양수산부	추가
392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안전	해양경찰청	추가
393	영해 및 접속수역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외교부	추가
394	예비군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국방부	추가
395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환경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환경부	추가
396	우편법	소비자의 이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가
397	위생용품 관리법	건강	식품의약품안전처	추가
39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이익	보건복지부	추가
39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보건복지부	추가
400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공정한 경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추가
401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소비자의 이익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추가
402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소비자의 이익	금융위원회	추가
403	임금채권보장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고용노동부	추가
404	자원순환기본법	환경	환경부	추가
40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산업통상자원부	추가
406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보건복지부	추가
407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보건복지부	추가
40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교육부	추가
40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고용노동부	추가
410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중소벤처기업부	추가
411	장애인연금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보건복지부	추가
41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보건복지부	추가
41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보건복지부	추가
414	장애인·고령자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국토교통부	추가
415	장애인·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보건복지부	추가

연번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분야	소관부처	구분
416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보건복지부	추가
417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경찰청	추가
418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환경	국무조정실	추가
41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소비자의 이익	금융위원회	추가
420	전기통신기본법	소비자의 이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가
421	전자서명법	소비자의 이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추가
422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공정한 경쟁	농림축산식품부	추가
423	전파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추가
424	주거급여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국토교통부	추가
425	주민투표법	공정한 경쟁	행정안전부	추가
426	주차장법	안전	국토교통부	추가
427	중소기업은행법	소비자의 이익	금융위원회	추가
428	지뢰 등 특정 재래식 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안전	국방부	추가
429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국방부	추가
430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이익	농림축산식품부	추가
431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안전	기상청	추가
43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	국토교통부	추가
43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안전	경찰청	추가
43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안전	국토교통부	추가
435	청소년 기본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여성가족부	추가
436	청소년복지 지원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여성가족부	추가
437	청원경찰법	안전	경찰청	추가
438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안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추가
439	출입국관리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법무부	추가
440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안전	법무부	추가
44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공정한 경쟁	국토교통부	추가
442	통신비밀보호법	소비자의 이익	법무부	추가
443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관한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국방부	추가

연번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	분야	소관부처	구분
444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안전	법무부	추가
445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안전	법무부	추가
446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이익	교육부	추가
447	한부모가족지원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여성가족부	추가
448	항공·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	안전	국토교통부	추가
449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환경	해양수산부	추가
450	해양경비법	안전	해양경찰청	추가
45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안전	해양수산부	추가
45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환경	해양수산부	추가
453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건강	보건복지부	추가
454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안전	경찰청	추가
455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 학물 질·생물 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산업통상자원부	추가
456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	환경부	추가
457	환자안전법	건강	보건복지부	추가
45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기획재정부	추가
459	지방세기본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행정안전부	추가
460	지방재정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행정안전부	추가
461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고용노동부	추가
46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안전	여성가족부	추가
463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안전	법무부	추가
464	공공주택특별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국토교통부	추가
465	공항시설법	안전	국토교통부	추가
466	항공사업법	공정한 경쟁	국토교통부	추가
467	공동주택관리법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국토교통부	추가

III

청렴포털 설명자료

공공기관
청렴포털 2단계
Clean potal
국민권익위원회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Clean potal
공공기관
청렴포털 2단계
국민권익위원회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1 사업개요
연차별 사업내용
목표시스템 구성도
2단계 사업개요

01. 연차별 사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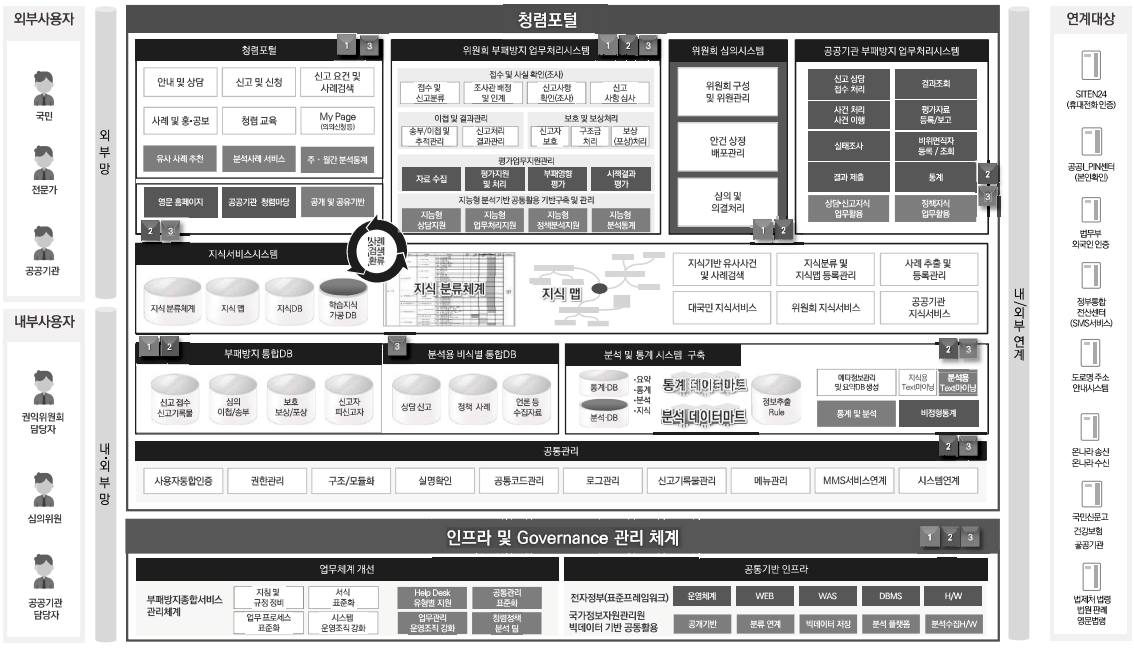
CHAPTER 1
사업개요

국민권익위원회 반부패 업무	공공기관 반부패 업무	분석 및 공유 정책 환류
2018년 1단계 45억	2019년 2단계 33억	2020년 3단계 42억
1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1 공공기관(범 정부)에 신고	1 범정부 지능형 신고
2 청렴포털	2 청렴마당	2 지능형 청렴포털
3 국민권익위원회(기본업무+정책)	3 청렴도+인식도	3 위원회(지능형 맞춤 업무)
4 심의시스템	4 심의지원	4 심의 지식 제공
5 공공기관(자료제출)	5 지식분류 및 사례(공공기관 중심)	5 공공기관(지능형 맞춤 업무)
6 지식분류 및 사례(위원회 중심)	6 공통이관 표준서식제공	6 지능형 분석기반 마련
7 자료이관	7 인프라 구축(이중화)	7 분석결과 등 정책환류
8 인프라 구축(싱글)	8 행정망 접속 및 통계구축	

2

02. 목표시스템 구성도

CHAPTER 1
사업개요



3

03. 2단계 사업 개요

CHAPTER 1
사업개요

사 업 명	청렴포털 구축(2단계)
주요 구축내용	공공기관 표준 신고관리시스템 구축 / 청렴마당 구축 / 청렴도 관리기능 구축 / 공공기관시스템 행정망 사용 환경 구축
사업기간	2019.6.20 ~ 2020.02.15 (240일)
계약금액	26.3 억 원 (VAT포함)
주관기관 전문기관	국민권익위원회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사 업 자	ICTWAY 아이씨티웨이(주)

4

Clean potal

공공기관
청렴포털 2단계

국민권익위원회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2 추진배경

- 공공기관 불편사항
- 국민 불편사항
- 국민 요청사항

5

01. 공공기관 불편사항

CHAPTER 2
추진배경

공공기관 시스템 요구사항

'18. 5월

820개 기관 中

413개 기관
신고 사례 등 공유 요청
50.4%

285개 기관
자동화 된 온라인 신고시스템 제공 요청
34.8%

기타 의견

- ✓ 내부망에서 시스템 접속 가능하도록 개선 필요
- ✓ 시스템에서 청렴도 및 시책평가 결과 검색 기능 필요
- ✓ 입력자료 일괄 다운로드 및 검색 기능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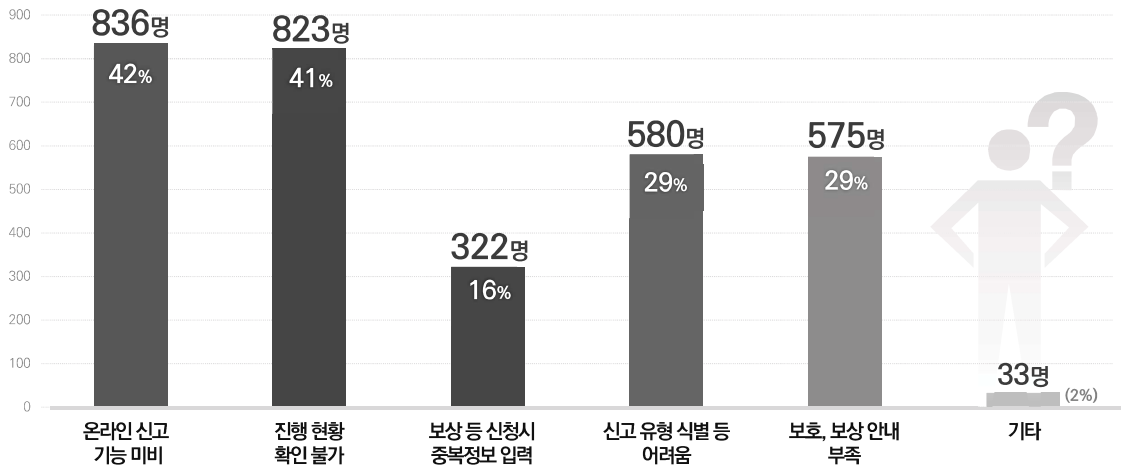
6

02. 국민 불편사항

CHAPTER 2
추진배경

공공기관 신고 시 불편사항 복수선택

'19.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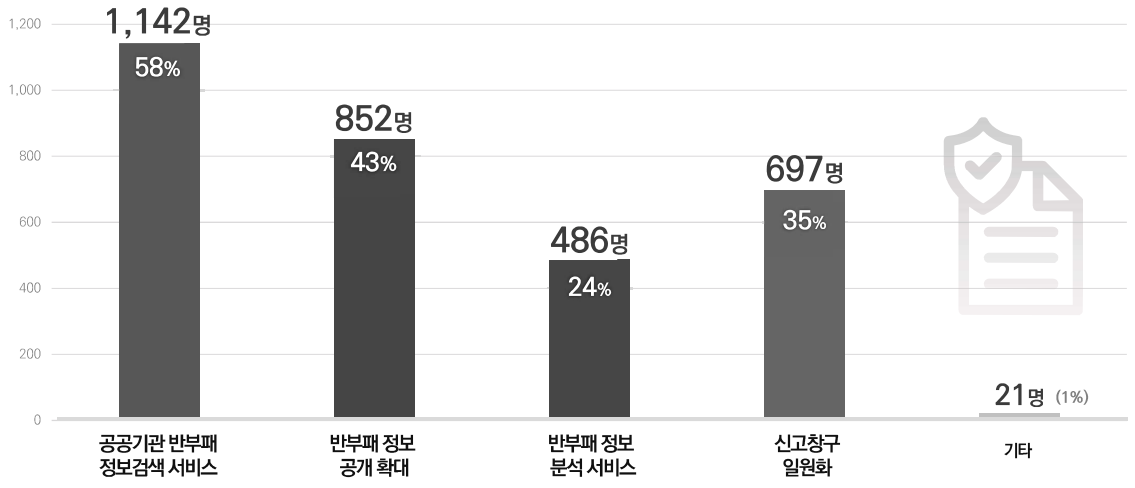


7

03. 국민 요청사항

CHAPTER 2
추진배경

반부패 정책 참여 강화를 위해 도입이 시급한 정책 복수선택



8

국민권익위원회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3 표준 신고관리시스템

3-1 신고관리시스템 이용 신청 및 특성 입력

3-2 공공기관 신고 관련 주요 기능 (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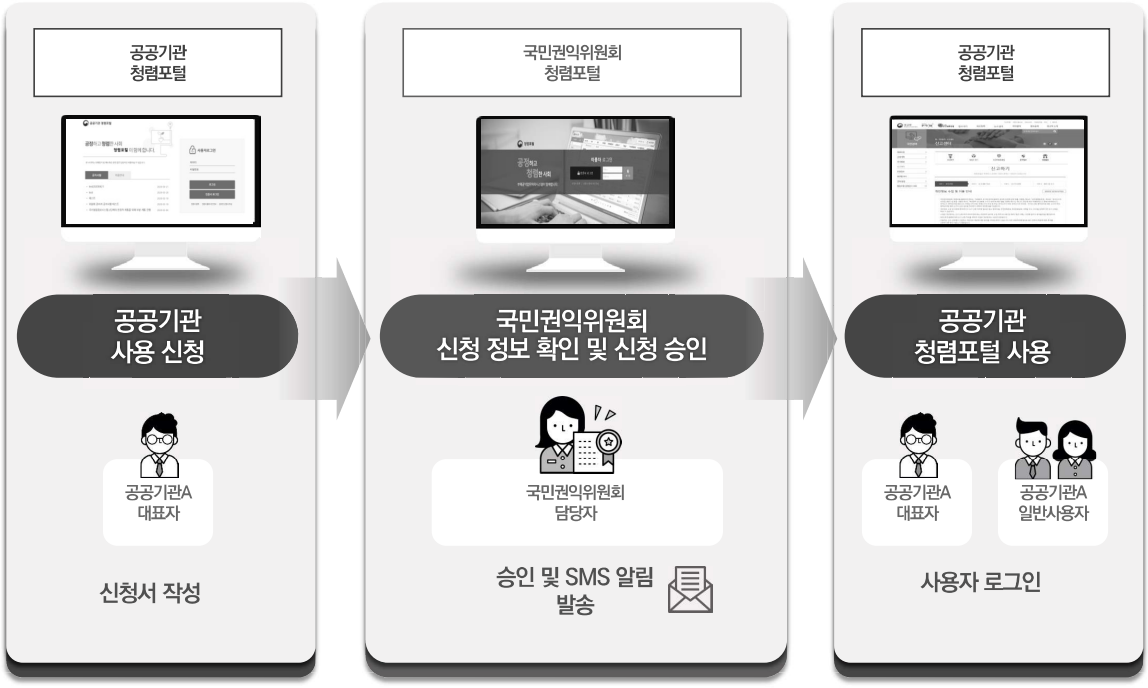
3-3 신고 접수, 처리, 사후관리 등 주요 기능 (업무 담당자)

9

01 신고관리시스템 이용 신청 및 특성 입력

CHAPTER 3
표준 신고관리시스템

1-1 청렴포털 표준 신고관리시스템 사용 신청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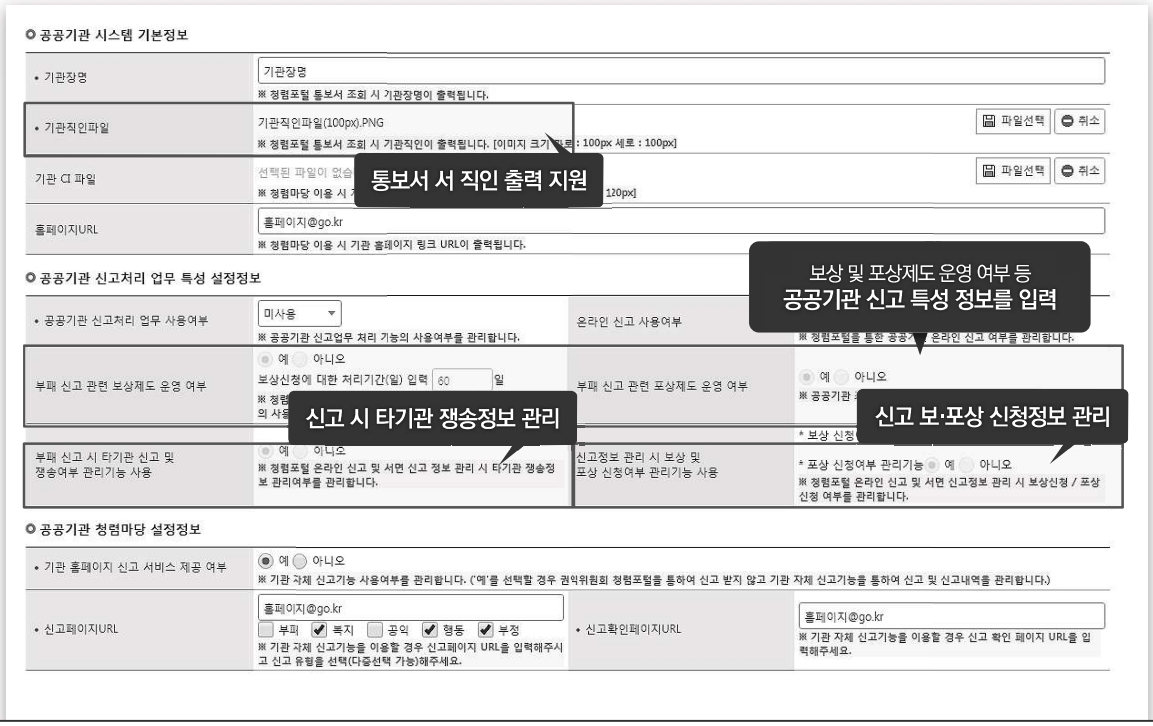


10

01 신고관리시스템 이용 신청 및 특성 입력

CHAPTER 3
표준 신고관리시스템

1-1 청렴포털 표준 신고관리시스템 신청서 작성



11

01 신고관리시스템 이용 신청 및 특성 입력

CHAPTER 3
표준 신고관리시스템

1-2 기관 분류체계 생성

01 신고관리시스템 이용 신청 및 특성 입력

CHAPTER 3
표준 신고관리시스템

1-2 우리기관 분류체계관리 – 분류체계 생성 (표준분류체계 선택)

01 신고관리시스템 이용 신청 및 특성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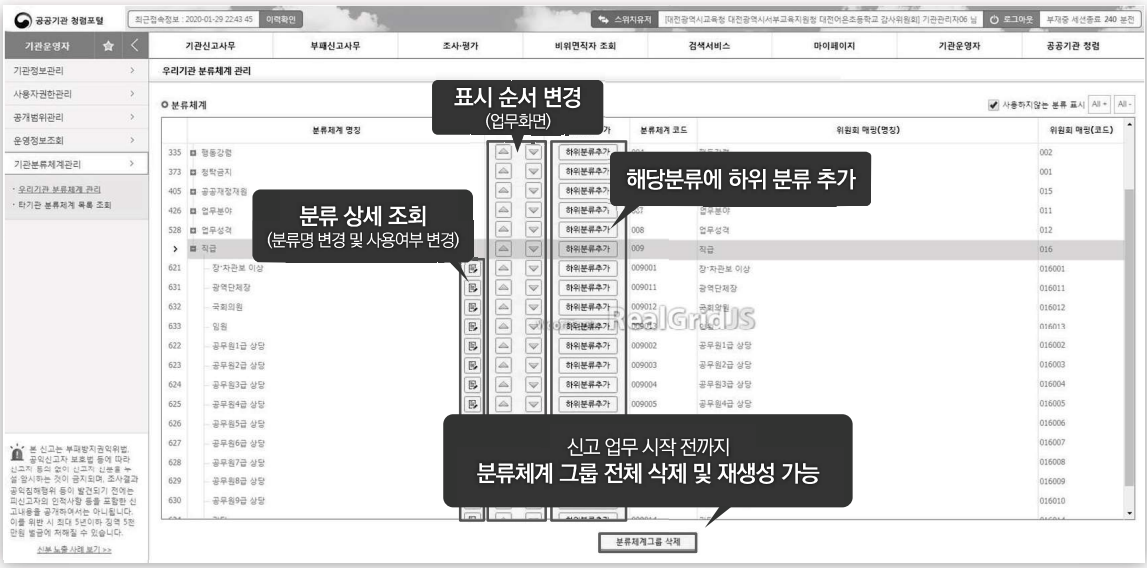
CHAPTER 3
표준 신고관리시스템

1-2 우리기관 분류체계관리 – 분류체계 생성 (선택 분류체계 내용 확인)

01 신고관리시스템 이용 신청 및 특성 입력

CHAPTER 3
표준 신고관리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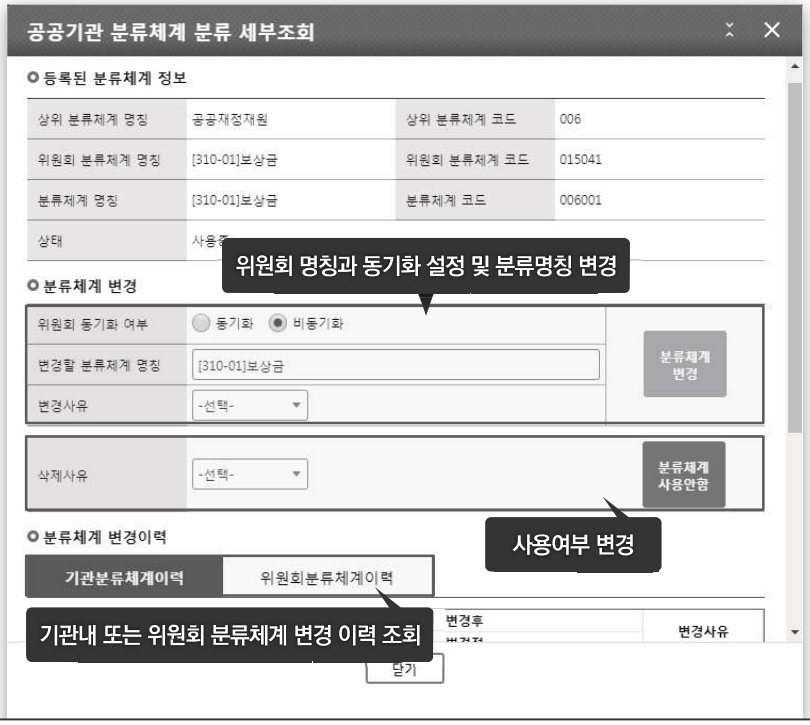
1-2 우리기관 분류체계관리 – 분류체계 조회



01 신고관리시스템 이용 신청 및 특성 입력

CHAPTER 3
표준 신고관리시스템

1-2 우리기관 분류체계관리 – 분류체계 편집



16

01 신고관리시스템 이용 신청 및 특성 입력

CHAPTER 3
표준 신고관리시스템

1-2 우리기관 분류체계관리 – 분류체계 편집

17

01 신고관리시스템 이용 신청 및 특성 입력

CHAPTER 3
표준 신고관리시스템

1-2 우리기관 분류체계관리 – 분류체계 편집

18

01 신고관리시스템 이용 신청 및 특성 입력

CHAPTER 3
표준 신고관리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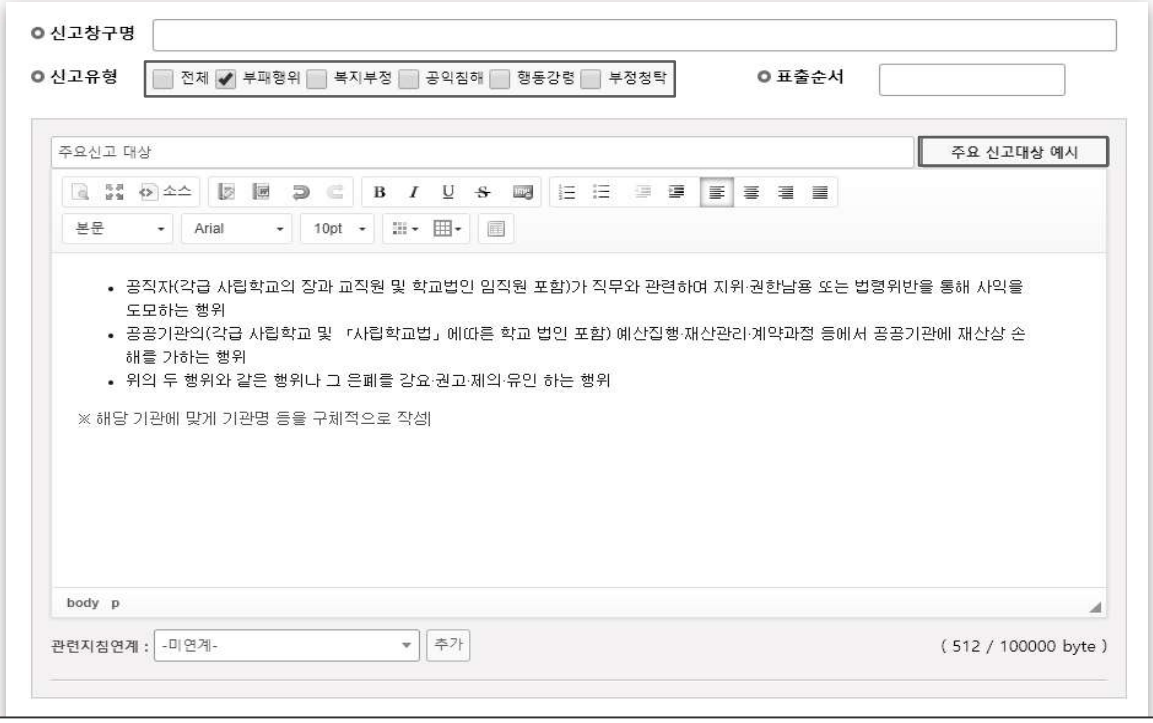
1-3 신고제도 개요 등록

19

01 신고관리시스템 이용 신청 및 특성 입력

CHAPTER 3 표준 신고관리시스템

1-3 신고제도 개요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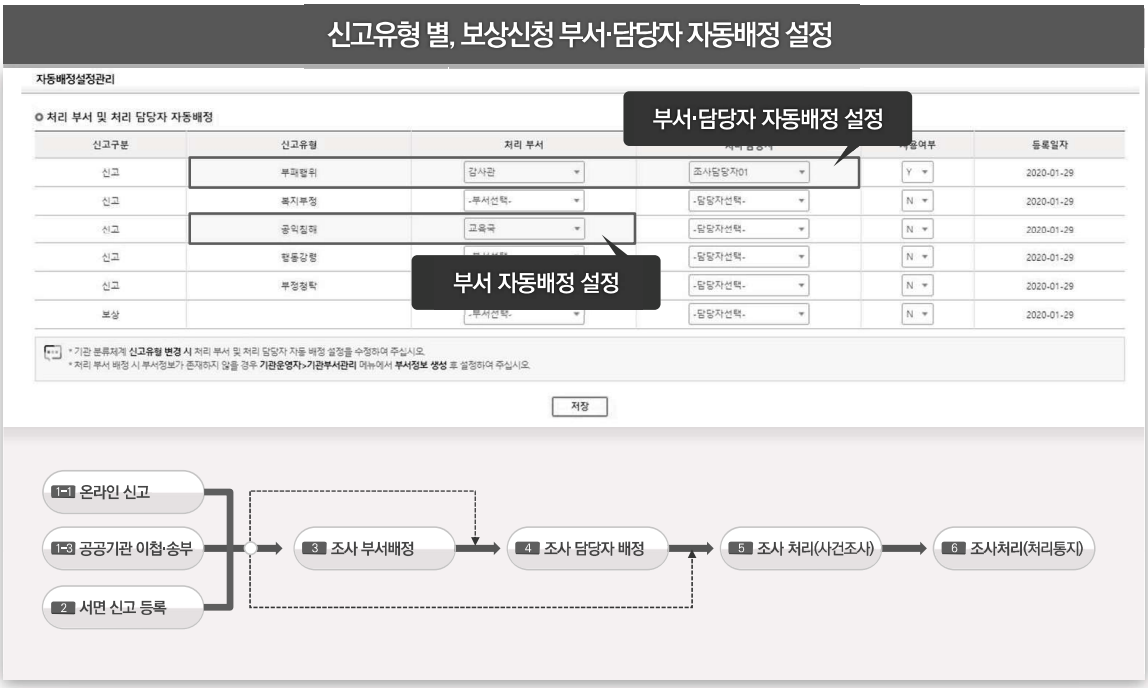


20

01 신고관리시스템 이용 신청 및 특성 입력

CHAPTER 3 표준 신고관리시스템

1-4 공공기관 특성정보 관리 (자동배정 설정 관리)



21

02 공공기관 신고 관련 주요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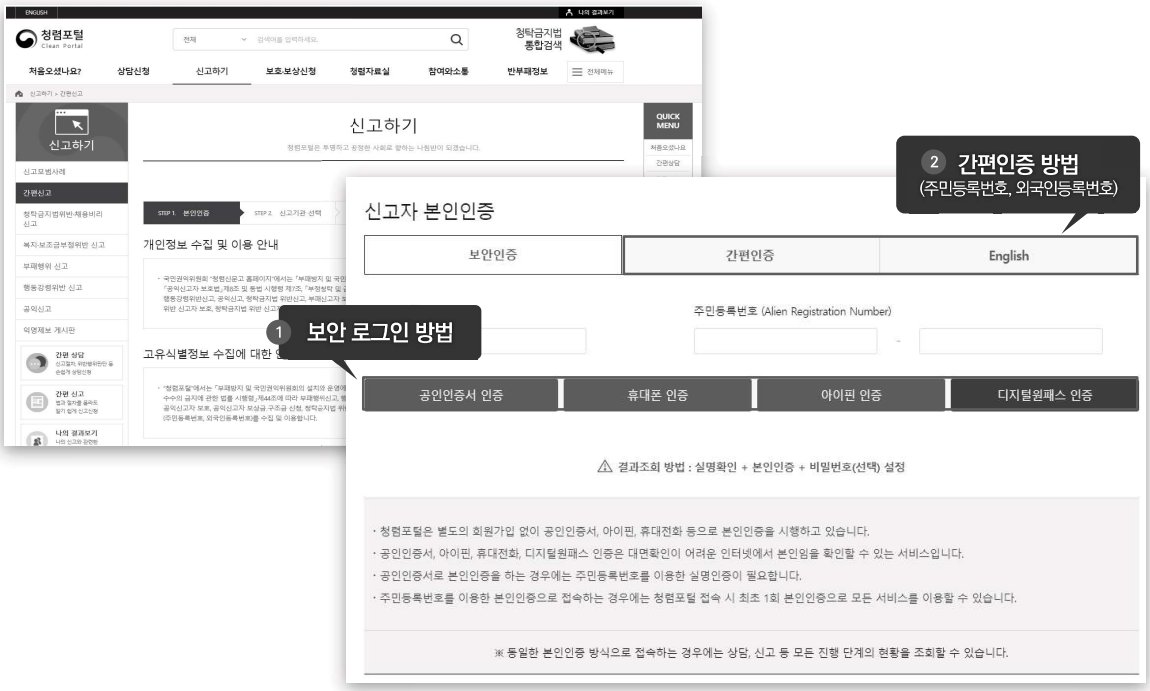
CHAPTER 3
표준 신고관리시스템

2-1 신고하기 메뉴 선택

02 공공기관 신고 관련 주요 기능

CHAPTER 3
표준 신고관리시스템

2-2 로그인 하기



02 공공기관 신고 관련 주요 기능

CHAPTER 3
표준 신고관리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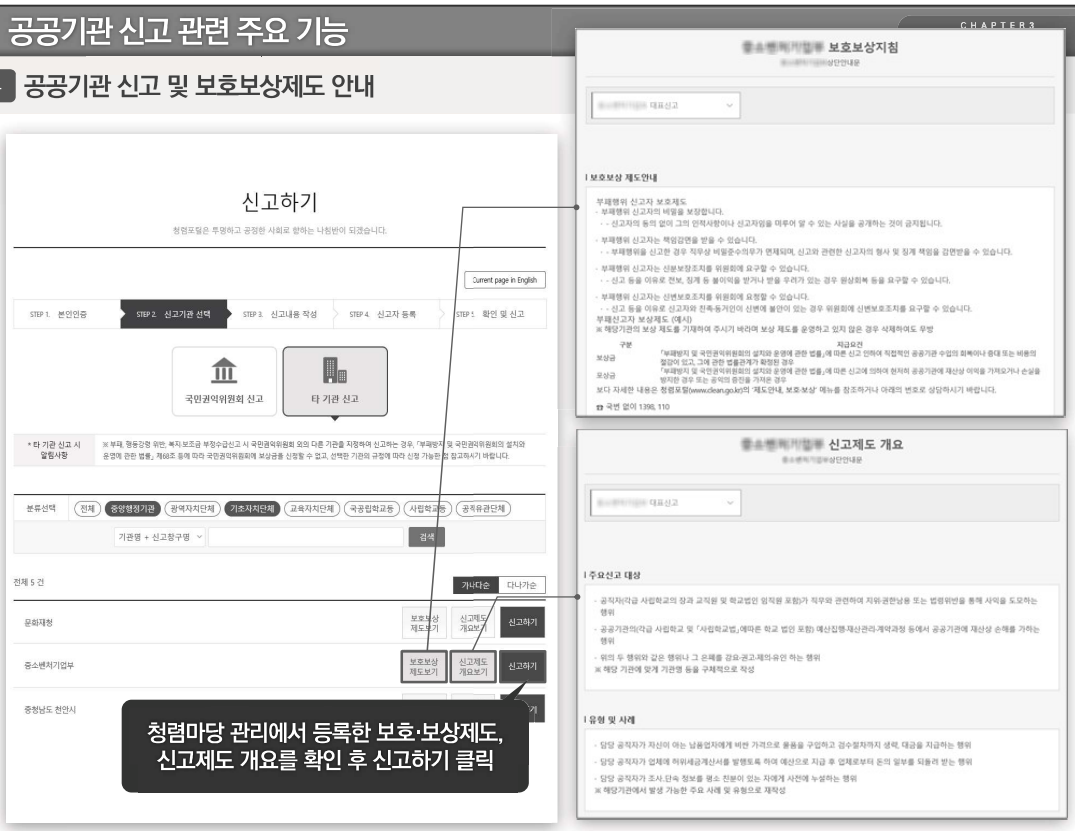
2-3 신고기관 선택하기

24

02 공공기관 신고 관련 주요 기능

CHAPTER 3

2-4 공공기관 신고 및 보호보상제도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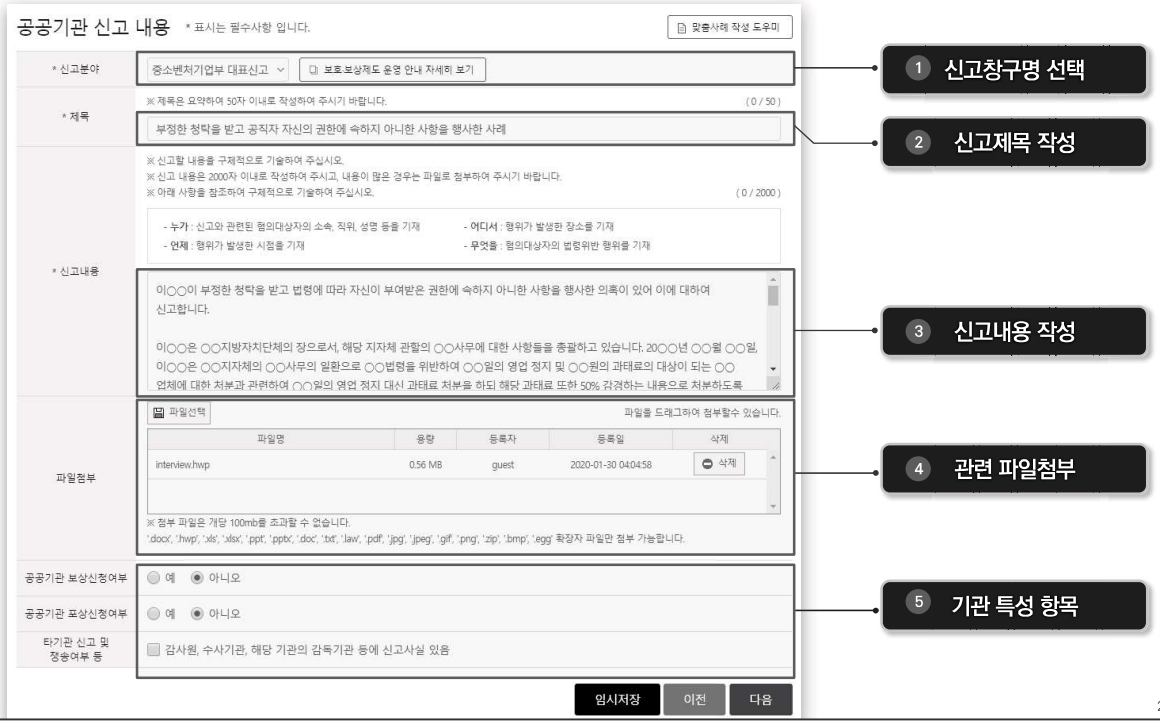


25

02 공공기관 신고 관련 주요 기능

CHAPTER 3
표준 신고관리시스템

2-5 신고내용 작성



26

02 공공기관 신고 관련 주요 기능

CHAPTER 3
표준 신고관리시스템

2-6 신고자, 피신고자 정보입력

27

02 공공기관 신고 관련 주요 기능

CHAPTER 3
표준 신고관리시스템

2-7 진행단계 알리 및 처리 결과 통지방식 선택

신고하기에서 진행단계 알림 문자메세지 통보 및 처리결과 통지방식 선택

처리결과 통지방식
- 우편으로 받기
- 청렴포털 직접 조회

진행단계 알림방식
- 문자메세지로 받기
- 청렴포털 직접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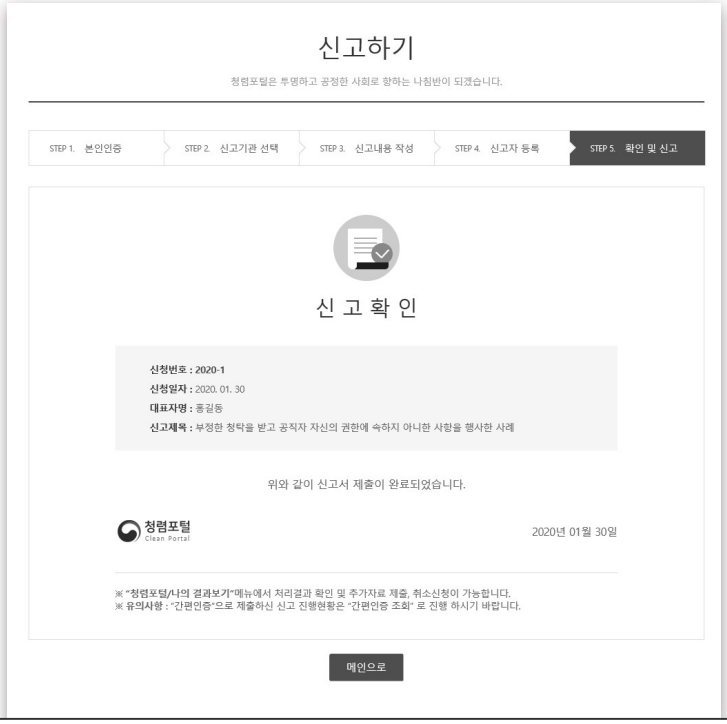
신분 공개 동의여부 확인
- 조사 확인과정
- 타기관 조사과정

28

02 공공기관 신고 관련 주요 기능

CHAPTER 3
표준 신고관리시스템

2-8 신고 제출 및 확인



29

02 공공기관 신고 관련 주요 기능

CHAPTER 3
표준 신고관리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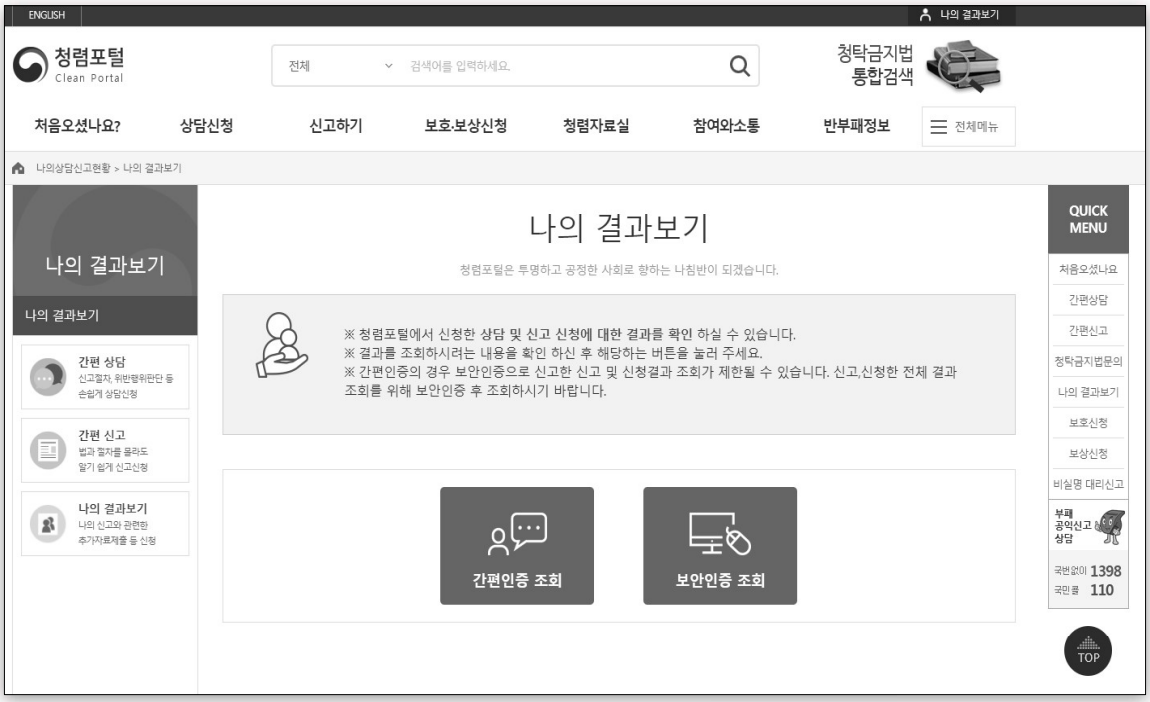
2-9 결과보기 메뉴 찾아가기

30

02 공공기관 신고 관련 주요 기능

CHAPTER 3
표준 신고관리시스템

2-10 결과보기 로그인



31

02 공공기관 신고 관련 주요 기능

CHAPTER 3
표준 신고관리시스템

2-11 신고내역 목록

32

02 공공기관 신고 관련 주요 기능

CHAPTER 3
표준 신고관리시스템

2-12 신고내역 내용 확인

33

02 공공기관 신고 관련 주요 기능

CHAPTER 3
표준 신고관리시스템

2-13 변경신청하기

34

02 공공기관 신고 관련 주요 기능

CHAPTER 3
표준 신고관리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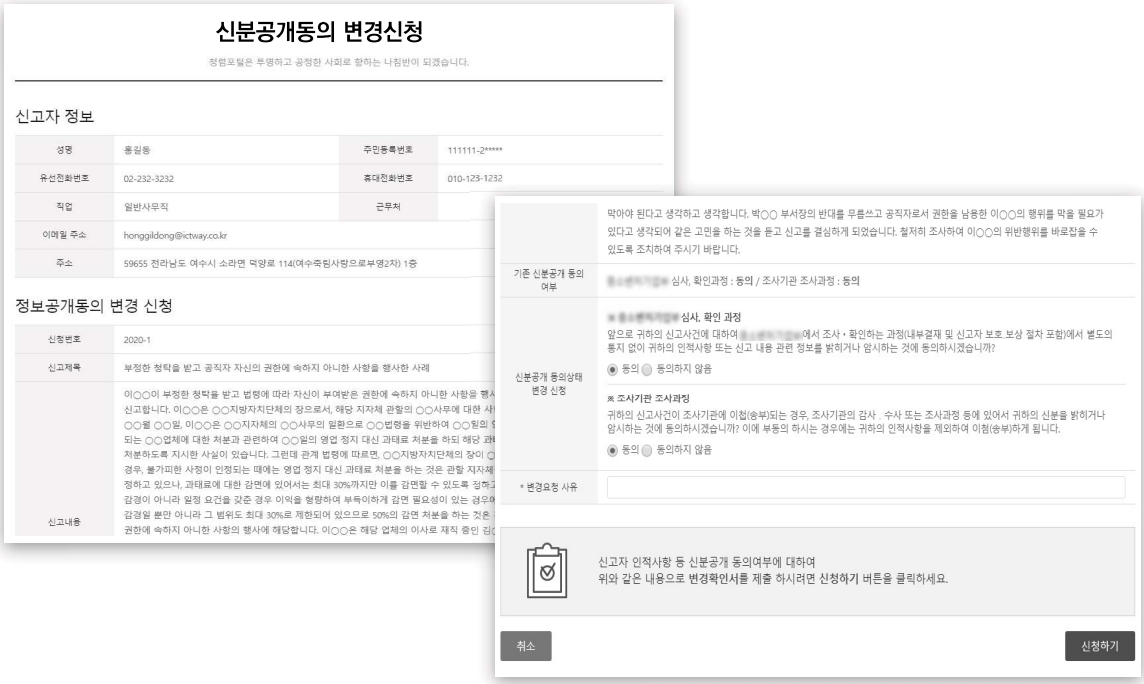
2-14 신고취소요청

35

02 공공기관 신고 관련 주요 기능

CHAPTER 3
표준 신고관리시스템

2-15 신분공개동의 변경신청



36

02 공공기관 신고 관련 주요 기능

CHAPTER 3
표준 신고관리시스템

2-16 추가자료제출

37

02 공공기관 신고 관련 주요 기능

CHAPTER 3
표준 신고관리시스템

2-17 신고조사결과 이의신청

38

02 공공기관 신고 관련 주요 기능

CHAPTER 3
표준 신고관리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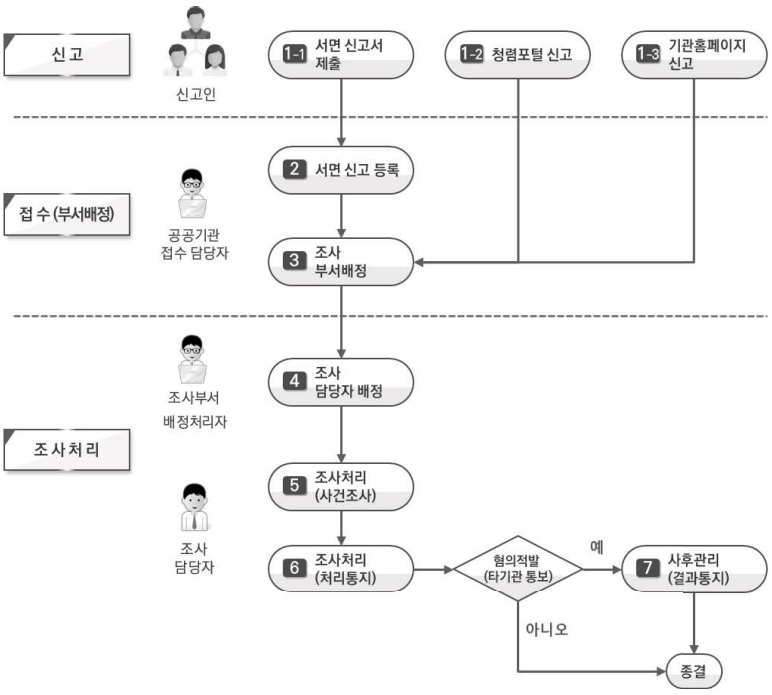
2-18 공공기관 보상신청

39

03 신고 접수·처리·사후관리 등 주요 기능

CHAPTER 3
표준 신고관리시스템

3-1 공공기관 신고 처리 개요 (신고처리 프로세스)



03 신고 접수·처리·사후관리 등 주요 기능

CHAPTER 3
표준 신고관리시스템

3-1 공공기관 신고 처리 개요 (시스템 권한별 역할)

역할	역할정의
공공기관 관리자	**공공기관 운영 및 관리자 역할** – 공공기관 업무특성 및 분류체계 관리 – 공공기관 기관정보, 소속기관, 부서, 사용자 관리, 권한관리
부서 배정 처리자	**신고 및 신청(보상) 접수 부서 배정 역할** – 신고 및 신청(보상) 처리부서 배정 – 신고 타기관 이송 처리
담당자 배정 처리자	**신고 및 신청(보상) 담당자 배정 역할** – 신고 및 신청(보상) 담당자 배정 – 신고 및 신청(보상) 부서 재배정 요청 – 신고 타기관 이송 처리
신고 조사 담당자	**신고 조사부서 사건조사 업무 담당자 역할** – 신고 : 조사처리 / 사후관리
보포상 담당자	**보상 조사부서 사건조사 업무 담당자 역할** – 보포상 : 보상처리, 포상처리, 포상추천
조사업무 관리자	**조사부서 관리자 역할** – 신고 조사결과, 사후관리, 타기관이송, 처리기한연장, 보상처리, 포상처리 – 보포상 : 보상처리, 포상처리, 포상추천

03 신고 접수·처리·사후관리 등 주요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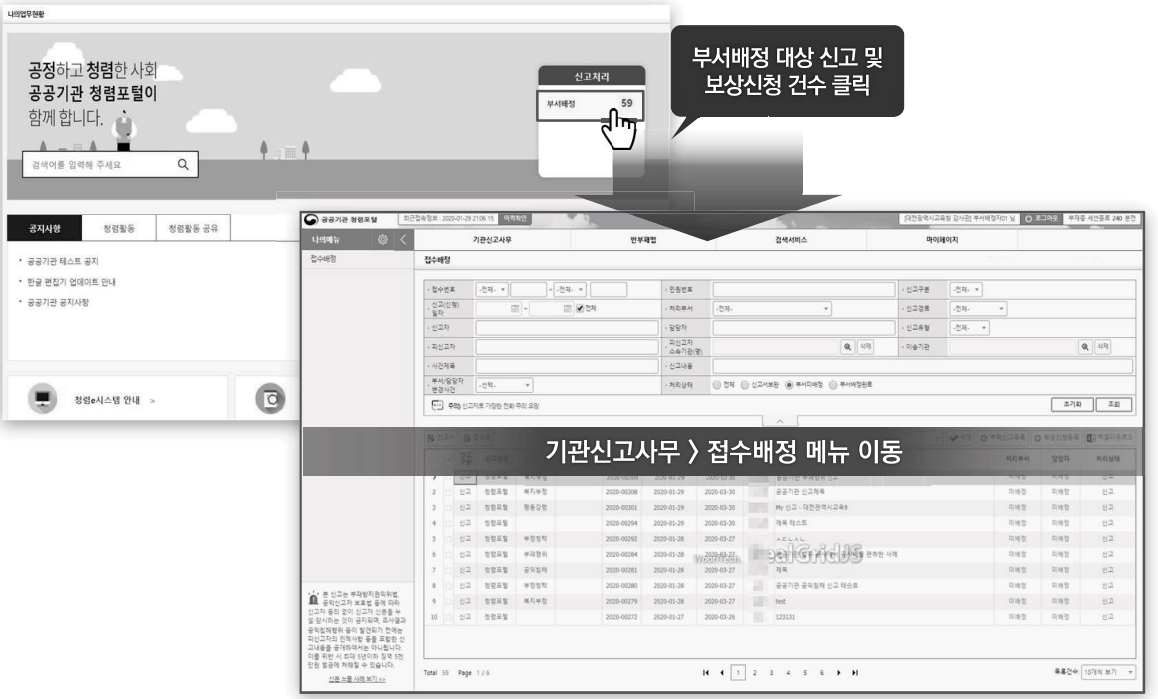
CHAPTER 3
표준 신고관리시스템

3-2 나의업무 현황 조회 및 메뉴

03 신고 접수·처리·사후관리 등 주요 기능

CHAPTER 3
표준 신고관리시스템

3-3 부서배정 업무 (업무현황 조회)



03 신고 접수·처리·사후관리 등 주요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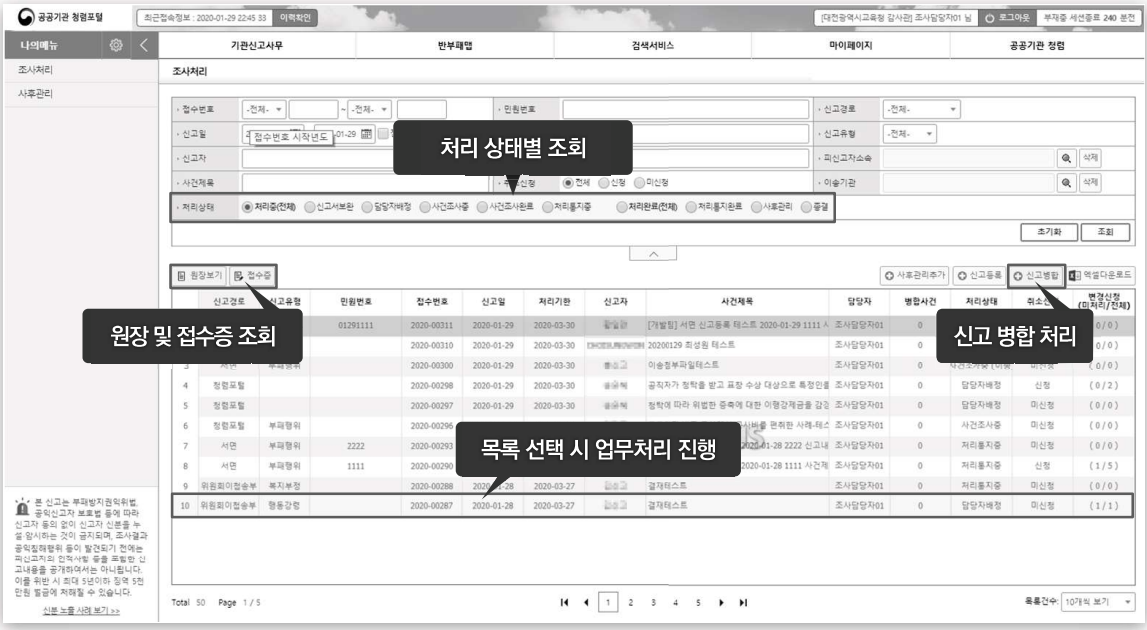
CHAPTER 3
표준 신고관리시스템

3-3 부서배정 업무 (접수배정 목록화면 구성)

03 신고 접수·처리·사후관리 등 주요 기능

CHAPTER 3
표준 신고관리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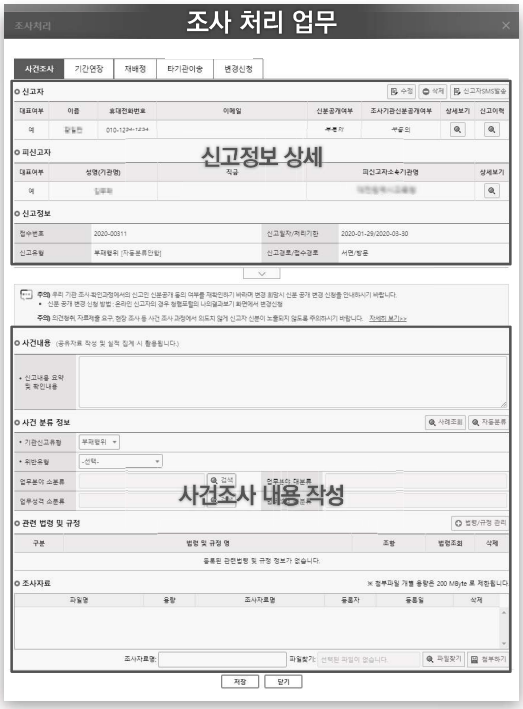
3-3 조사 담당자 업무 (조사처리 목록화면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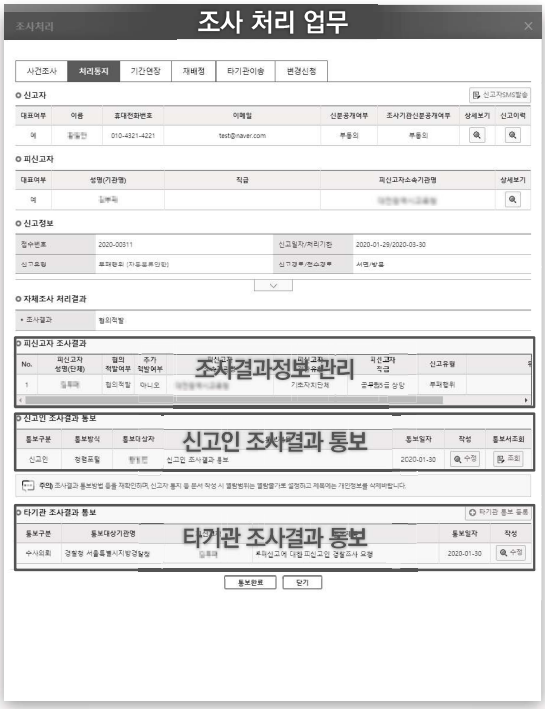


03 신고 접수·처리·사후관리 등 주요 기능

CHAPTER 3
표준 신고관리시스템

3-4 조사 담당자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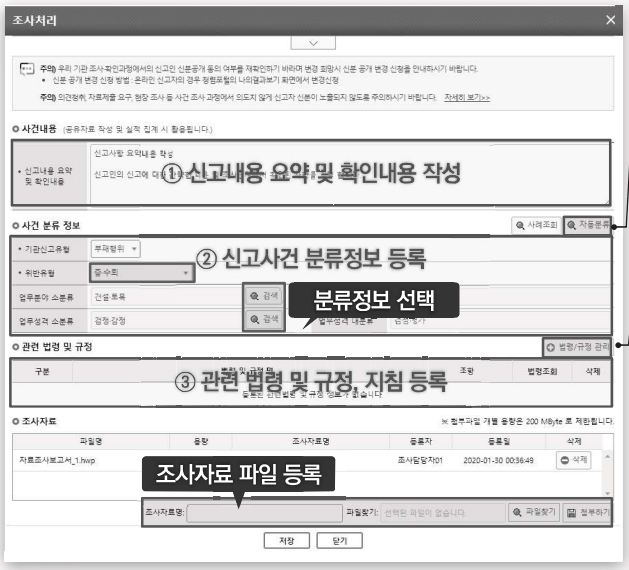


46

03 신고 접수·처리·사후관리 등 주요 기능

CHAPTER 3
표준 신고관리시스템

3-5 조사 담당자 업무 (조사처리-사건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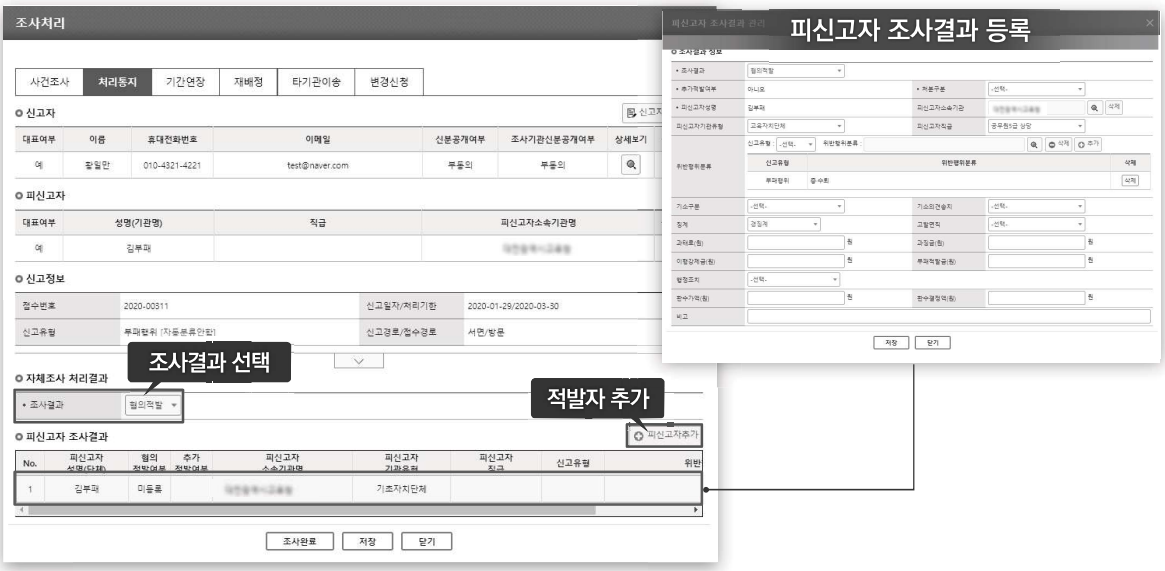


47

03 신고 접수·처리·사후관리 등 주요 기능

CHAPTER 3
표준 신고관리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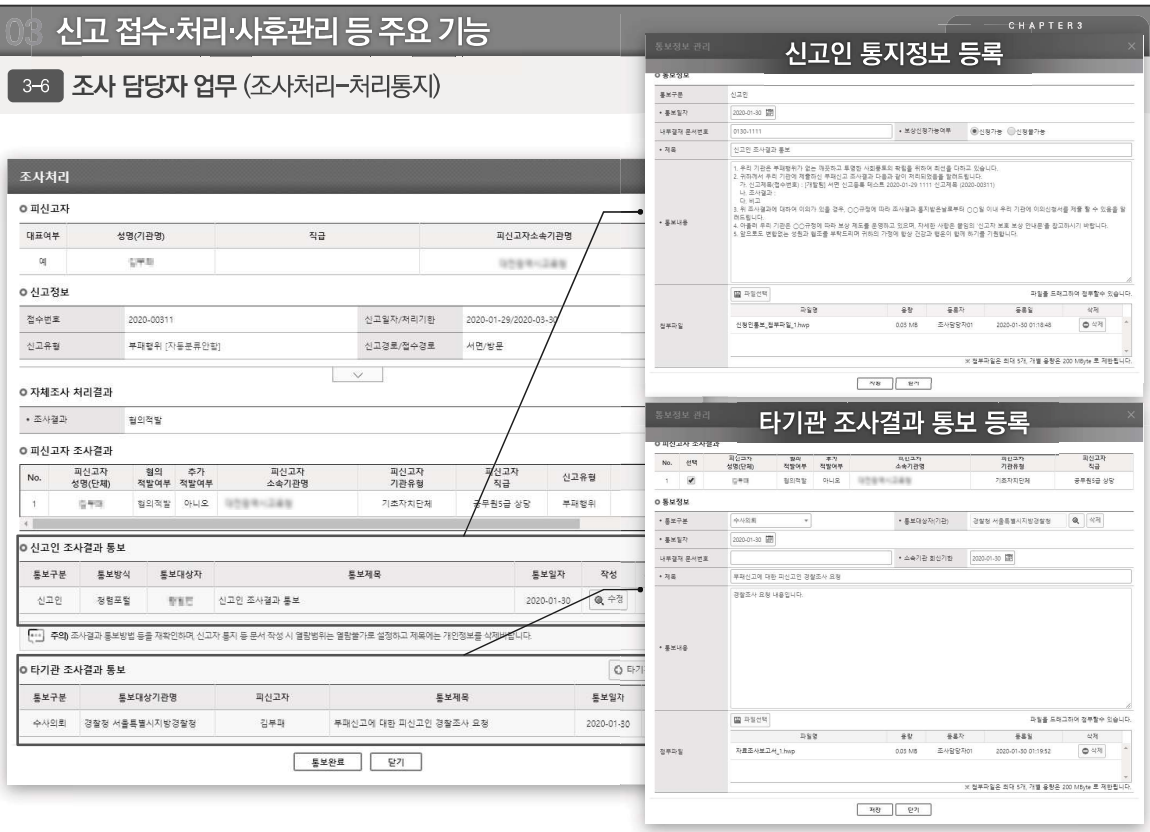
3-6 조사 담당자 업무 (조사처리-처리통지)



03 신고 접수·처리·사후관리 등 주요 기능

CHAPTER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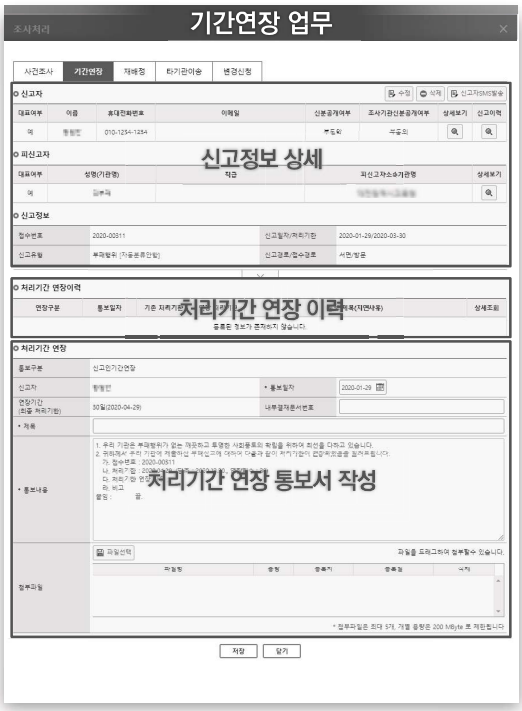
3-6 조사 담당자 업무 (조사처리-처리통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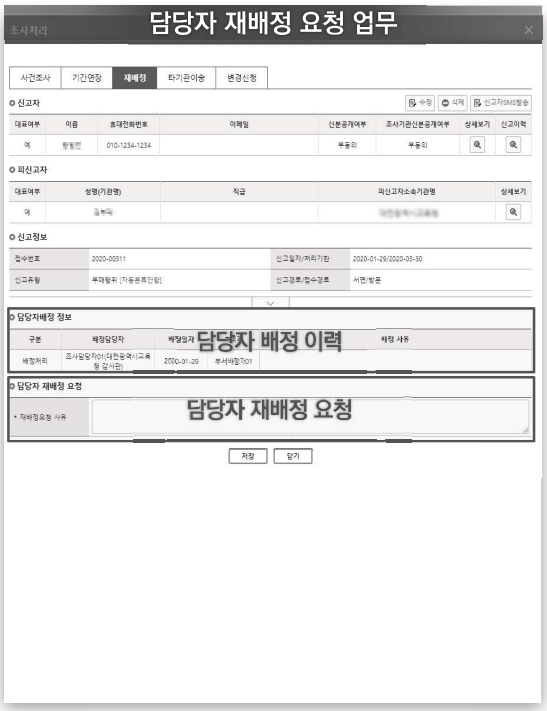


03 신고 접수·처리·사후관리 등 주요 기능

CHAPTER 3
표준 신고관리시스템

3-7 조사 담당자 업무 (기간연장, 담당자 재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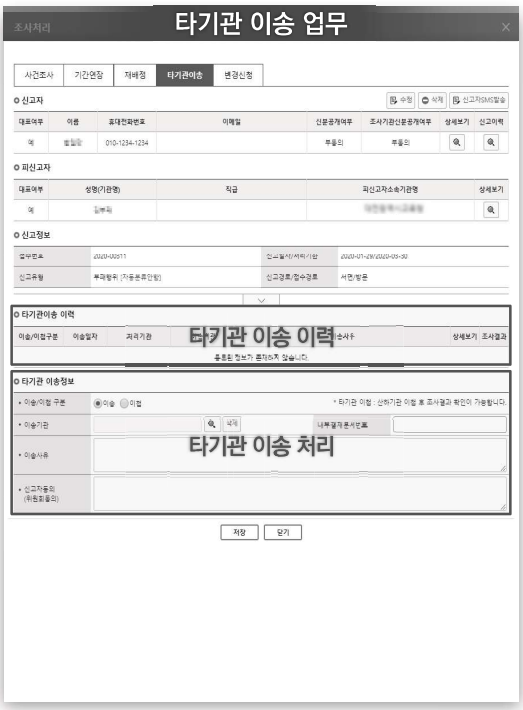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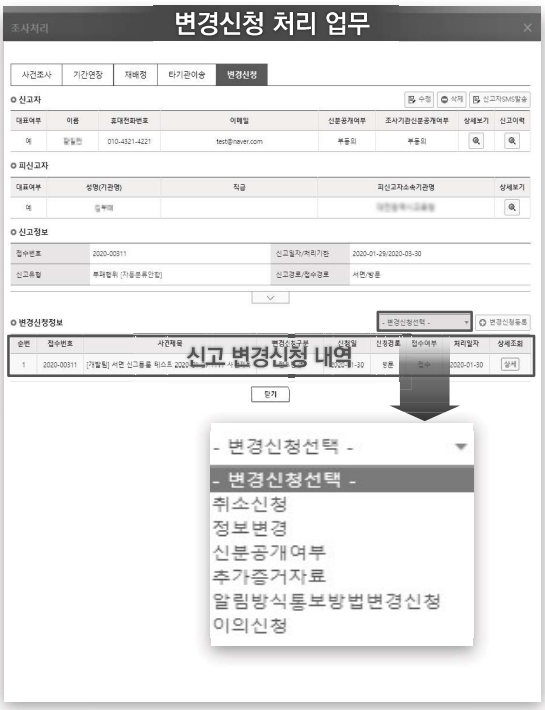
50

03 신고 접수·처리·사후관리 등 주요 기능

CHAPTER 3
표준 신고관리시스템

3-8 조사 담당자 업무 (타기관 이송, 변경신청 처리)





51

03 신고 접수·처리·사후관리 등 주요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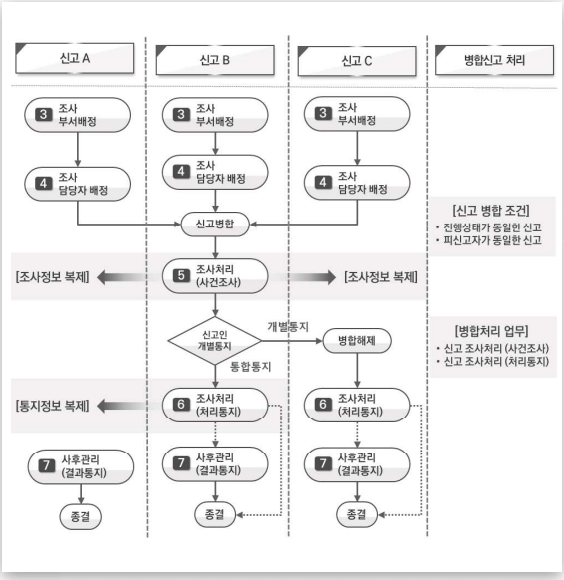
CHAPTER 3
표준 신고관리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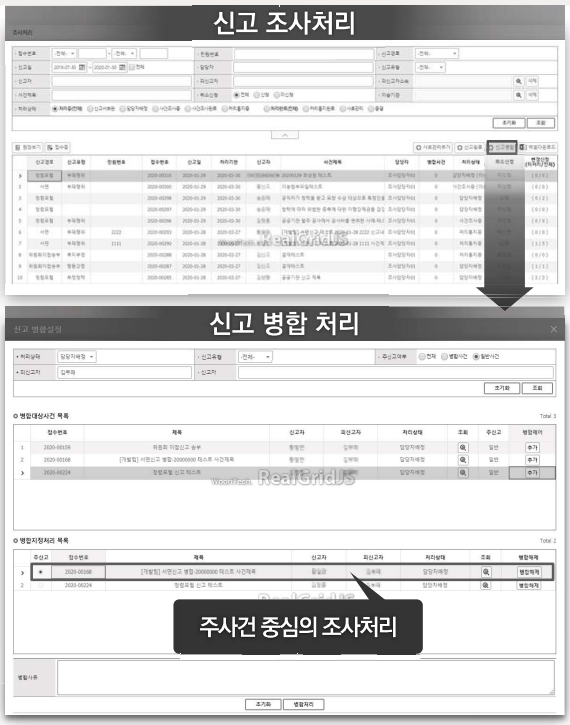
3-9 조사 담당자 업무 (변경신청이 접수된 경우)

03 신고 접수·처리·사후관리 등 주요 기능

CHAPTER 3
표준 신고관리시스템

3-10 공공기관 신고 병합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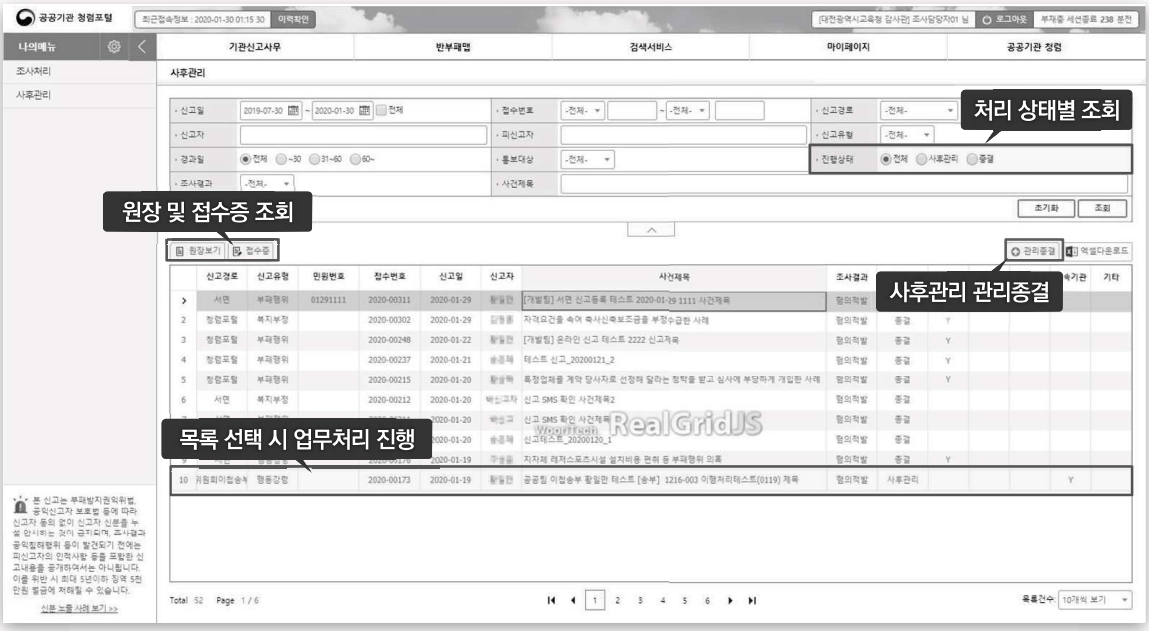




03 신고 접수·처리·사후관리 등 주요 기능

CHAPTER 3
표준 신고관리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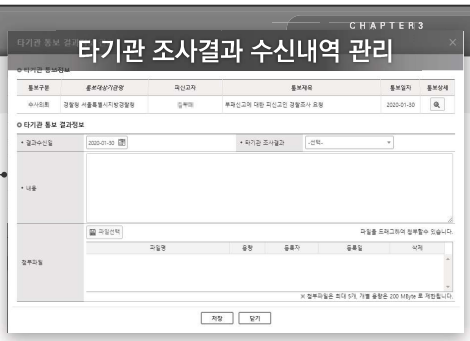
3-11 조사 담당자 업무 (사후관리 목록화면)



03 신고 접수·처리·사후관리 등 주요 기능

CHAPTER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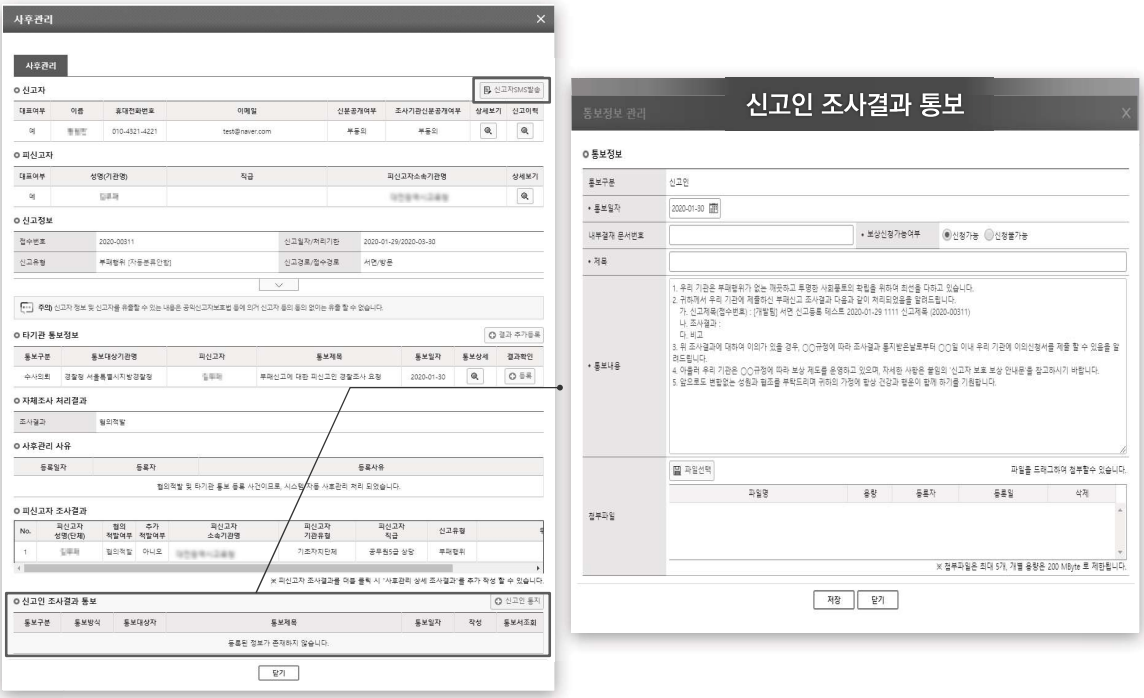
3-12 조사 담당자 업무 (사후관리 화면)



03 신고 접수·처리·사후관리 등 주요 기능

CHAPTER 3
표준 신고관리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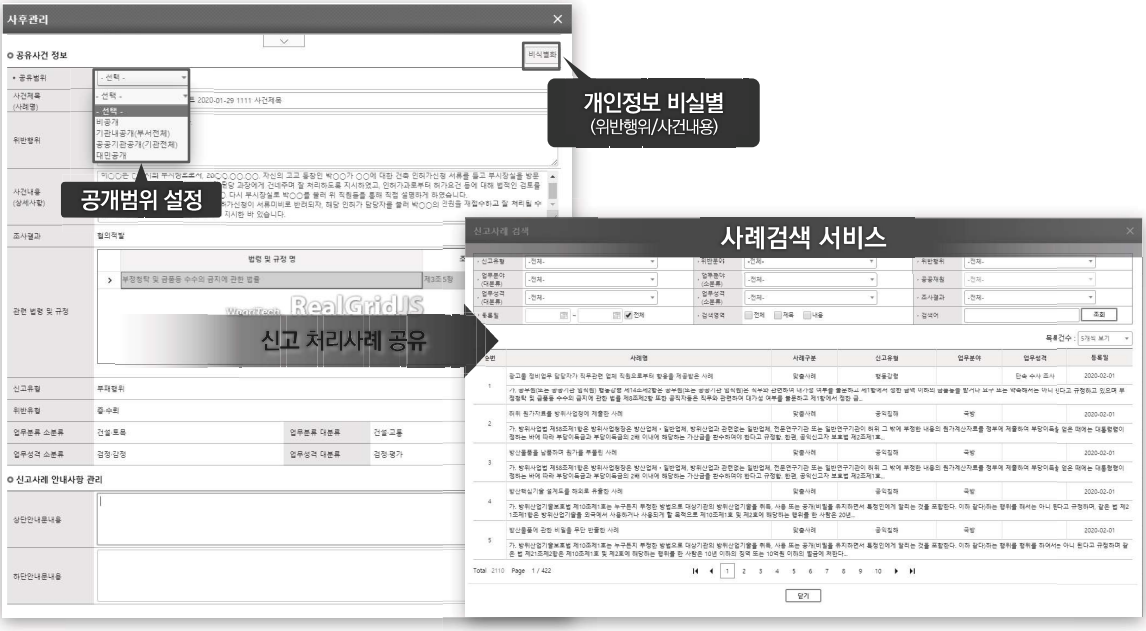
3-12 조사 담당자 업무 (사후관리 화면 #2)



03 신고 접수·처리·사후관리 등 주요 기능

CHAPTER 3
표준 신고관리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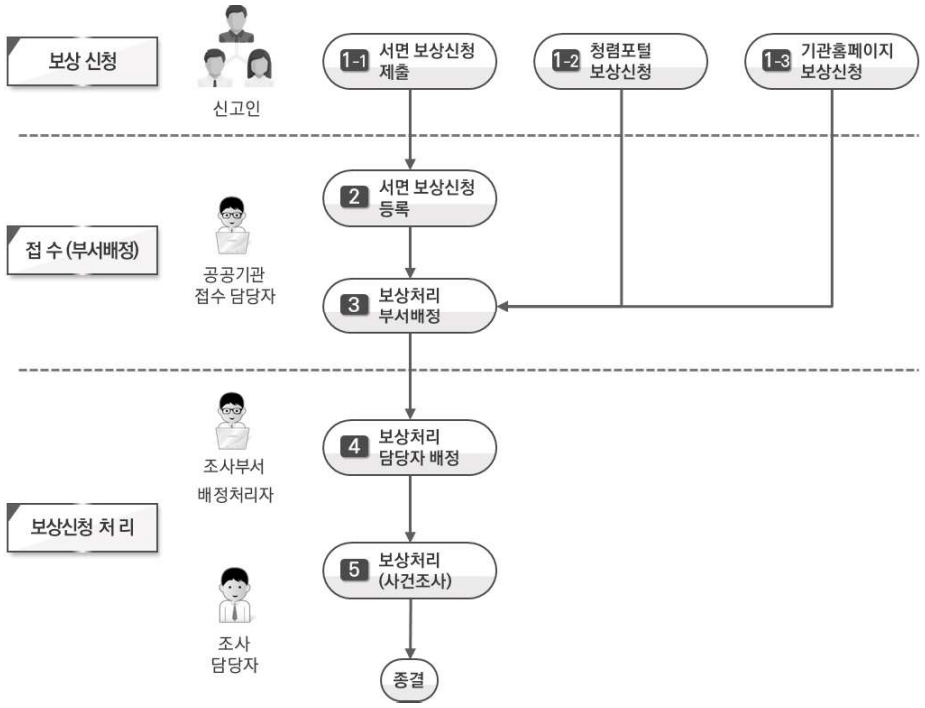
3-13 조사 담당자 업무 (사후관리–공유설정)



03 신고 접수·처리·사후관리 등 주요 기능

CHAPTER 3
표준 신고관리시스템

3-14 보상신청 처리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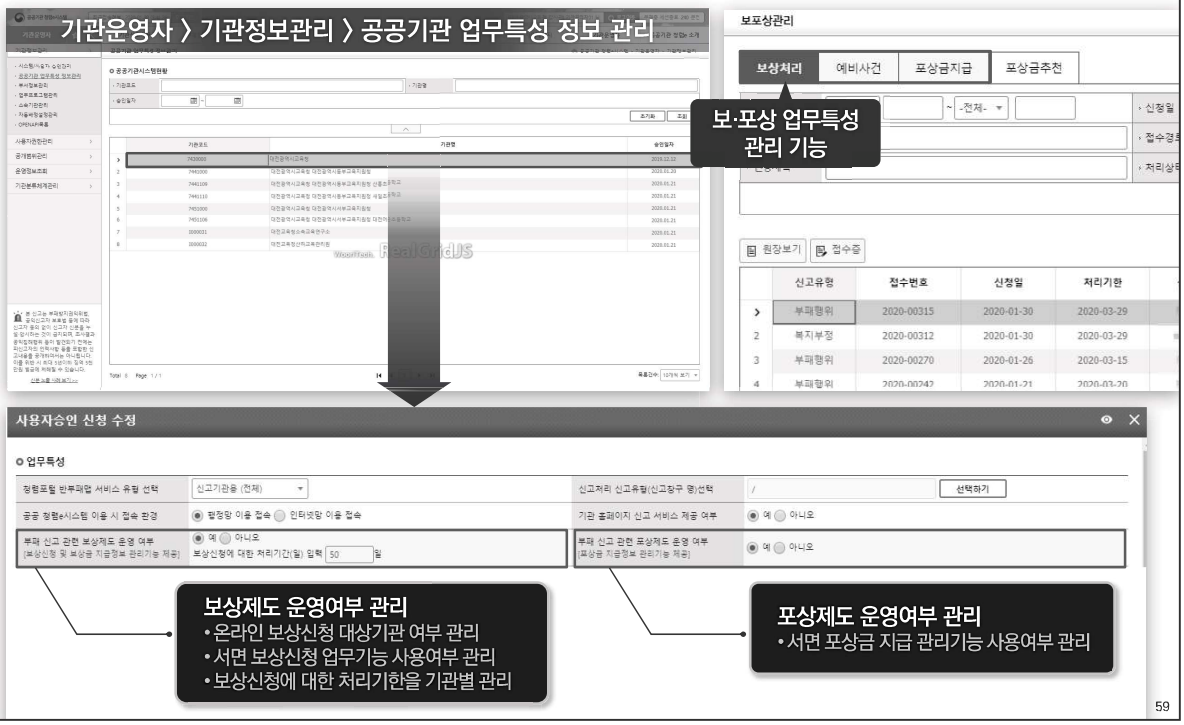


58

03 신고 접수·처리·사후관리 등 주요 기능

CHAPTER 3
표준 신고관리시스템

3-15 공공기관 특성정보 관리 (보·포상 업무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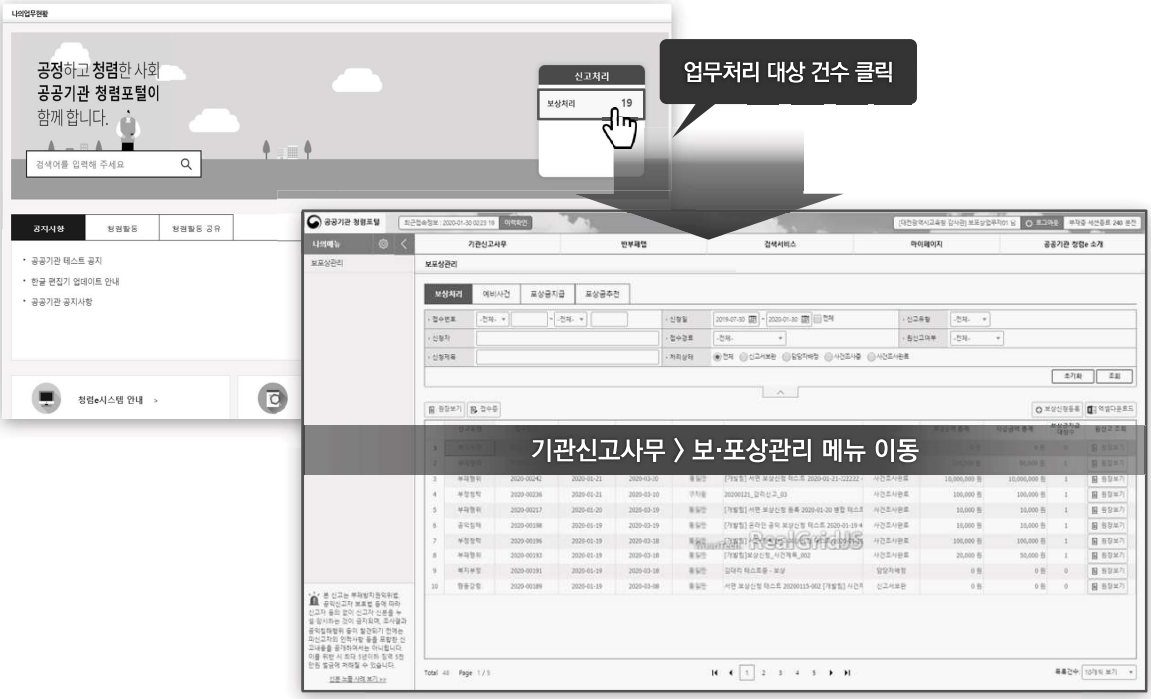


59

03 신고 접수·처리·사후관리 등 주요 기능

CHAPTER 3
표준 신고관리시스템

3-16 보·포상 담당자 업무 (업무현황 조회)



03 신고 접수·처리·사후관리 등 주요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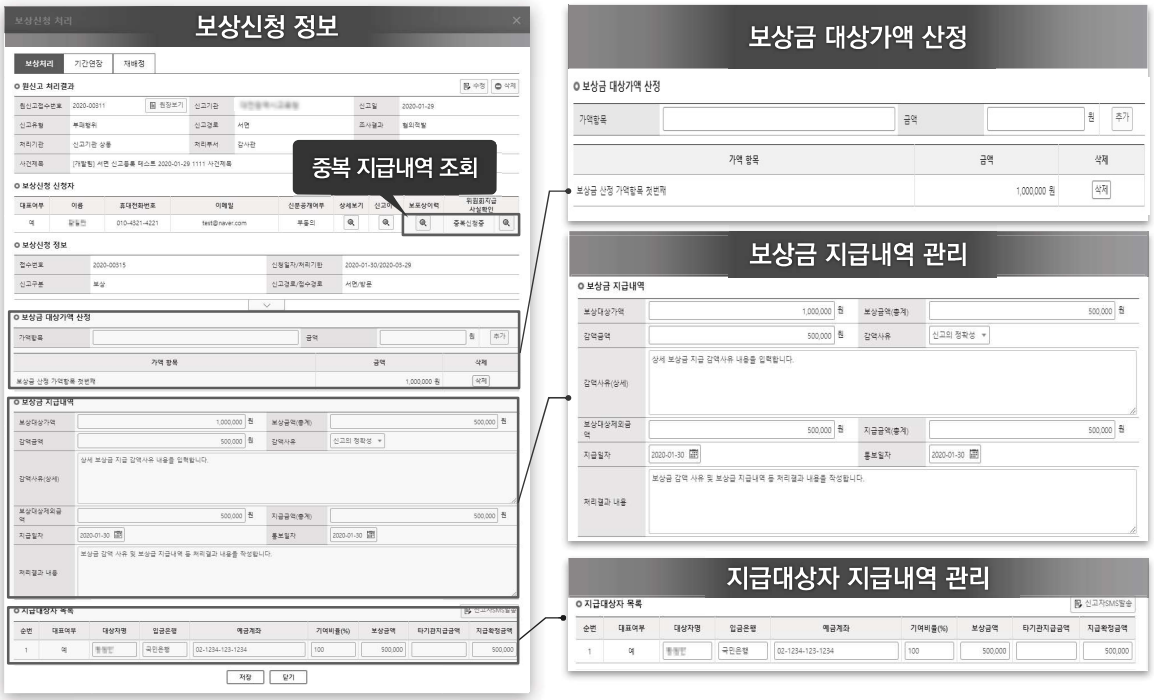
CHAPTER 3
표준 신고관리시스템

3-17 보·포상 담당자 업무 (보상처리 메뉴 화면)

03 신고 접수·처리·사후관리 등 주요 기능

CHAPTER 3
표준 신고관리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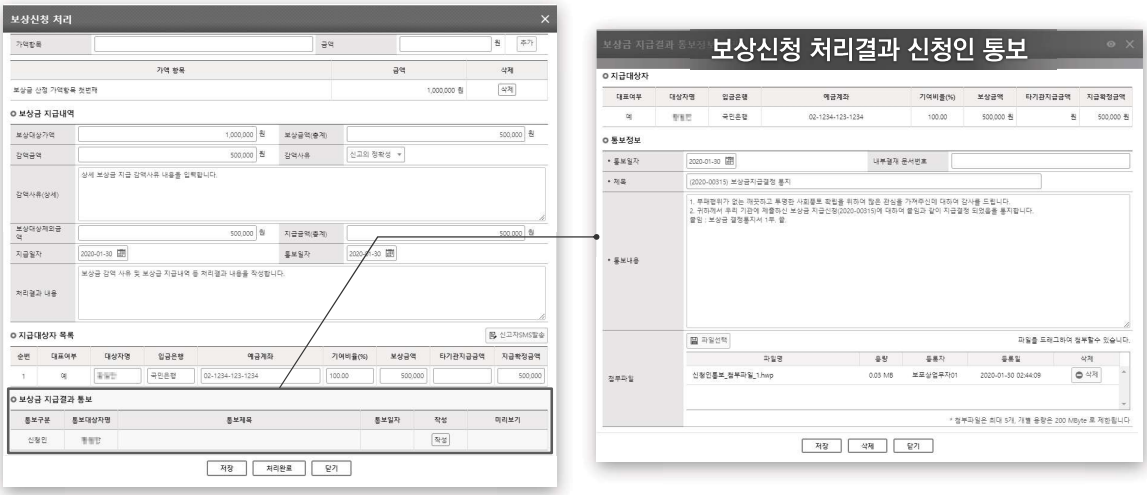
3-18 보·포상 담당자 업무 (보상처리 화면)



03 신고 접수·처리·사후관리 등 주요 기능

CHAPTER 3
표준 신고관리시스템

3-18 보·포상 담당자 업무 (보상처리 화면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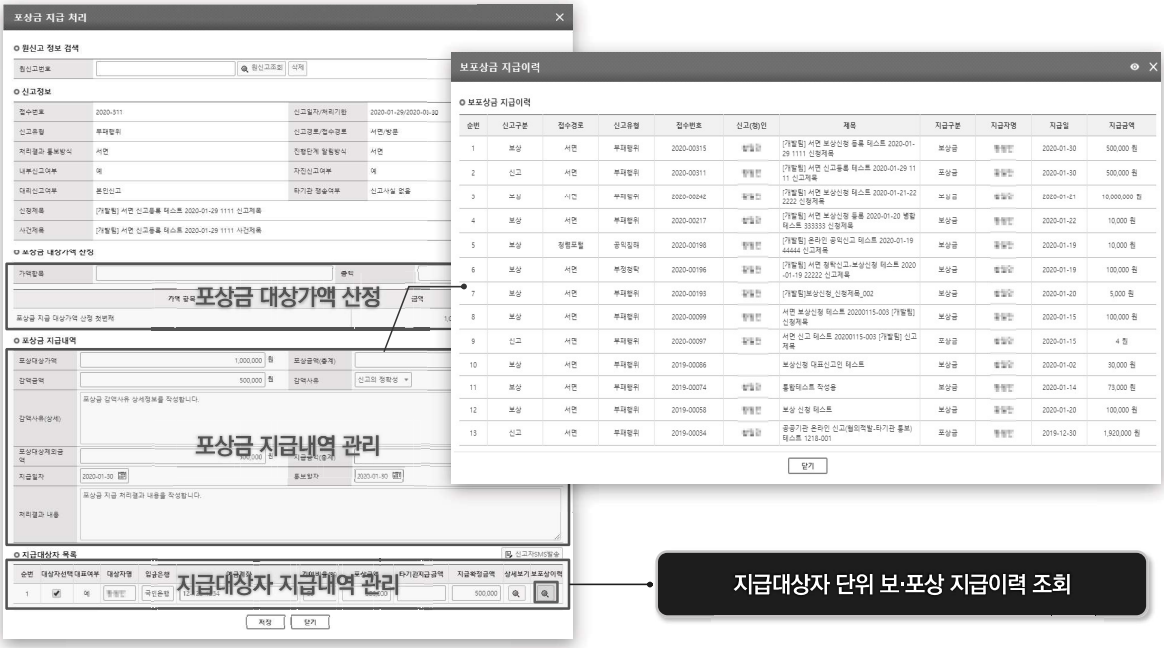


03 신고 접수·처리·사후관리 등 주요 기능

3-19 보·포상 담당자 업무 (포상금 지급 처리)

03 신고 접수·처리·사후관리 등 주요 기능

3-20 보·포상 담당자 업무 (포상금 지급 처리)



03 신고 접수·처리·사후관리 등 주요 기능

CHAPTER 3
표준 신고관리시스템

3-21 보·포상 담당자 업무 (위원회 포상금 추천 처리)

03 신고 접수·처리·사후관리 등 주요 기능

CHAPTER 3
표준 신고관리시스템

3-22 단계별 알림 설정

03 신고 접수·처리·사후관리 등 주요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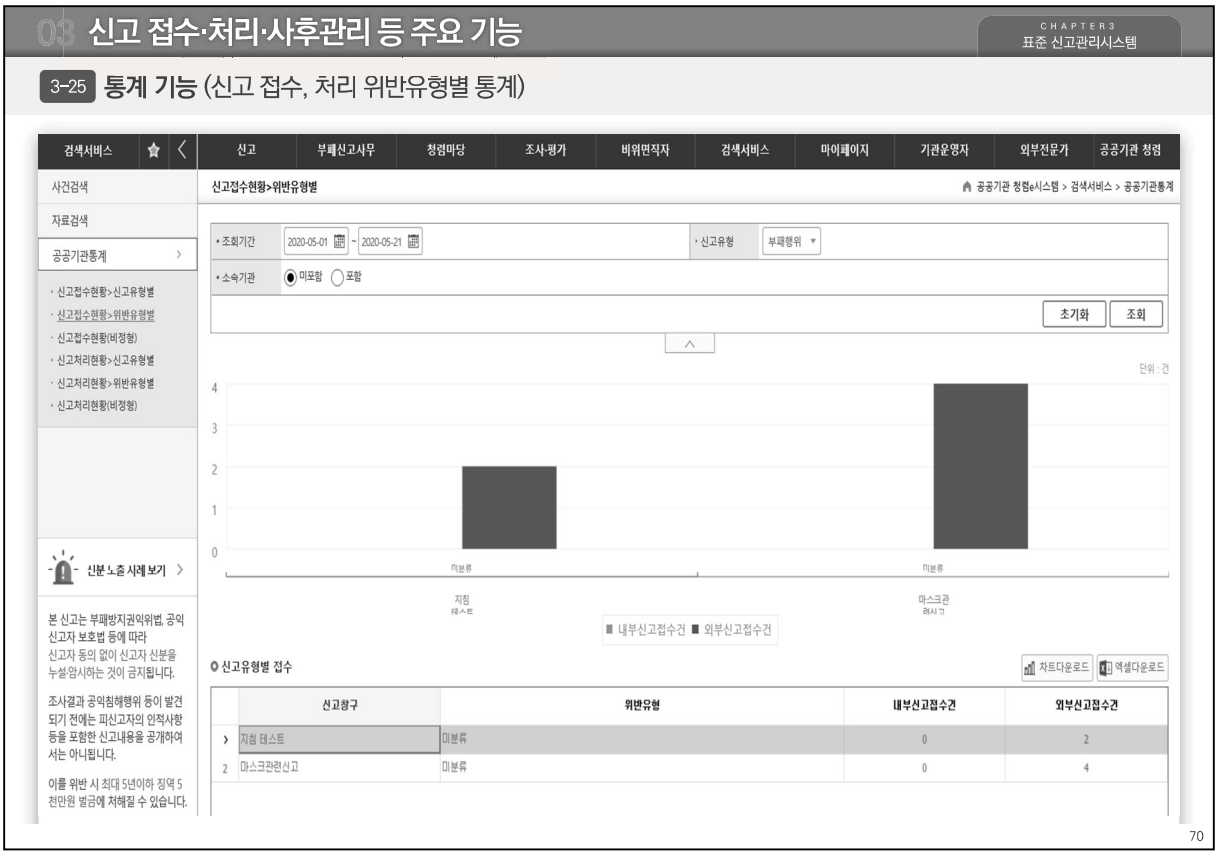
CHAPTER 3
표준 신고관리시스템

3-23 검색 기능

03 신고 접수·처리·사후관리 등 주요 기능

CHAPTER 3
표준 신고관리시스템

3-24 자료 검색 (신고 사건의 첨부파일의 내용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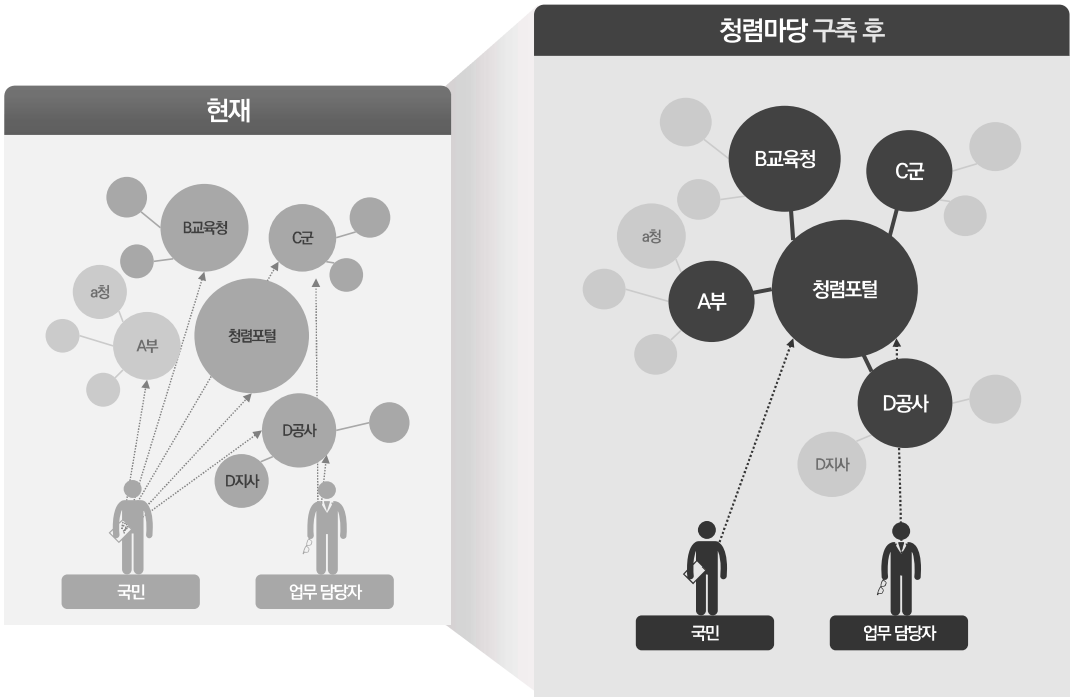

03 신고 접수·처리·사후관리 등 주요 기능
CHAPTER 3
표준 신고관리시스템
3-25 통계 기능 (신고 접수, 처리 위반유형별 통계)
검색서비스
신고
부패신고사무
청렴마당
조사·평가
비위면직자
검색서비스
마이페이지
기관운영자
외부전문가
공공기관 청렴
사건검색
자료검색
공공기관통계
· 신고접수현황>신고유형별
· 신고접수현황>위반유형별
· 신고접수현황(비정형)
· 신고처리현황>신고유형별
· 신고처리현황>위반유형별
· 신고처리현황(비정형)
신고접수현황>위반유형별
공공기관 청렴e시스템 > 검색서비스 > 공공기관통계
조회기간
2020-05-01
2020-05-21
신고유형
부패행위
소속기관
미포함
포함
초기화
조회
단위 : 건
미분류
지침 테스트
마스크관련신고
내부신고접수건
외부신고접수건
신고유형별 접수
차트다운로드
엑셀다운로드
신고항구
위반유형
내부신고접수건
외부신고접수건
지침 테스트
미분류
0
2
마스크관련신고
미분류
0
4
신분 노출 사례 보기
본 신고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라 신고자 동의 없이 신고자 신분을 누설함시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 등이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이를 위반 시 최대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70

Clean potal
공공기관
청렴포털 2단계
국민권익위원회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4 청렴마당

04 청렴마당

CHAPTER 4 청렴마당

4-1 청렴마당 구축 배경



72

04 청렴마당

CHAPTER 4 청렴마당

4-2 사용자별 역할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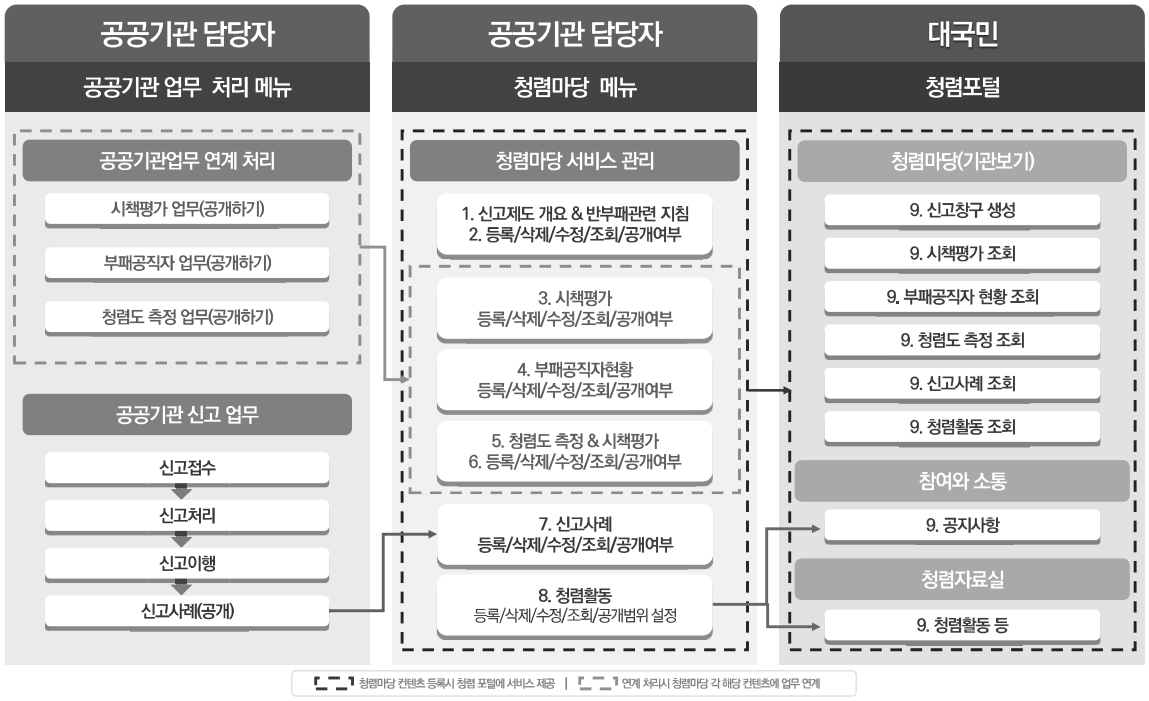
업무 담당자	공통 역할 설명	담당자 별 역할 설명
청렴마당 관리자	청렴마당 청렴활동, 신고사례	청렴마당 전체관리
공공기관관리자		
신고사건관련담당자	청렴마당 청렴활동, 신고사례	청렴마당 신고제도개요, 관련지침 관리
부패공직자행동강령 담당자	청렴마당 청렴활동, 신고사례	청렴마당 부패공직자행동강령 관리
비위면직자 담당자	청렴마당 청렴활동, 신고사례	청렴마당 부패공직자현황 관리
보포상 담당자	청렴마당 청렴활동, 신고사례	청렴마당 신고제도개요, 관련지침 관리
시책평가담당자	청렴마당 청렴활동, 신고사례	청렴마당 시책평가 관리
청렴도평가담당자	청렴마당 청렴활동, 신고사례	청렴마당 청렴도평가 관리
기타(전체) 담당자	청렴마당 청렴활동, 신고사례	

73

04 청렴마당

CHAPTER 4 청렴마당

4-3 청렴마당 서비스 구성



74

04 청렴마당

CHAPTER 4 청렴마당

4-4 청렴마당 서비스 관리

75

04 청렴마당

CHAPTER 4 청렴마당

4-5 청렴포털 청렴마당 서비스

76

04 청렴마당

CHAPTER 4 청렴마당

4-5 청렴포털 청렴마당 서비스 – 기관검색

77

04 청렴마당

CHAPTER 4 청렴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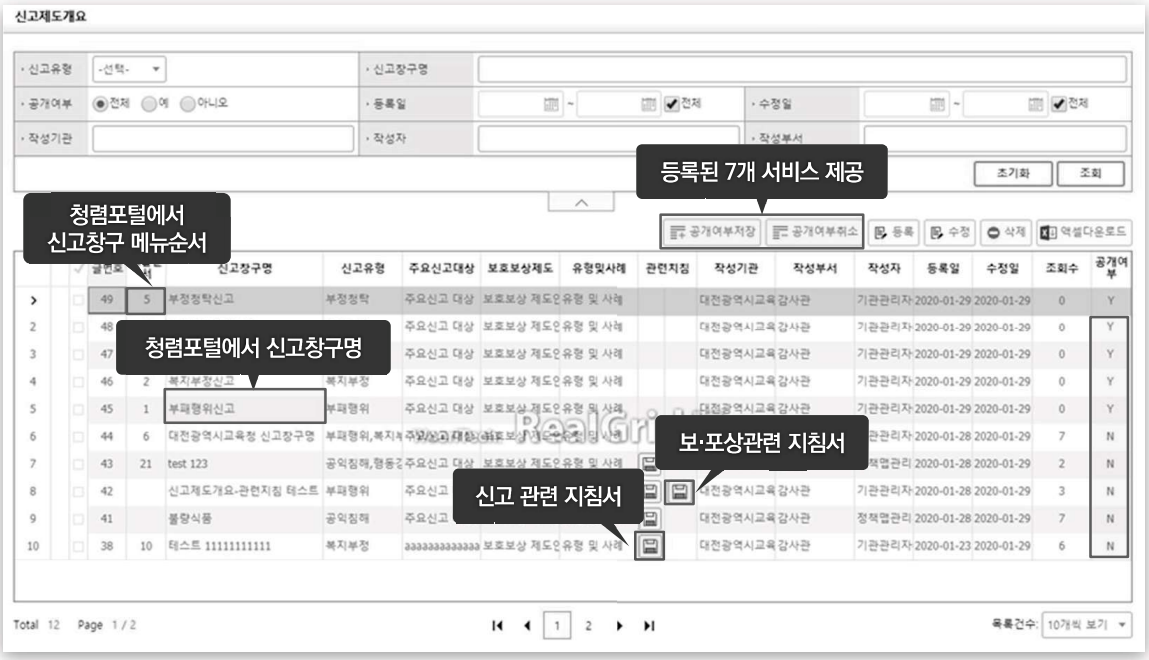
4-5 청렴포털 청렴마당 서비스 제공 화면

78

04 청렴마당

CHAPTER 4 청렴마당

4-6 청렴포털 청렴마당 서비스 제공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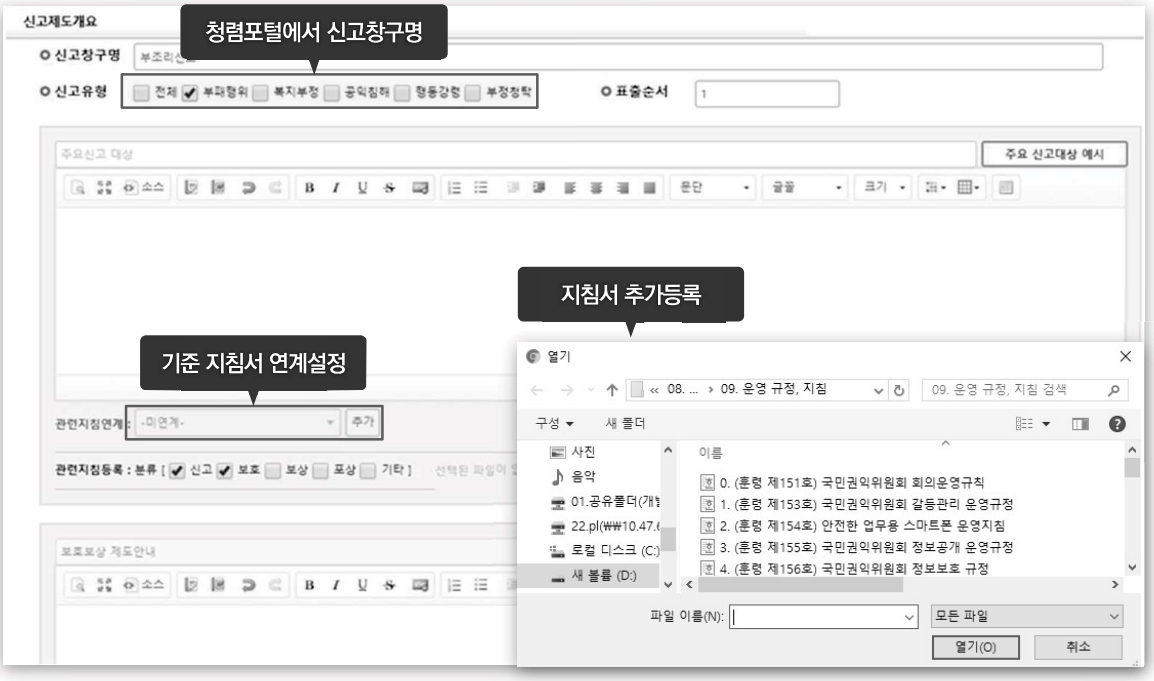


79

04 청렴마당

CHAPTER 4 청렴마당

4-6 신고제도개요 (등록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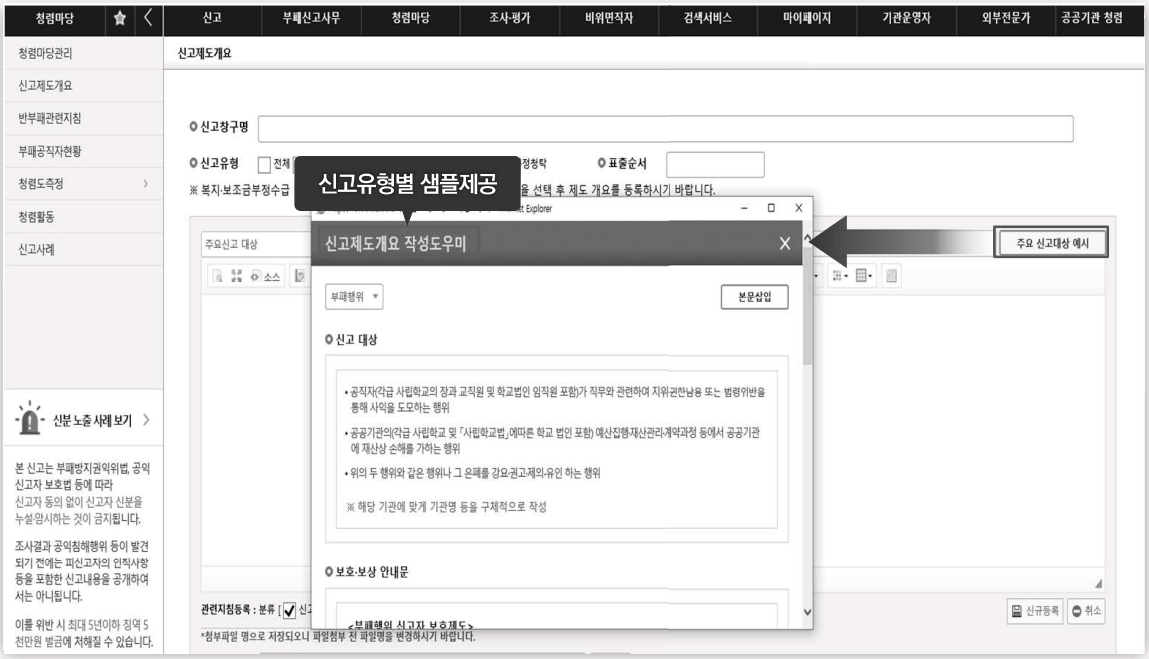


80

04 청렴마당

CHAPTER 4 청렴마당

4-6 신고제도개요 (등록2/2)



81

04 청렴마당

CHAPTER 4 청렴마당

4-7 반부패관련지침 (목록)

82

04 청렴마당

CHAPTER 4 청렴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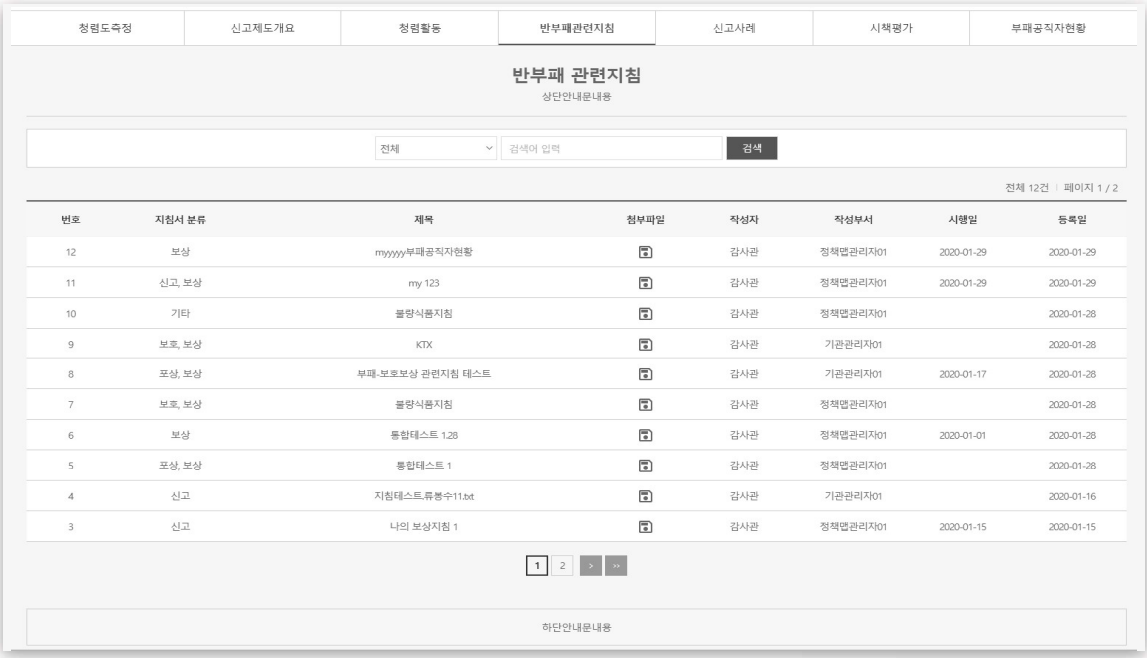
4-7 반부패관련지침 (수정)

83

04 청렴마당

CHAPTER 4
청렴마당

4-7 반부패관련지침 청렴포털 공개화면



04 청렴마당

CHAPTER 4
청렴마당

4-8 청렴도 측정 (공개하기)

04 청렴마당

CHAPTER 4 청렴마당

4-8 청렴도 측정 (등록)

86

04 청렴마당

CHAPTER 4 청렴마당

4-8 청렴도 측정 (등록)

87

04 청렴마당

CHAPTER 4
청렴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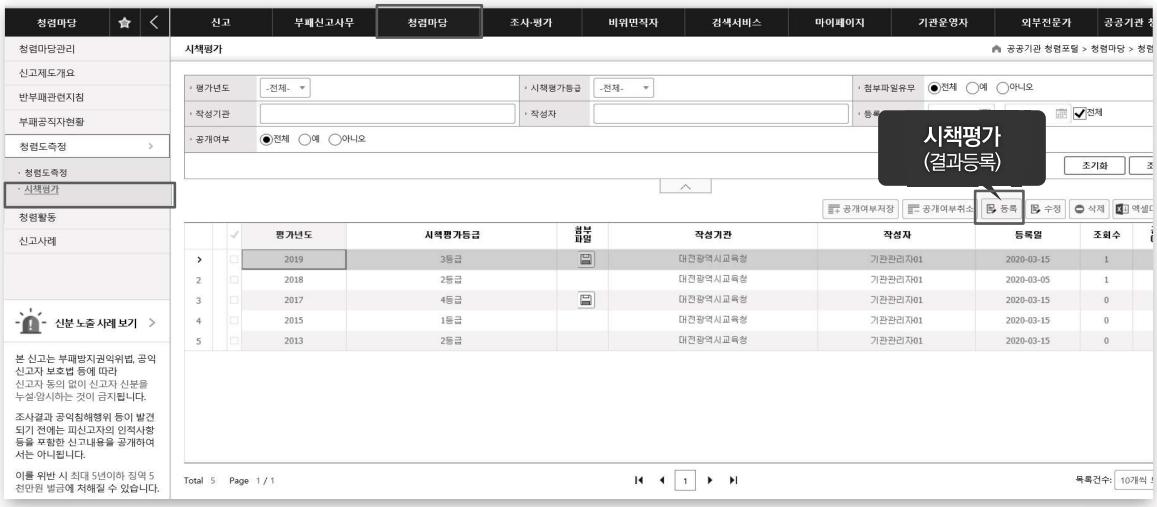
4-8 청렴도측정 청렴포털 공개화면

88

04 청렴마당

CHAPTER 4
청렴마당

4-9 시책평가 (공개하기)



89

04 청렴마당

CHAPTER 4 청렴마당

4-9 시책평가 청렴포털 공개화면

04 청렴마당

CHAPTER 4 청렴마당

4-10 부패공직자 (공개하기)

04 청렴마당

CHAPTER 4
청렴마당

4-10 부패공직자현황 청렴포털 공개화면

04 청렴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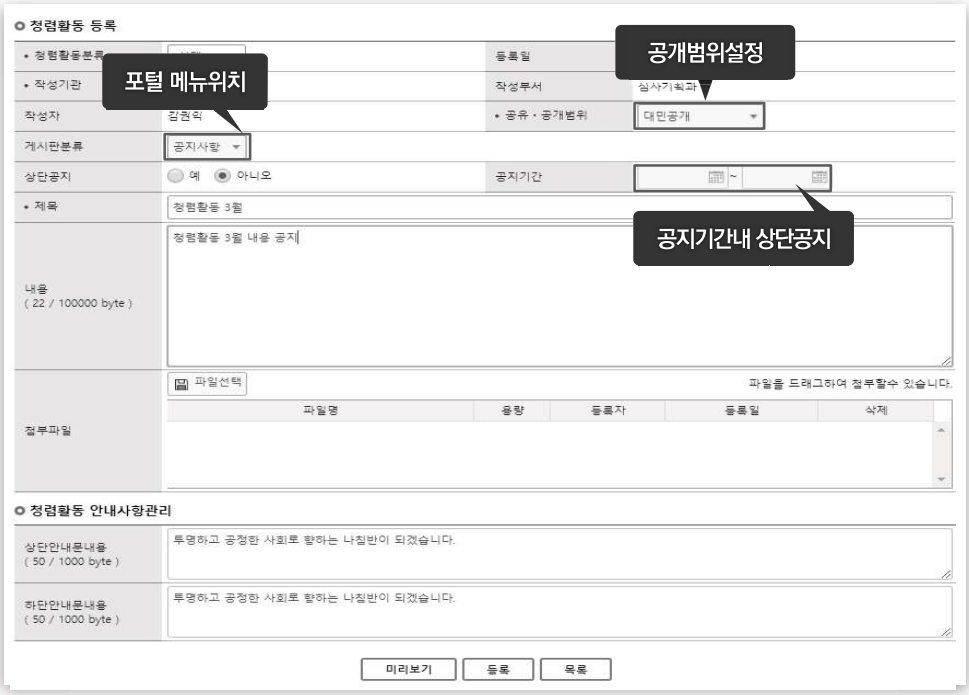
CHAPTER 4
청렴마당

4-11 청렴활동 (등록)

04 청렴마당

CHAPTER 4
청렴마당

4-11 청렴활동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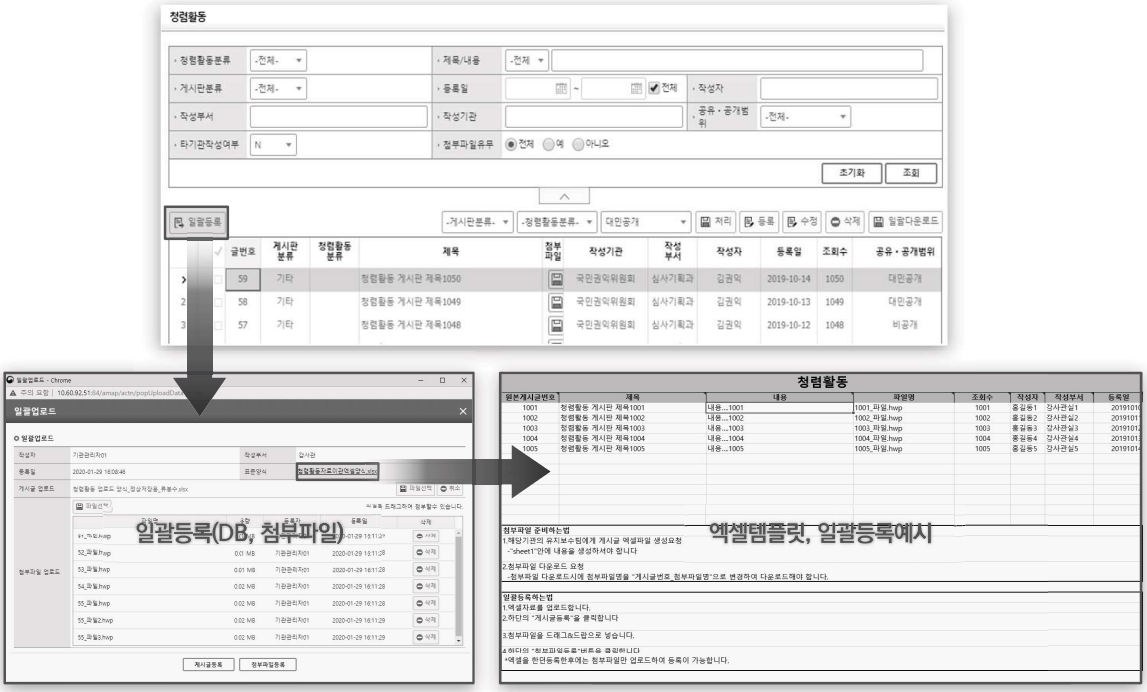


94

04 청렴마당

CHAPTER 4
청렴마당

4-11 청렴활동 (일괄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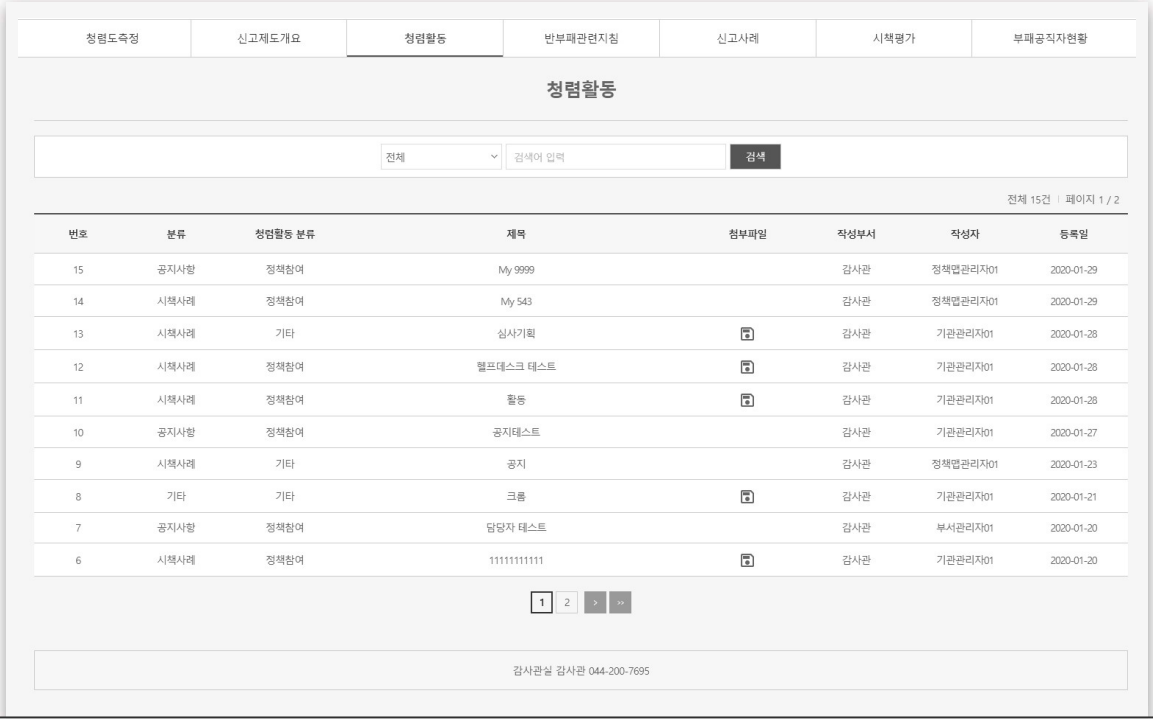


95

04 청렴마당

CHAPTER 4
청렴마당

4-11 청렴활동 청렴포털 공개화면



96

04 청렴마당

CHAPTER 4
청렴마당

4-12 부패유형별 사례 (목록)

97

04 청렴마당

CHAPTER 4
청렴마당

4-12 부패유형별 사례 (목록)

98

04 청렴마당

CHAPTER 4
청렴마당

4-13 부패유형별 사례 청렴포털 공개화면

99

04 청렴마당

CHAPTER 4
청렴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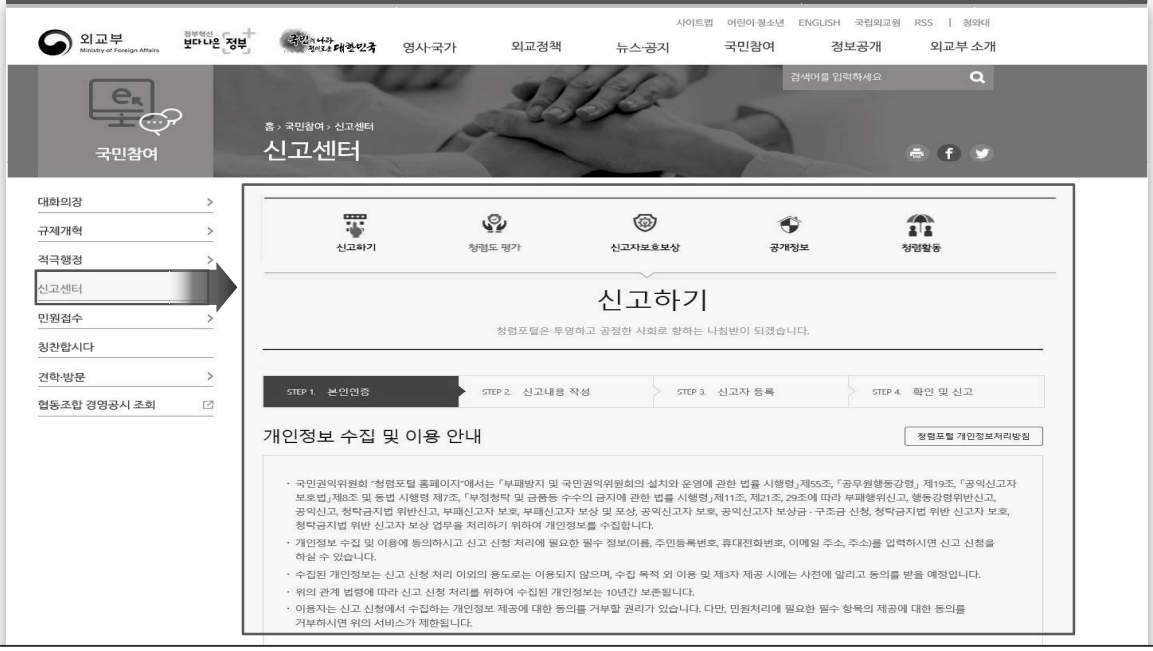
4-13 청렴자료실에 청렴활동 등 공개 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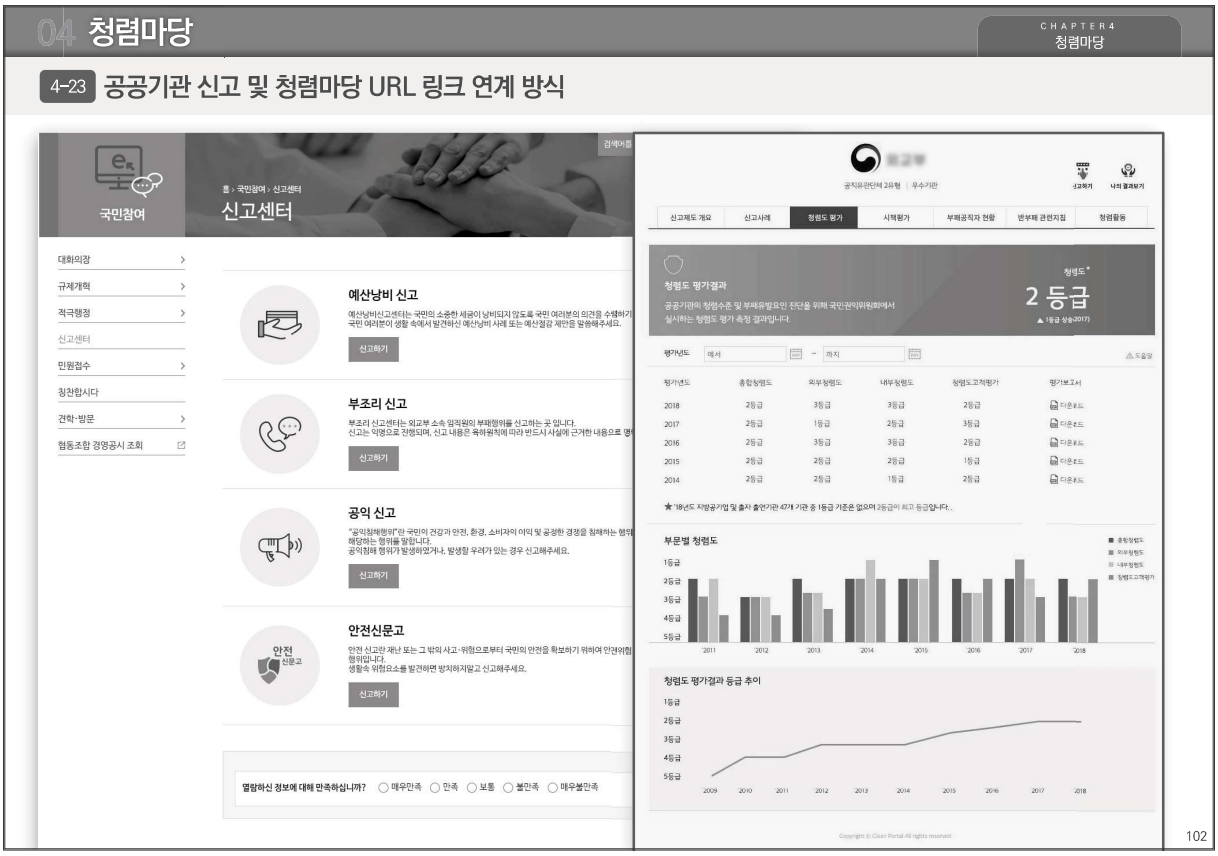
04 청렴마당

CHAPTER 4
청렴마당

4-22 공공기관 신고 및 청렴마당 iFrame 연계 방식

청렴포털의 청렴마당 서비스를 기관의 홈페이지 내에 적용하여 기관내 관련정보 제공 및 신고접수 처리




04 청렴마당
CHAPTER 4
청렴마당
4-23 공공기관 신고 및 청렴마당 URL 링크 연계 방식
국민참여
신고센터
예산낭비 신고
부조리 신고
공익 신고
안전신문고
청렴도 평가결과
2 등급
부문별 청렴도
청렴도 평가결과 등급 추이
102

MEMO

MEMO

MEMO

MEMO